

2012 KINU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조정아 조한범
권오국 배기찬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도서출판 오름(02-585-9123)
인쇄처: 도서출판 오름(<http://www.orum.co.kr>)

ISBN 978-89-8479-680-5 93340
가 격 30,000원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조정아·조한범·권오국·배기찬

목차

- 국문요약 / 10
- Abstract / 16
- 약어정리 / 18

I. 서론 / 19

II.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 27

1. 세계사 흐름과 코리아 • 29
2. 동아시아 구조와 코리아 위치 • 51
3. 분단 폐해 • 64
4. 한국의 통일노력 • 70

III.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이해관계 / 93

1. 미국의 인식과 이해관계 • 95
2. 중국의 인식과 이해관계 • 113
3. 일본의 인식과 이해관계 • 131
4. 러시아의 인식과 이해관계 • 146

IV. 재외동포사회와 통일문제 / 167

1. 재외동포사회 이주의 의미 • 169
2. 한민족공동체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 193
3. 재외동포 통일의식 • 204

V.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 역할 / 215

1. 일반적 역할 • 217
2. 지역별 역할 • 229

VI. 결론 / 245

- 참고문헌 / 251

표 목차

II

〈표 II-1〉 국군 및 UN군 인명 피해	/ 66
〈표 II-2〉 민간인 인명 피해	/ 67
〈표 II-3〉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 71
〈표 II-4〉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구성과 내용	/ 73
〈표 II-5〉 UN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비교	/ 74

III

〈표 III-1〉 미국의 핵심이익과 대전략 유형	/ 96
〈표 III-2〉 북한미사일 개발경과	/ 99
〈표 III-3〉 한·미·중·일·러의 주요지표	/ 106
〈표 III-4〉 한·일·중 3국 관련 주요 통계 (2011년 추정치)	/ 108
〈표 III-5〉 연도별 참전병력 현황	/ 109
〈표 III-6〉 한국-UN 주요관계 연표	/ 111
〈표 III-7〉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 114
〈표 III-8〉 중국 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 115

〈표 III-9〉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	/ 116
〈표 III-10〉 한·중·일의 10대 수출대상국 (2010)	/ 122
〈표 III-11〉 한·중·일 투자금액 및 건수	/ 123
〈표 III-12〉 한·중·일 교역액 및 투자누계	/ 124
〈표 III-13〉 한·중·일 인적교류 현황	/ 129
〈표 III-14〉 한류의 부침 및 진화과정	/ 130
〈표 III-15〉 국력의 세 가지 형태	/ 130
〈표 III-16〉 미·일의 공통전략 목표	/ 132
〈표 III-17〉 미·일 전략체널	/ 133
〈표 III-18〉 '방위대강 2010'의 안보목표와 전략	/ 135
〈표 III-19〉 일본 민주당의 주요 외교 공약	/ 136
〈표 III-20〉 북·일 수교교섭 일지	/ 138
〈표 III-21〉 한국의 미·일 10대 수출입품목 (2010)	/ 140
〈표 III-22〉 한·일 투자금액 및 건수	/ 141
〈표 III-23〉 한국의 미·중·일 수출입 규모	/ 144
〈표 III-24〉 한·미·일·중 무역의존도	/ 145

〈표 III-25〉 주변국 군사력 현황	/ 147
〈표 III-26〉 3대 세습체제 비교	/ 149
〈표 III-27〉 비군사적 경제원조 (1945~1960)	/ 151
〈표 III-28〉 원유수입량과 소비국가 (2010)	/ 154
〈표 III-29〉 러시아 에너지자원 수출액 및 GDP 비중	/ 155
〈표 III-30〉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의존도	/ 155
〈표 III-31〉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국가 (2010)	/ 156
〈표 III-32〉 극동러시아 주요무역 거래국 (2012년 1~6월)	/ 157

IV

〈표 IV-1〉 재외동포 현황	/ 170
〈표 IV-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 171
〈표 IV-3〉 지역별 재외동포분포와 이민증감 추이	/ 172
〈표 IV-4〉 고려인 이주역사	/ 190
〈표 IV-5〉 GDP Per Capita (PPP, USD)	/ 196

〈표 IV-6〉 OECD 회원국 외국인수 증가율	/ 198
〈표 IV-7〉 한국은 다문화사회인가	/ 200
〈표 IV-8〉 재미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	/ 203
〈표 IV-9〉 분단의 피해, 민족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205
〈표 IV-10〉 한반도 통일의 전망	/ 206
〈표 IV-11〉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서 남북통일의 역할/	206
〈표 IV-12〉 통일되지 않은 이유	/ 207
〈표 IV-13〉 분단 극복을 위한 과제	/ 208
〈표 IV-14〉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09
〈표 IV-15〉 통일관련 여론조사 결과	/ 211

V

〈표 V-1〉 한국경제인 통일의식 조사결과	/ 221
〈표 V-2〉 남북교역액 현황	/ 225
〈표 V-3〉 통일준비를 위한 필요조치	/ 227

이 책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외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있는 726만 우리 재외동포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지속하며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반도가 세계사의 흐름 및 동아시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왔는지를 살펴본 후, 분단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해보았다.

2천여 년에 걸쳐 형성된 동아시아의 기본 세력구조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구조이다. 이 두 세력이 직접 맞부딪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1860년 러시아가 두만강을 경계로 한민족과 국경을 접한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주요 4강, 중국과 러시아(소련), 그리고 일본과 영국(미국)이 솔밭처럼 자리 잡고 각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4강 정립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오랫동안 중국문명권에 인접해 있었고, 일제 식민화 이후 일본문명권의 일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해방과 더불어 분단되어 남측은 자유세계에, 북측은 공산세계에 편입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유일 초강국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간의 패권경쟁 한가운데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에 투영된 것이 오늘날의 분단상태이다. 6.25 전쟁은 남과 북의 내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중국과 미국의 전쟁, 나아가 공산세계와 자유세계의 세계전쟁 수준으로 비화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민족은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고, 분단의 골도 깊어졌다. 그러나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는데, 1960년대까지는 북한체제를 부인하면서 통일을 추구했고, 그 이후에는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선평화 후통일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민족의 통일은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한반도 차원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문제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동아시아에는 오랫동안 ‘제국적 질서’가 존재해왔고 오늘도 그러한 질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후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전개되어 왔다. 유럽통합 및 동남아국가연합 등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이 그 실례다.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는 한민족의 문제를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은 이러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왔다. 아시아의 주요 4개국인 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코리안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촉매자라 할 수 있다. 결국 한민족의 독특한 지리적·역사적 위치로 인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운명이 한민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 한반도 통일이 이들 국가에게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미국에게 있어 북한의 비정상적 체제 소멸과 한국주도의 통일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위협 뿐 아니라, 시리아 - 파키스탄 - 이란 - 북한을 연결하는 WMD 확산커넥션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양대 축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급격한 세력변화를 조절할 수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또 하나의 경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가치·이념을 공유하는 한국주도의 통일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가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 및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 국민에게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아주 다양하다. 첫째, 지역 충돌에 연루될 우려가 없으므로 중국이 진정으로 화평발전 할 수 있다. 둘째, 한·일 등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회피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정치·경제의 잠재력은 증가하겠지만 주변 국가의 힘의 배분상 강대국 효과는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중국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국의 성격이 지역평화 유지군으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중국의 국

가안전에 유리한 것이다.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이 50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통일한국이 성립되면 난민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일본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음을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가이며, 현재 남북 간의 과열된 군비경쟁도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가로 변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북한지역 재건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한·일 간의 사회·문화적 신뢰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면 일본이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탈아주의(脫亞主義)로부터 입아주의(立亞主義)로 회귀하여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장한 것도 지지받을 수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군사강국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국제적 안전보장 과정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업기반시설인 수풍수력발전소의 복구, 성진제강소와 김책제철소, 남포제련소, 흥남비료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등과 같은 대형 공업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거의 소련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지역의 자본과 기술, 북한지역의 노동력 등의 결합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사업 및 가스관은 한·중·일 3국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 및 인적왕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

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영향도 현저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였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 및 통일의식 실태조사를 평가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75개국에 726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에 거주한다. 재외한인사회 형성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서 드러나듯이 재외동포들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수난을 남북 주민과 더불어 공유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변 4국 거주 재외동포의 대다수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며, 통일이 재외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아직도 적대적 대립과 불신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분단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남북 상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며,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열강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국에 흩어져 있는 재미·재중·재일·재러 동포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국적자로서의 위치와 남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남북한과의 접촉가능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남한 또는 북한의 단기적 국가 이익이나 정치적 명분보다는 한민족공동체의 장기적인 번영이라는 중립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양자관계를 매개하며 중재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거주국 및 남북한 사회 내에서의 인맥과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와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방북과 인적 접촉은 북한 사회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개혁개방을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내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통일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

통일교육, 해외동포, 해외한인 통일교육, 통일교육 콘텐츠, 해외한인,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한반도 문제 역사, 재외동포 역할, 코리안 디아스포라



Abstract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for Overseas Koreans

This book aims to foster a sense of unification within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 unified Korea is a country which would include not only citizen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the 7,260,000 overseas Korean who is also called ‘Korean diaspora.’ It is important for the overseas Korean to keep their identity as Korean and to keep close relations with their motherland.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an irrelevant issue to them. Also, an important point of this issue is that the unification process should be peaceful.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bring the prosper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This book is composed of four major parts. The first part will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the course of world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East Asia. Then it will go over the negative effects of

Korea's division, which is also called 'Korea discount,' as well as Korean's efforts to overcome the aftermath of division. The second part will analyze how the four neighboring countrie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perceiv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n it will suggest ways in which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uld benefit these neighboring countries, with the separate considerations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 third part will provide historical accounts of how the Korean overseas communities were formed, and then evaluate their sense of Korean ethnic identity. This part will also provide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their awaren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issue. The last part will propose a conjecture on the expected responsibilities of overseas Korean in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owards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Overseas Korea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four Nations, Benefits of Unified Korea, Korean Diaspora



-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CIS**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GATT**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DP**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SS**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KO** 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 SCO**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TCR** 중국횡단철도 (Trans-China Railway)
- TKR** 한반도중단철도 (Trans-Korean Railway)
- TPP**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
-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 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H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I

서론





I

서론

우리나라 통계청은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 36분을 기점으로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4,000만 명을 넘어선 지 29년 만의 일이다.¹⁾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20-50 클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7개국 뿐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신생국가 중에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무역규모 1조 달러라는 경제기적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 1인당 GDP는 3만 5,656달러, 2050년에는 6만 1,863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²⁾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자원·인력이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통일한국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한 전망도 있다. 2011년 10월 미국의 세계전략가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중 패권경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행한 지역이 될 수 있으니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³⁾ 게다가 동아시아에서는 일·중 세력경쟁과 영토분쟁·역사분쟁·군비경쟁도 예상된다. 통일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우리의 국가대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이지만, 동시에 주변 4국(미·중·일·러)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평화를 위한 현상유지 문제이자, 통일을 위한 현상타파의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반도에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 조류와 사회주의 대국 중국과 수령제공산국가 북한의 존재로 인한 동아시아 차원의 냉전적 관성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2011.12.17)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경쟁이 본격화되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가야 할 길이다. 평화통일은 한 단계 높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21세기 민족국가의 생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평화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주변 국가의 도움과 해외동포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는 흔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통일한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미뤄 짐작해 왔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사고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에 안주해 왔던 것

이다.

그러나 여러 면을 두루 살펴볼 때, 주변 국가들이 통일한국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평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주변 국가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진로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더라도 기아와 독재의 고통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구심을 해소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지구 상의 모든 국가는 국가이익으로 정의되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 4국(미·중·일·러)의 국가이익,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이익과 양립가능(compatibility)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주변 4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어렵거니와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이들 국가와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s)’을 찾을 것인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를 부드럽게 푸는 데는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조사한 ‘2011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에서⁴⁾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2배나 높았고, 우리정부로 하여금 재외동포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726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세계 곳곳을 누리고 있다. 해당 거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발언권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사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도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 재건 과정에서 도로·항만 등 인프라건설 사업은 활성화 될 것이고, 약 6,718조 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은 북한특수를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 가장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남북한 주민들과 재외동포사회가 포함된 한민족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n Railway: TKR)와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 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의 연결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절된 대륙과 해양이 만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날이 오면, 청년들은 실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누빌 수 있을 것이며, 그 옛날 선조들이 해양과 대륙을 오가며 느꼈던 진취적인 기상 또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문명사의 비약적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아시아 제국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그러한 갈등의 장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동양이 이룩한 찬란한 정신문명 또한 해양과 초원,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11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금년은 제2차 연도사업으로 해외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하였다. 재외동포 1세대로부터 3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한국어가 잊혀져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영상과 PPT는 가급적 쉽고 흥미있게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반도가 세계사의 흐름 및 동아시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왔는지를 살펴본 후, 현대사 속의 분단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해보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 한반도 통일이 이들 국가에게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였고,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 및 통일의식 실태조사를 평가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국에 흩어져 있는 재미·재중·재일·재러 동포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비록 여러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많은 재외동포들이 애독하기를 전체 집필진을 대신하여 희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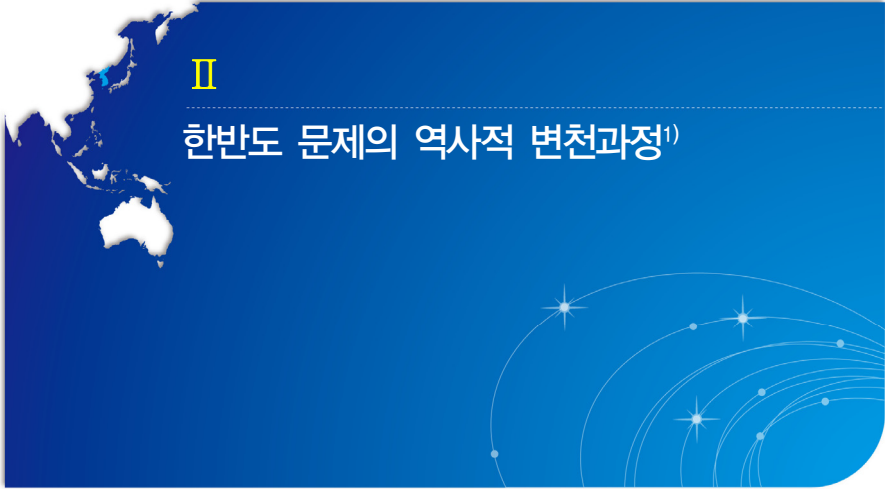
I
미주

- 1)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오는 2045년까지 33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해 2045년에 다시 4,000만 명 시대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2012년 6월 17일.
- 2)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The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참조.
- 3) 공세적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1년 10월 7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한국은 냉전 시기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과 가깝고 중국이 해·공군력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해 무역으로 연명하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4) 재외동포재단, 『2011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11) 참조.

II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II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¹⁾

1. 세계사 흐름과 코리아



가. 근대 이전 시기

(1) 중국의 시대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공간은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와 만주지역, 그리고 그 부속도서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북서쪽에는 아시아대륙이 있고, 그곳에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근대 이전까지 각축하고 교류하며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19세기 이전까지 우리 민족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황하유역에서 발원한 하(夏), 은(殷), 주(周), 춘추전국(春秋戰國), 진(秦),

한(漢)으로 이어지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농업혁명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성취했다. 농업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과 뛰어난 문화, 광대한 영역으로 확장된 정치체제와 철제 무기를 통한 강력한 정복전쟁은 진·한 시대에 이르러 동아시아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국을 탄생시켰다.

한 제국에 이르러 동아시아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중화체제(中華體制)라 하고, 중화체제의 핵심이데올로기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이다. 중화사상은 천하(세계)를 문명세계와 야만세계로 나누고, 도전을 불허하는 문명국가 중국이 야만국가인 주변국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나아가 주변국을 지배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²⁾

국가와 민족, 심지어 개인 간의 평화적 대등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중화사상을 토대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인 중화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천자로 표현된 중국의 황제가 있다. 중화체제의 핵심은 황제를 중심으로 내신(內臣), 외신(外臣), 조공국, 인접한 적대국 등의 동심원적 구조를 형성하는 조공책봉(租貢冊封)의 국제관계이다. 이러한 계층적 국제관계는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고, 이후 정치·경제·문화적 능력이 첨가되어 중국 중심의 패권체제가 수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한 세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진·한 시대에는 북의 흉노를 중심으로 동의 조선 등이었고, 수·당 시대에는 북의 돌궐과 동의 고구려였으며, 송대에는 요·금·몽골이었고, 명대에는 일본·후금(청)이었다.

(2) 대륙의 두 세력과 코리아

유라시아대륙에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북부 초원지대에는 유목민족이, 남부 지역에는 농경민족이 생활하였다. 근대 이전 유목민족은 농경민족과 더불어 유라시아대륙을 반분(半分)했는데, 이들은 농경민족과 전혀 다른 생활양식과

기마술에 바탕을 둔 강력한 군사력으로 농경국가를 위협했다. 코리아는 이들 농경국가와 유목국가 두 세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리적으로나 문명적으로 그들의 중간에 위치했다.

한반도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은 만주지역을 주요 근거지로 하며, 문명적으로 중국과 친화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목국가인 흉노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고조선은 당시 패권국가인 한나라에 맞서 1년간 저항했으나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7세기 삼국시대에 이르러 당나라 중심의 세계질서 형성에 가장 크게 저항한 국가는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5세기에 중국과 구별된 독자연호를 사용하고 군주의 호칭을 ‘태왕(太王)’으로 상승시켜 고구려 나름의 세계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수(隋)·당(唐)에 대항하기 위해 유라시아대륙의 광대한 지역에 자리 잡은 유목국가인 돌궐과 우호관계를 맺기도 했다. 고구려는 7세기 초 세 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침공을 패퇴시켰다. 수나라에 이어 등장한 당나라의 태종이 돌궐을 격파하여 아시아대륙의 패권을 차지한 뒤 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고구려 땅에 9개의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의 핵심세력 2만 8천호를 당나라 본토로 이주시켰다.

고조선 이래 코리아의 국가목표는 세계 제일의 문명국이자 패권국인 중국을 배워서 따라잡는 것이었고,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당시의 보편문명이었던 중국문명을 흡수해 이른바 문명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고려는 통일신라의 백성과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이념과 혼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 고려가 직면한 두 세력은 당시 세계문명의 중심인 송나라와 ‘야만’의 일원인 거란의 요(遼), 여진의 금(金), 그리고 흉노를 이은 몽골이었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에 바탕을 둔 세력균형 정책이다. 992년 고려는 송(宋), 요(遼) 양국과 이중적 조공관계를 맺어 등거리 외교를 폈는데, 요가 고려를 침공하자 서회가 외교적 담판을 벌여 외교적 성과

를 거두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요가 침략하자 고려가 이를 격퇴함으로써 외교와 내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는 동아시아세계를 반분한 요와 송에게 일종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고려는 ‘고려청자’라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유럽까지 무역활동을 전개했으며, 중국과 비견될 정도로 높은 문명생활을 향유했다.

이로부터 꼭 500년이 뒤인 1600년대 초반에 여진은 후금이란 이름으로 다시 강대해졌고 청나라가 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게 되었다. 이때 조선에서 주화파와 주전파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광해군이 주화파였다면 인조와 서인세력은 주전파였다. 결국 주전파가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패전을 당하게 된다. 패전 후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명나라 공격을 위한 인적, 군사적, 경제적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호란을 통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이후 조선은 ‘복고적 사대주의’에 빠져 대청복수론, 대명의리론, 조선중화주의를 주창하고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

(3) 해양세력 일본과 코리아

반도(半島), 즉 ‘반은 섬’인 한반도의 남부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본열도(列島)는 고대부터 한반도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을 건설한 핵심 세력은 한반도로부터 이주한 사람이었는데,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1천 년간 연(年) 인원 100만 명 이상이 이주했다.³⁾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할 때 마지막으로 기차했던 곳이 지금의 경남 창원지방이다. 이러한 연고로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며 우리가 만주를 ‘고토’로 바라보는 것처럼 일종의 ‘고토’로 한반도의 남부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러한 시각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표현된 것이 5세기 왜

의 5왕, 즉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 시기인데, 이들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의 송에게 주장하기도 했다.

5세기 고구려가 중국의 천하를 인정한 상태에서 ‘고구려 천하’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일본은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천하를 만들려고 했다. 663년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천황이 직접 4만의 대군을 인솔해 나당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일본은 고구려의 멸망으로 668년 동아시아의 세계전쟁이었던 ‘코리아에서의 전쟁’이 끝나자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해서 701년 대보율령이 반포되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가진 천황제 국가가 등장한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최하위의 위치를 가진 일본⁴⁾이 중국과 패권을 다툰 정도의 국가로 급성장한 것은 대항해 시대를 통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등장하는 16세기 중엽이다. 1543년에 표류한 포르투갈인이 일본인에게 화승총을 건네주고, 1549년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선교와 통상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동아시아세계에는 태초부터 유지되어 온 대륙 중심의 세계질서와는 다른 해양중심의 세계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화승총을 발전시킨 조총을 통해 ‘일본천하’로 통일하고, 통일된 일본을 발판으로 조선과 중국 등으로 일본천하를 확대하려 했다. 히데요시는 조선을 다리로서 하여 중국의 베이징(北京)과 Ningbo(寧波) 등 전역을 지배하고, 나아가 인도와 동남아까지 지배하려 했다.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서양의 힘을 빌린 동양의 일본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 반도인 조선을 침략하고, 대륙의 중국과 전쟁을 벌였다. 이로써 7년 동안 ‘동아시아 세계’ 전체를 뒤흔든 ‘코리아에서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전쟁은 히데요시의 사망에 따라 종결되었고, 에도막부를 수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나. 19~20세기 초

(1) 영국의 시대와 영국 중심의 동아시아

영국은 1860년경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했으나, 근대산업의 거의 반을 차지했고 세계 공산품 무역의 40%를 차지해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런던은 각국의 무역거래가 결제되고 준비자산이 예치되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였고, 1851년에 최초로 만국박람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최신 과학 이론과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근대학문의 중심지였을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민주국가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무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 무기의 혁명이라고 하는 맥심총, 경량의 야포와 증기엔진을 탑재한 철갑함 등이 등장했다. 영국은 해군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영국의 해군력은 20세기 초까지 그 다음으로 강력한 두 나라의 해군력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했다.

19세기 영국의 등장은 16세기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에 이은 해양제국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은 전통의 북미 식민지에 더해 아프리카의 일부, 오세아니아, 인도까지 식민화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졌다.

농경문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명, 즉 산업문명의 대표자였던 영국은 과거 농업문명을 선도한 중국이 주변 민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계와 인종을 계층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고는 국제법 체계에도 반영되었다. 문명국에게만 적용되는 만국공법(萬國公法) 체계가 그것이다. 문명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였고, 중남미는 불완전한 문명국이며, 터키·페르시아·중국·일본·시암 등은 야만국으로서 불평등조약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

구 상의 나머지 지역은 미개국으로 간주되어 식민지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하였다.⁵⁾

1840년 이래 영국은 일관되게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해체하여 영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편입시켰다. 1842년 아편전쟁 승리를 통해 중국과 〈난징조약〉을 맺어 서양을 조공국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심 항구들을 개방시켰다. 1860년 불평등조약인 〈베이징조약〉을 맺어 중화체제의 수뇌였던 황제를 굴복시켰으며, 중화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속국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새로운 제국주의체제 속에 편입하였다. 중화제국의 서쪽은 영국이, 남쪽은 영국과 프랑스가, 북쪽은 러시아, 동쪽은 일본이 중화체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도 영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다. 일본은 1854년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어 개방했으나, 천황을 받들고 서양을 배척한다는 존양운동(尊攘運動)이 격화되었고, 그 결과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 등 4국 함대와 전쟁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지지를 업은 조슈(長州)·사쓰마(薩摩)의 막부타도파는 프랑스의 지지를 업은 막부군을 격파했고, 1868년 1월 천황을 추대하는 메이지유신을 성공시켰다.

19세기 후기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이었던 중국과 신흥세력이었던 일본은 영국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 1897년 영국 외무부 정무차관이었던 커존(George N. Curzon)은 “영국은 베이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도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 영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⁶⁾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때 영국의 지원을 받았고, 군함의 구입이나 해군의 훈련, 자금의 조달 등 거의 모두가 영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19세기 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라는 패권 도전국에 맞서고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거느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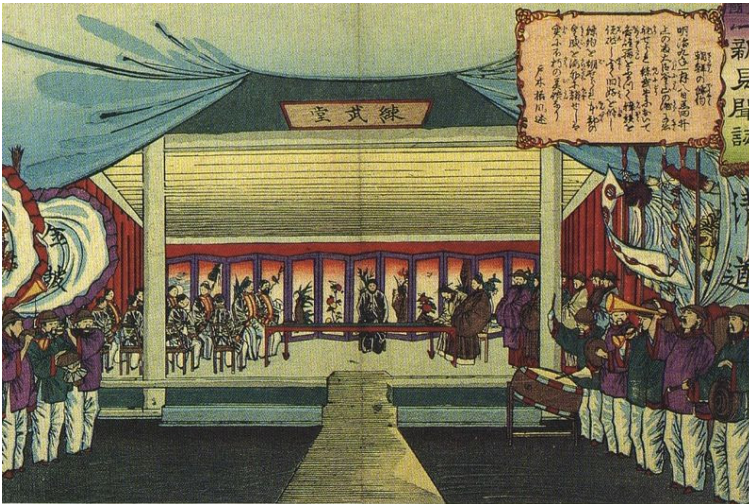
있었다.

(2) 코리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펼쳤던 조선의 문을 최초로 연 나라는 일본이었다. 1876년 조선이 외국과 최초로 맺은 조약인 〈조일수호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제1조 “조선은 자주(自主)의 나라이고, 일본국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조약 교섭 시 일본이 이 ‘자주’ 조항을 주장하자 조선은 중주국인 중국에게 ‘자주의 나라’라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중국은 “조선은 자기 스스로 행하고 주체적으로 보존한다”⁷⁾는 말로 이 용어의 사용을 허락했다. 일본이 넣은 이 ‘자주’ 조항은 코리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일본의 집요한 노력을 반영한다. 이때의 ‘자주’란 바로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자주독립한 나라’라는 의미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던 1880년 9월 김홍집은 조선의 조정뿐

조일수호조약을 묘사한 그림



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조선책략』을 왕에게 헌상했다.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쓴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영토 팽창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는 것이 상책임을 제시한다. 이 당시 중국이 입안한 대조선 정책은 황준헌의 상관인 주일공사 허루장(何如璋)이 본국에 제출한 ‘조선에 대한 세 가지 정책’에 나타나 있다. 허루장은 보고서에서 조선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상책’, 감국대신을 파견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책’, 서양 국가들에게 조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하책’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적 조건에서는 상책과 중책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하책’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선책략』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책략』이 조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회람되면서 이 문건에서 제시한 대러 방어론과 친중·결일·연미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 영남 지식인 1만 명이 서명한 ‘영남만인소’이다. ‘영남만인소’는 ‘러시아 주적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친중을 제외한 결일, 연미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조선책략』이 결론으로 언급한 ‘무책’, 즉 쇄국정책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영남만인소’를 도화선으로 전국의 수많은 유생들이 『조선책략』을 비난하고 쇄국을 주창하며 위정척사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오군란(1882년)이라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대원군이 개입된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국은 3천 명의 군사를 조선에 진격시켜 난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중국은 조·일, 조·미 간의 국교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교권만 아니라 군사권과 내정권까지도 장악했다. 중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허루장이 제시한 ‘중책’을 실현한 것이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중국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친중세력이 중국과 하나가 되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1884년 12월 신식군인 수십 명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3일 만에 중국군 1,500명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로써 중국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개화파를 탄압하고 더욱 강력하게 조선을 억압한다.

갑신정변 실패 뒤 일본은 '중국과 조선은 흡사 한 몸에 두 머리가 붙은 모양'이라고 보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1890년 수상으로 행한 시정연설에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조선이 '이익선의 초점'이자 '사할적인 이익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의 약화가 기정사실이기에 영국의 협조를 얻어 러시아의 개입을 저지하고 중국과 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94년 7월 영국과 〈영일 신조약〉을 조인한 일본은 조선왕국을 점령해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이어 8월 1일 중국에 선전포고했다. 코리아 전역에서 중국군을 섬멸한 일본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진격했고, 요동반도를 점령하고 중국의 최정에 북양함대를 격파했다. 그리고 1895년 1월에는 산둥반도를 공격했고, 3월에는 중국 남부의 팽호군도와 대만까지 점령했다.

(3) 코리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

1880년 조선을 뒤흔든 『조선책략』에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이 국가전략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1884년 갑신정변을 진압한 중국이 조선을 노골적으로 보호국으로 만들어가자, 조선의 모든 세력들이 세계패권국가 영국이 주적으로 설정한 러시아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첫째, 수구세력인 위정척사파는 이때까지 러시아가 조선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째, 반중국 노선을 견지한 급진개화파는 조선을 속국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이용하려 했다. 셋째, 집권 민씨 일파는 러시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조선의 외교통상정책 고문인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 Mollendorf) 같은 사람은 영국과 자연적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이

조선에게 ‘태생의 적’이고, 중국의 힘만으로는 조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갑신정변 뒤 뮐렌도르프는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여우를 피하려다 세계패권국 영국이 제일 싫어하는 러시아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1885년 4월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했고, 8월에는 뮐렌도르프 대신 미국인 오언 데니(Owen Denny)를 외교고문으로 삼게 했다. 그리고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서를 작성하였다’는 문서조작사건이 발생하자 영국은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 중국의 리홍장(李鴻章)은 고종을 폐위시키기 위해 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⁸⁾

‘중국과 일본을 지렛대로 한 대러 봉쇄’라는 영국의 동아시아정책에서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은 시간에 따라 변해간다. 1880년대까지는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점했으나 18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비중이 높아졌다.

1895년 4월 일본과 중국이 〈시모노세키조약〉에 합의했지만, 러시아·프랑스·독일 3국이 공동으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일본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3국간섭이 개시된 것이다. 3국간섭 뒤 왕비 민씨를 중심으로 친러파 내각이 구성되고,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일본은 왕비를 살해했다. 이에 대해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1896년 2월 고종은 친러 쿠데타를 통해 집무실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겼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리홍장 등이 청일전쟁 후 급격하게 친러주의자가 되며, 〈리중 동맹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00년 의화단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진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러시아는 의화단을 진압한 뒤 계속 만주에 주둔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02년 1월 30일, 일본에서 ‘제국외교의 골수’라고 평가하고, 대영제국으로선 ‘화려한 고립정책’에 종지부를 찍은 〈영일동맹〉이 체결되

었다. 세계패권국인 대영제국과 맺은 〈영일동맹〉은 ‘유럽문명의 신입생’ 일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었다. 심리적으로 〈영일동맹〉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수표와 같았다. 또 군사적으로 일본에 막대한 도움이 되었으며, 외교적으로도 영국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았다. 나아가 재정적으로도 〈영일동맹〉은 큰 도움이 되었다.

1904년 1월 30일 대러 개전을 결의한 일본은 5월 초 압록강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였고, 1905년에는 만주에서 일본군 90만 명과 러시아군 130만 명이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으로 비화된 러일전쟁은 미국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 27일, ‘조선에서 일본의 무제한적인 자유, 요동반도 할양, 사할린 분할’ 등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가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영국은 1905년 8월 12일에 조인된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의 한국지배를 승인했고, 미국은 7월 29일의 〈가쓰라-태프트 협약(Katsura-Taft Secret Agreement)〉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로써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러일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러일강화조약 체결 모습



터,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코리아 지배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다. 20세기 이후

(1) 미국의 '명백한 숙명'과 일본

1776년,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통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⁹⁾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을 따라 나라를 만든지 100년이 지난 19세기 중엽 미국은 경제규모에서 영국을 추월했고, 남북전쟁을 통해 국가를 재통일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세계 공업생산의 40%에 달했고, 당시 최첨단 산업이었던 전기·석유·전신·전화 등에서도 선두를 달렸으며, 최초로 비행기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다.

급격히 팽창하는 경제력과 인구, 그리고 광대한 국토를 배경으로 미국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명백한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1890년대에 서부 태평양연안까지 프론티어 활동을 완료한 미국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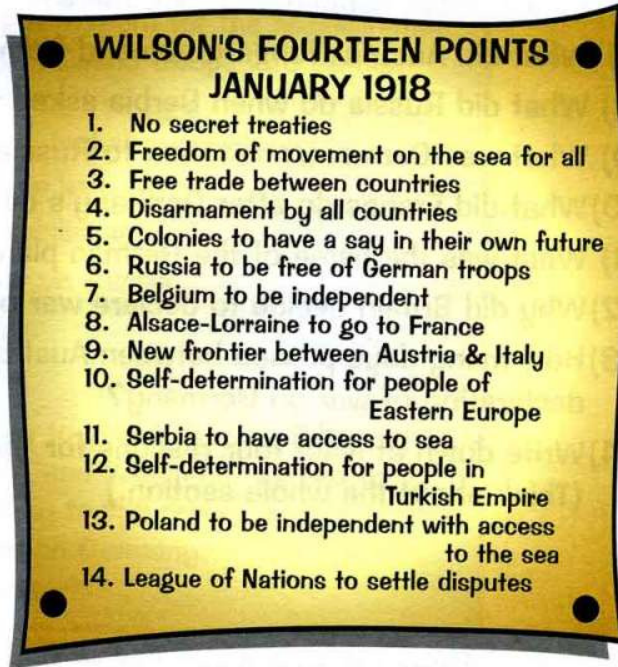
후 중남미와 카리브해로 팽창했고, 1897년에는 태평양의 하와이를 병합했다. 그리고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대서양의 쿠바,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만이 아니라 태평양의 필리핀, 괌도 획득했다. 이로써 ‘미국서부 → 하와이 → 괌 → 필리핀 → 중국’이라는 태평양항로를 확보했다. 1899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문호개방정책’을 주창했다. 이 문호개방정책은 식민지 획득을 바라지 않는 새로운 강국 미국이 등장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것은 시장개방에 기초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계질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이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무렵인 1901년, 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테오도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이 되었다. 루스벨트는 한(漢)의 무제(武帝)나 스페인의 펠리페 2세(Felipe II),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처럼 자국을 세계문명의 중심으로 보고 세계로 제국을 팽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영국이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극동정책의 주도권을 주면서 동아시아에서 한발 물러났을 때, 루스벨트는 1905년 <러일강화조약>을 중재함으로써 미국이 러·일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 이로써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지역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은 영·미 앵글로색슨에 힘입어 세계무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일본의 동북아패권은 세계패권국가로 발전하는 미국과의 마찰과 전쟁을 통해 결국에는 붕괴되었다. 이 과정을 다섯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평양을 둘러싼 경쟁으로 하와이, 필리핀, 그리고 미국 서부지역으로의 일본인 이주문제가 주요한 초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미국과 일본은 서



로가 충돌하는 것을 상정하여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했다.

둘째, 중국을 둘러싼 대립이다. 러일전쟁 뒤 만주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 한 일본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의 주요한 적이 되었다.

셋째, 식민지문제, 즉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다. 아시아에서의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의 등장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맹주론·대아시아주의·황색인종연합론·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형 제국주의'로 대응했다. 그러나 미국은 1918년 1월 윌슨(Thomas W. Wilson) 대통령이 <평화원칙 14개조>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연맹과 민족자결이라는 세계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에 고무되어 코리아에서는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났다.

넷째, 국가체제의 문제이다. 경제체제에서 일제는 통제경제의 색채를 강화했고, 정치체제에서 천황제국가는 전체주의적 특성을 띠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1941년 1월 6일 연두교서에서 '4대 자유'를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은 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만큼 분명하게 되었다.

다섯째, 세계패권을 둘러싼 동맹의 문제이다. 일본은 '대동아전쟁'을 "대동아신질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으로서, 서반구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주 신질서 건설과 상응해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무력전임과 동시에 건설전이고 영구적인 사상전, 문화전이다"¹⁰)고 규정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만주국을 건설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부를 점령했다. 1938년 독일이 유럽을 침공하자, 영국·프랑스·네덜란드령의 동남아를 차례로 점령했다. 이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봉쇄정책을 실시하자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다. 1945년 3월 미국은 도쿄를 대공습했고,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일본은 8월 15일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했다.

(2) 미국과 소련, 분단과 전쟁

태평양에서 미국의 승리가 확실해진 1943년 5월 미 국무부 자문위원회는 코리아에 대해 전쟁이 끝나면 자유·독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되, 일정기간 신탁통치 하의 자치정부시기를 거쳐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코리아의 정치세력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독립할 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44년에 '코리아에 대한 연합국의 공동 점령과 공동

시정방침, 미국의 주도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확약으로 구체화되었고, 이것이 1945년에 들어서는 공동 점령, 공동 관리에 의한 통일된 중앙통제 대신 오스트리아식의 지역분할 점령방식으로 변화된다. 종전 시 동북아에서 막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소련에 비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일본의 항복이 확정되고 소련군이 만주로 물밀 듯이 진격하고 있을 때인 8월 11일, 미국의 국무·국방·육군의 3부 조정위원회는 38도선의 분할점령을 결정했다.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의 외상이 코리아에 대한 4개 항을 합의했는데, 그 핵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 코리아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코리아의 임시정부를 어떻게 미·소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아의 독립적 부흥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코리아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건하고 이 임시정부가 필요한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둘째, 코리아 임시정부의 조직을 돕기 위해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주요내용

3상회의 결정 주요내용

Major Contents of Moscow Conference Decisions

- 독립국가로 재건설하기 위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 그러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미·소 공위)를 열 것
- 최고 5년 기한으로 미·영·소·중 4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되,
그 방안은 미·소 공위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할 것
- 남북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주 내로 미·소 양군(兩軍) 회의를 열 것

를 조직하며, 공동위원회는 제안을 작성할 때 코리아의 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셋째, 공동위원회에 코리아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참가시키고, 민주주의 제단체를 끌어들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민주자치발전과 독립확립을 원조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한다. 코리아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4개국 후견협정(신탁통치)을 작성하기 위해 4개국 정부의 심의를 받는다. 넷째, 남북 코리아와 관련된 긴급문제를 심의하고 미·소 사령부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기 위해 2주일 이내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의 집행을 위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열렸으나 좌우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에 열렸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좌우, 친미·친소, 친일·반일로 극렬하게 대립한 코리아의 세력들로 인해 미·영·소 삼국이 코리아에 대해 합의한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이 심화되었다.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세계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고, 7월에는 ‘트루먼 독트린’에 근거를 제공한 케넌(George F. Kennan)이 「소련행동의 근원」이라는 글을 통해 “이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오로지 두 강대국의 대결장이 되었다”고 규정하며, 소련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봉쇄를 주장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했고,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간의 전쟁, 제국주의와 민족세력 간의 전쟁이라는 성격을 가진 제2차 세계대전 뒤 자본주의체제는 심하게 흔들렸고, 이에 대항한 소련의 공산주의체제는 많은 나라에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1947년 이후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세력이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세력을 압도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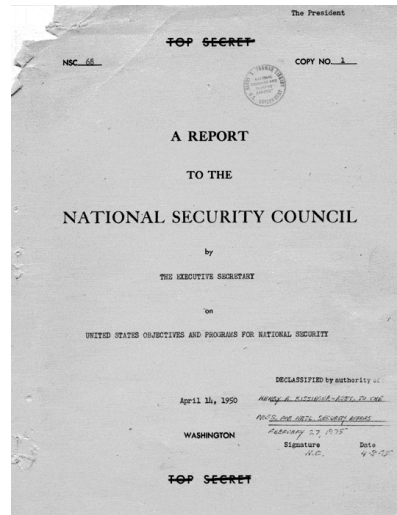
었다. 또한 일제에서 갓 해방된 코리아에서 반일민족세력, 친소공산세력들이 날로 세력을 키워갔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전략, 동아시아전략, 코리아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코리아는 미국의 이러한 3차원의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1946년 6월 미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동북아를 방문한 폴리(Pauley, E)는 코리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반적 성공이 달려 있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이다. 몰락한 공산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경쟁적 민주체제가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다른 체제 즉 공산주의가 강력해질 것인지에 대한 ‘시험장’이 될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947년 코리아문제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으로 이관된 뒤 코리아에 미국뿐만 아니라 UN의 위신도 걸려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6월 7일 의회에 보낸 교서를 통해 “코리아 반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쟁하고 있는 시험장”¹¹⁾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코리아는 아시아 인민들이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등대노릇을 하게 될 것”¹²⁾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문건인 NSC-8 시리즈와 각종 작전계획을 통해 코리아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고, NSC-48 시리즈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정책을 수립하며, NSC-68 등을 통해 소련을 포함한 세계전략을 완성했다.¹³⁾ 1950년 6월 25일 북의 김일성이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과 마오쩌둥의 동의 하에 남침하자, 미국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에 따라 대응했다.

첫째, 북한의 침공을 소련의 침략으로 연결시켜 공산주의의 침략성을 세계에

NSC-68 문서



널리 알려졌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특성을 지닌 냉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UN 안전보장위원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 안보리)를 소집해 UN의 이름으로 성전을 치르고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하나로 묶었다. 셋째, 소련이 아닌 중국의 개입을 예상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봉쇄와 인도차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추진했다. 넷째, NSC-68에 규정된 대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대규모의 군비증강을 현실화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의 전쟁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전환되었고, 세계 20여 개국이 참전하는 ‘제3차 세계 대전의 대체물’이 되었다.

(3) 소련·동구공산체제의 해체와 코리아

한국전쟁을 통해 코리아는 자유세계의 일원인 ‘한국’과 공산세계의 일원인 ‘조선’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하나의 세계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이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좌표를 이동했다. 남북 각각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세력

철의 장막 경계선



권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코리아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세계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양분되었고, 자유체제와 공산체제의 체제경쟁, 즉 냉전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공산세계를 봉쇄하고 자유세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군사·정치·경제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세계전략을 전개하였다. 첫째, 군사적으로 미국은 서유럽을 공산주

의에 대한 방벽으로 만들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설립했다. 일본을 재무장시켰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과 군사조약을 체결했다. 둘째, 경제적으로 국제통화금융질서(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와 국제무역질서(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를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체제를 만들었다. 또 서유럽과 일본을 복구해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체제 속에 포함시켰다.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만들었으며, ‘포인트 포 계획(Point Four Program)’을 통해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제3세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토(Walt W. Rostow)의 근대화이론이 등장하고, 이것이 케네디(Jonh F. Kennedy)정권에 의해 실천되었다. 셋째, 정치·사상·문화적인 면에서 미국주도의 자유주의체제가 확산되었다.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과 과학기술, 경영, 신학 등 미국에서 생산된 학문들, 그리고 할리우드 문화 등이 자유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냉전이 개시된 지 40년이 흐른 1989년 12월 미·소 정상이 지중해 몰타 근처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의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은 ‘우리는 냉전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들어섰다’고 말했고,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대변인은 ‘냉전은 1989년 12월 3일 2시 35분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989년 6월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사건’이 벌어졌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었으며, 12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에 신정부가 들어섰다. 소련은 19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1990년 10월 1일 시장경제체제로 혁명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했으며,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했다. 또한 이때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이 종식되었으며, 니카라과에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에티오피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다. 1991년 8월 소련공산당이 사실상 해체되고 10월에는 소련이 해체되어 12개의 국가로 독립했다. 자유세계가 한국전쟁 이후 40년 만에 공산세계에 승리했다.

그렇다면 자유세계가 공산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공산체제의 비효율성과 자유체제의 역동성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의 책 『페레스트로이카』에서 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체제의 실패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도덕적인 가치관의 부패도 팽배했고,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없어졌다고 실토했다.¹⁴⁾ 둘째, 자유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체제경쟁의 시금석이 된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동아시아 중·소국가의 비약적 발전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소련 및 동유럽인에게 자체의 체제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¹⁵⁾ 셋째, 자유세계에 속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1986년 필리핀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1987년 6월 한국에서는 민주항쟁이 승리했다. 이러한 민주화가 소련·동구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자극했다.

결국 공산체제에 대항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한국은 자유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40년 전 미국은 ‘코리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쟁하는 시험장’이라고 했는데, 1988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서울 올림픽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체제경쟁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말레이시아·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소련에서 모두 한국을 지칭하며 ‘룩이스트(Look East)’를 외쳤다.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주화도 세계 민주주의의 햇불이 될 만했다. 한국이 세계의 등대가 된 것이다. 서울올림픽 이후 공산세계는 ‘봄비에 눈 녹듯’ 녹아 내렸다.

2. 동아시아 구조와 코리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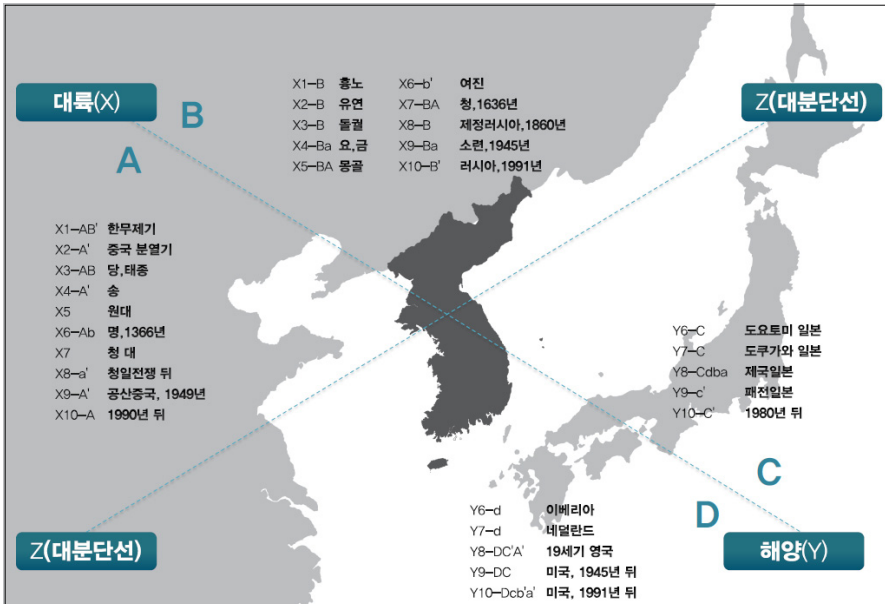


가. 동아시아의 구조적 특징

2000년에 걸쳐 지리적, 문명적으로 형성되어온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특징은 아래의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역사적 시기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에는 대륙세력(X)과 해양세력(Y)이라는 두 범주의 큰 세력이 있고, 그 속에 각각 두 개씩(A, B와 C, D), 즉, 4개의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근대이전까지 동아시아의 주요한 대립구조는 농경국가(A)와 유목국가(B)라는 대륙세력 간의 대립이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대륙세력(X)과 해양세력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상



(Y) 사이의 대립이 주를 이루었다.

근대 이전에는 대륙세력 중국이 농업문명을 주도하며 역사를 이끌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해양세력인 서양과 일본이 산업문명을 선도하며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부연하면, 동아시아의 근대에 일시적인 쇠국체제가 형성되었고 현대에는 공산체제가 형성되었지만, 결국은 자유와 개방, 교류와 협력이라는 큰 역사적 물줄기가 만들어졌다.

19세기 이후 대륙세력은 중국세력(A)과 러시아세력(B)인데, 이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때 서로 협력했고, 이후 공산주의체제를 공동으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해양세력은 일본세력(C)과 서양세력(D)인데, 이들은 16세기 이래 밀접한 교류를 해왔고, 청일전쟁 이후 대륙세력에 대항할 때는 항상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근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영토와 체제 등을 둘러싸고 일시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해양세력 사이에도 역사의 긴 시간에 비해 일시적인 분쟁이나 전쟁(태평양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륙세력은 대륙세력끼리 해양세력은 해양세력끼리 상호 친화성을 갖는다.

2천 년 전 동아시아에 국제관계가 형성될 때 코리아는 유목국가적 성격(XB)을 띠었으나, 통일신라 이후 농경국가적 성격(XA)을 띠었다. 이에 의해 근대 이전의 코리아는 문명적으로 대륙세력(X)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해양세력(Y)의 일원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리고 1945년 남북이 분단된 뒤에는 남(南)은 해양세력, 북(北)은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서로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가르는 경계선인데, 이는 동아시아의 대분단선(Z)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계선은 동해를 지나 한반도의 38도선을 거쳐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베트남의 17도선을 가로지른다. 이 선을 경계로 북쪽은 대륙세력적인 성향을 띠고, 남쪽은 해양세력적인 경향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코리아와 베트남이 38도선과 17도선으로 분단된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리아와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어떤 좌표를 갖는가, 대륙과 해양 중 어디로 편입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의 판도 전체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저 멀리 임진왜란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동아시아의 주축(pivot)인 코리아와 베트남을 어느 세력이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코리아의 분단과 전쟁, 통일과 평화의 문제는 코리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두 개의 대륙세력 'XA'와 'XB'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근대 이전까지 이 선은 만리장성(the Great Wall)이었는데, 어떤 학자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만리장성 이남과 이북의 투쟁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엄청난 성벽을 사이에 두고 남방에는 한족에 근거를 둔 농경민족국가가 나타났고, 북방에는 거란·여진·몽골족에 근거를 둔 유목민족국가가 출현했다. 이 두 세력은 2000년 이상 서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서로 융합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북부로 진출해 과거의 유목민족 국가였던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몽골 등을 차례로 복속시키고, 1860년에는 연해주를 차지해 두만강까지 남하했다. 따라서 근대 이후 대륙의 A와 B를 가르는 선은 러시아제국과 중화제국의 국경선, 즉 러시아의 키릴문자를 쓰는 영역과 중국의 한자를 쓰는 영역을 가르는 선이다. 현재 A와 B의 경계선에 위치한 나라는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티베트(Tibet)와 위구르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향배가 대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편 코리아의 지리적 위치는 이들 나라와 다르지만, 역사적·문명적으로 볼 때 농경민족국가와 유목민족국가, 러시아제국과 중화제국 사이의 경계선에 위

치한다. 따라서 근대 이전에 한과 흉노, 송과 요·금, 명과 청 등 농경국가와 유목국가가 대립할 때, 그리고 근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소련)가 대립할 때, 코리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코리아는 대륙세력 사이의 중추 국가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해양세력 'YC'와 'YD'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남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해양패권을 장악했다. 16세기 스페인은 필리핀을 장악했고, 17세기 네덜란드는 타이완을 차지했으며, 19세기 영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식민화했고 거문도를 점령했다.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했고, 1895년에는 타이완을, 그리고 1910년에는 코리아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지배함으로써 해양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과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타이완을 보호하며,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해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강력한 해양패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코리아이다. 2000년 전 동아시아에 국제관계가 형성될 때, 코리아는 유목국가적 성격(XB)을 띠었으나 통일신라 이후 농경국가적 성격(XA)을 띠었고, 이에 의해 근대 이전의 코리아는 문명적으로 대륙세력(X)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가 된 뒤 해양세력(Y)의 일원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리고 1945년 남북이 분단된 뒤에는 남(南)은 해양세력, 북(北)은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서로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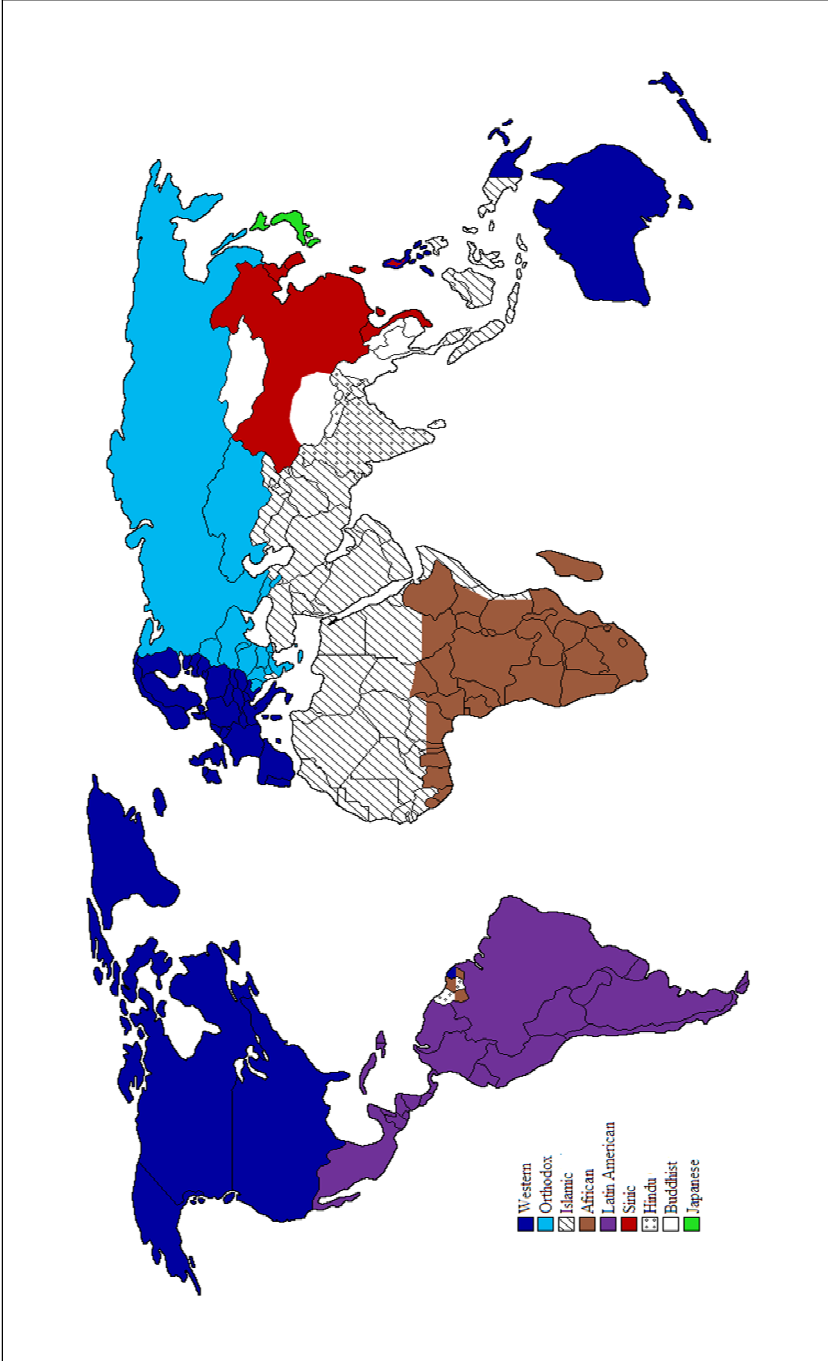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대륙이 끝나는 지점이자 태평양이라는 지구 상의 가장 큰 대양이 시작하는 반도(半島), 즉 '반이 섬'인 곳에 위치한 코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독특한 역사공간을 만들어왔다. 유라시아대륙의 두 세력인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중국과 러시아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해양세력, 즉 서쪽의 해양세력(서양세력=포르투갈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동쪽의 해양세력(동양세력=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는 2개의 대륙세력과 2개의 해양세력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코리아의 기본적인 지정학적 특성은 4개 세력(XA, XB, YC, YD)의 ‘중간자’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리적·문명적 공간이 오늘날 코리아의 좌표를 규정짓고, 나아가 코리아가 어떠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진폭을 기능하게 해준다.

지난 역사를 통해 코리아와 국경을 접한 모든 대륙국가는 전쟁에 패하기 전에는 자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압록강 선에 등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이래 해양세력은 코리아가 대륙세력의 전면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상대세력에 지배되는 통일코리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각각에게는 치명적인 흉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일본에게 코리아는 ‘열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고, 중국에게 코리아는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이다. 러시아에게 코리아는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는 수갑’이며, 미국에게 코리아는 ‘일본·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어쇠’이다. 이러한 코리아의 의미는 군사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인 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미래 통일코리아의 선택 가능한 대안은 주변 4국 모두에 우호적인 코리아이다.

또한 코리아는 문명의 가교이자, 평화와 번영의 통로이다. 일본은 고대 코리아를 통해 중화문명을 흡수했고, 중국은 현대의 코리아를 통해 일본 문명과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모양이 중국대륙에게 우유를 먹이는 우유병과 같은 모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 코리아의 평화가 자국의 평화가 직결됨을 알았다. 그래서 1400년 삼국시대에 ‘코리아에서의 전쟁’에서도, 800년 전 몽골의 침략에서도, 400년 전 그리고 100년 전과 60년 전의 ‘코리아에서의 전쟁’에서도, 오늘날의 북한문제

전 세계 무명권 구분



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직결됨을 인식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체화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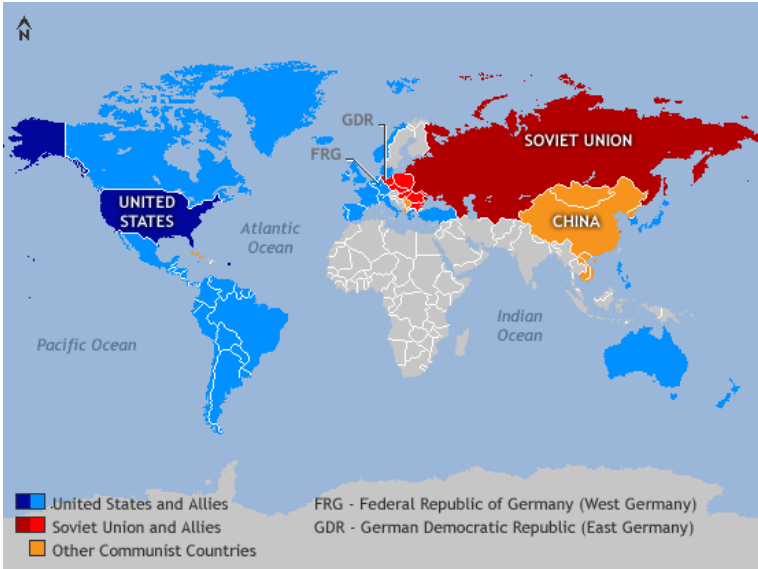
나. 문명권과 세력권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명권과 세력권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문명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구조의 특징을 뿌리 깊은 곳에서 규정짓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형성된 문명권과 세력권을 몇 개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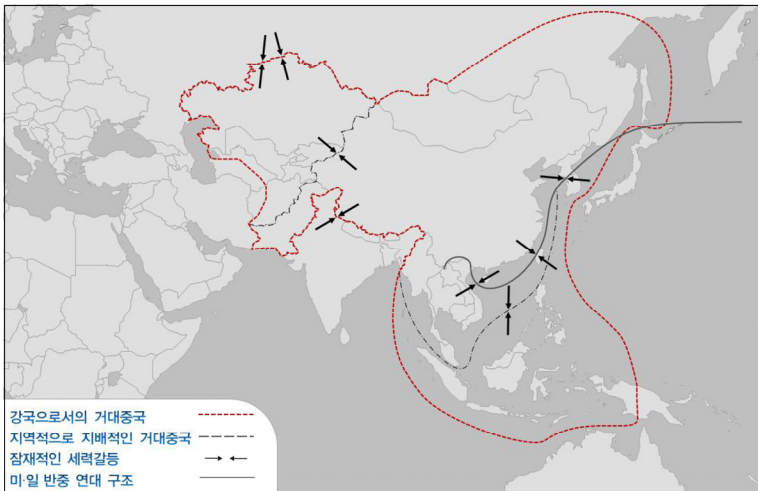
일본 대동아공영권 세력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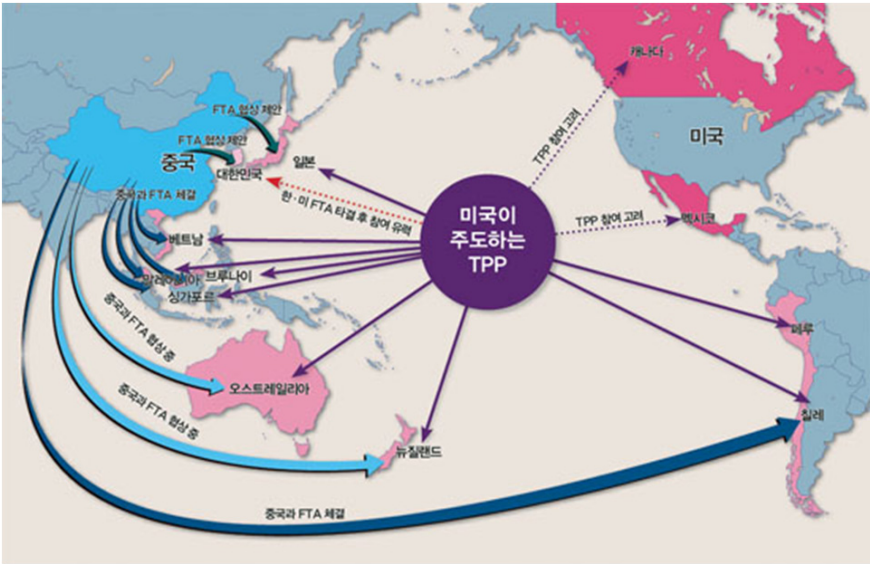
냉전시대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중국의 세력권과 영향권



미국 주도 태평양자유무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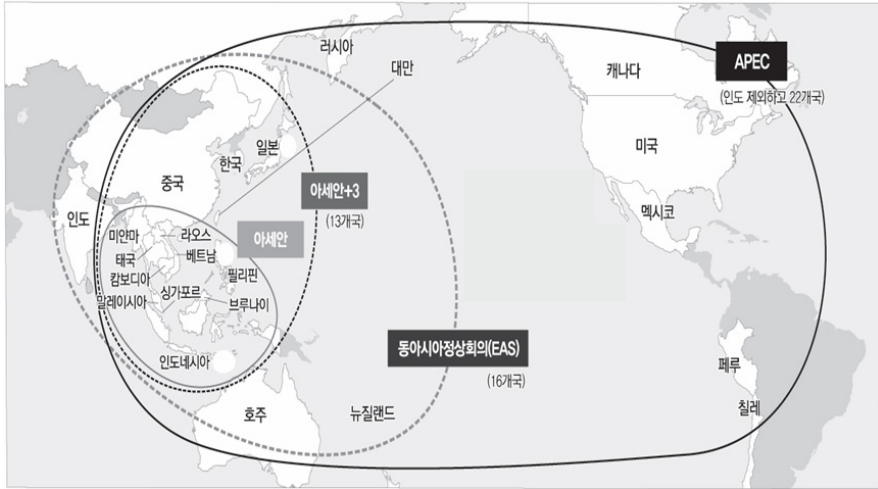
첫째, 문명권이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세계를 8개의 문명권으로 나누는데(그림 ‘전 세계 문명권 구분’ 참조), 이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 동아시아에는 중화문명과 일본문명이 있다고 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현재의 동아시아에는 전통의 중화문명, 일본문명과 함께 러시아정교문명, 미국의 서구문명, 이슬람문명 등 5개의 문명이 만나고 있다.¹⁶⁾

둘째, 근대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팽창을 통해 최대로 확대한 세력권의 범위는 위 그림 ‘일본 대동아공영권 세력범위’와 같다. 이러한 세력권 중에서 오늘날 일본과 친화성이 있는 지역은 남한과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다.

셋째, 러시아의 공산혁명과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형성된 뒤의 동아시아 및 세계의 세력권이다.

넷째, 사무엘 헌팅턴의 인식과 유사하게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강대해진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계적 강

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지역협력체



대국, 지역적 강대국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¹⁷⁾ 그는 강대해진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일본이 충돌하는 지점을 휴전선, 대만해협, 베트남북부로 표시했다.

다섯째,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편으로는 외교·군사적으로 미·일을 중심으로 반중 해양세력연합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표준에 입각한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를 구축하려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 그림 '미국 주도 태평양자유무역지대'와 같다.

여섯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세력 각축 속에서 한반도와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가 동남아 10개국인데, 이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만들어 자기중심의 다양한 지역협력체를 배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모든 문명권과 세력권을 종합할 때, 현재 동아시아는 코리아(남북한)를 제외하고는 4개의 '제국'(미·중·일·러)과 1개의 국가연합(ASEAN)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세력권에 포함되어 있

고, 남한은 미국세력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세계패권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코리아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두 세력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코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만들어지는 전선도(前線圖)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은 마치 시베리아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만드는 것처럼,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치면서 8가지의 유형을 형성한다.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충돌 유형



○제1유형: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 선이다. 이것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분단선이 지나가는 선으로 두 세력이 팽팽할 때 나타난다. 3년간의 한국전쟁 뒤에 확정된 현재의 휴전선,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이 그은 38선, 19세기 말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의 힘이 팽팽했을 때 서로가 분할을 요구한 선이다. 400년 전, 토요토미는 중국과의 강화교섭 때 조선 8도 중 남도 4개 도를 요구했는데 이 선의 이남에 해당한다. 그리고 1300여 년 전 고구려를 멸한 중국의 당은 38선(예성강) 이북을 차지했다.

○제2유형: 북위 37도선, 곧 금강을 경계로 한 선이다. 이 선은 코리아에서 북의 세력이 남의 세력보다 좀 더 우세할 때 형성된다. 고구려의 최대 남하선이 이 선이며, 충주의 중원고구려비가 그 표식이다.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은 UN군에 의해 이 선에 저지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 시 일본군은 재침했으나 조·중 연합군에 의해 이 선에서 저지되었다.

○제3유형: 낙동강선 또는 낙동강 유역이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해양세력인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역이다. 고대 일본국을 만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토요토미의 일본이 평양을 점령했다가 이곳으로 철수해 방어했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UN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이 선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나섰다. 해양세력에게 이 선은 일종의 불후퇴 방위선이다. 해양세력은 이 선에서 반격한다. 한국전쟁과 정유재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4유형: 코리아 전체가 팽창적인 대륙세력의 영향 하에 놓이는 경우이다. 이것은 오직 코리아를 장악하는 세력이 동아시아 전체에 패권력을 가질 때만 성립하는데, 이 때 해양세력은 안보위기를 느낀다. 7세기 후반 중국의 당이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했을 때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고, 13세기 후반에

는 몽골이 고려를 점령하고 고려를 발판으로 일본을 두 차례 침공했다. 17세기 청나라가 조선을 점령했을 때에도, 19세기 말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계획하고 조선에 영향력을 강화했을 때에도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제5유형: 북위 39도선 곧 대동강을 기준으로 한 선이다. 이 유형은 북위 37도선과 상반되는 세력관계에서 성립한다. 신라와 당의 전쟁 결과 신라는 대동강 이남을 차지했다. 임진왜란 때 평양을 점령한 일본은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획득하려 했고, 100년 전 일본의 최고사령관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의화단전쟁에서 승리한 뒤 러시아에게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요구했다.

○제6유형: 청천강 이북에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이르는 선이다. 이 지역은 낙동강 이남의 지역이 해양세력에 친화적인 것처럼 대륙세력에 친화적이다. 고조선 시대에 진·한이 이 지역까지 진출했고, 발해 이후엔 거란·여진·몽골이 한 때 점거했다. 대륙세력은 해양세력이 이 선에 이르면 어김없이 반격한다. 토요토미의 일본군이 이 선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은 ‘항왜원조(抗倭援朝)’를 내걸고 10여만의 군대를 파병했고, 두만강가의 여진족도 공식적으로 대일전 참전의사를 밝혔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UN군이 이 선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내걸고 연인원 230만 명의 대군을 파병했고, 두만강을 사이에 둔 소련도 참전했다.

○제7유형: 제4유형과는 반대로 코리아 전체를 팽창적인 해양세력이 지배하는 경우이다. 이 때 만주를 비롯한 동아시아대륙은 해양세력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는다. 일본은 청일전쟁 때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점령했고, 러일전쟁 때는 만주에서 대전을 벌였다. 코리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러시아 혁명을

틈타 시베리아에 출병했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제8유형: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유형으로서, 평화롭고 통합된 한반도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여 충돌하지 않거나 한반도가 어느 한 세력의 영향 하에 놓이지 않는 경우이다. 코리아 내부의 힘에 의해서든, 주변세력들의 타협에 의해서든 코리아를 둘러싼 세력들의 갈등이 조정되고 중재되어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고 통일되며 동아시아에 화해·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1~12세기의 고려시대와 15세기의 조선시대가 이 유형에 가장 근접한다.

3. 분단 폐해



가. 6.25 전쟁과 분단 폐해

코리아의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구조이자 산물이다. 우리 민족의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분단의 원인에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45년 8월과 9월 사이에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다. 둘째, 1946년 초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한반도 내의 분열 때문이다. 셋째, 코리아 독립국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6년과 1947년에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이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1945년 2월 미국·소련·영국의 알타회담에서 합의한

〈표 II-1〉 국군 및 UN군 인명 피해

(단위: 명)

구분	전사·사망	부상	실종·포로	계
한국	137,899	450,742	32,838	621,479
연합군	40,670	104,280	9,931	154,881
계	178,569	555,022	42,769	776,360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때문이다. 6.25 전쟁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휴전이 된 이후 남북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이후 6.25 전쟁은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리아의 분단에는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꼭 분단되었어야 했다면 그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가진 일본이었다. 하지만 결국 한반

6.25 전쟁의 상처



㉠ 북한군에게 학살된 민간인 시신(남파 미상)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퇴각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학살된 민간인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 각목으로 만든 의자를 착용하는 상이용사
6.25전쟁으로 인해 55만여 명의 전상·부상 장병이 발생했다.

㉢ 폐허가 된 서울 중앙청 부근의 모습
(1950. 9.)



㉣ 제주도로 후송된 전쟁고아(1950. 12. 20.)
6.25전쟁 기간 중 10만여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

〈표 II-2〉 민간인 인명 피해

학살·사망	부상	납치·행방불명	계	기타
373,599	229,625	387,744	990,968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

도가 분단됨으로써 한반도는 이후 분단이 낳게되는 모든 비극적인 경험들을 피할 수 없었다.

6.25 전쟁은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군인으로만 추정할 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약 14만 명이 전사했고, 약 45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행방불명 및 포로가 3만여 명이 발생했다. 연합군은 전사자 약 4만여 명, 부상자 약 10만여 명, 행방불명 및 포로가 약 1만 명이 발생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등 공산군 측의 인명피해는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민간인 사망자는 약 37만 명, 부상자는 약 23만 명, 납치 및 행방불명자는 약 39만 명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피난민과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등이 발생했다.

6.25 전쟁의 피해는 전후 상당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고향을 잃은 이산가족들의 슬픔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경제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롭게 국가경제를 건설하였고, 전쟁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남북한은 전쟁에 대한 공포 및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등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 국토 역시 황폐화 되었으며, 도로·항만·토지 등 산업 기반과 상하수도·주택·학교 등 생활기반을 포함한 사회자본이 대부분 파

괴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남한의 경우 생산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어 경제가 거의 마비되었으며, 공업부문에서만 입은 피해액이 1억 2,000만여 달러에 달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 역시 대부분의 주요 산업 기반과 자원생산 시설이 잿더미가 되었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준 피해는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를 키웠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분단을 고착시켰다. 즉, 상대를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적대와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대결적 관계로 만들었다. 결국 남북한은 각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장하여 이질적인 사고와 역사관을 갖게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6.25 전쟁의 피해는 물적 피해의 측면에서보다는 이와 같은 정신적·심리적인 측면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보다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매우 상이한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남쪽의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가 확립되었다. 반면 북쪽의 북한에서는 무력 통일노선에 기반을 둔 공산독재와 계획경제 체제가 형성되었다. 6.25 전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의 개막을 알리는 인류의 전쟁이었으며, 우리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분단이 가져온 폐해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1945년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뉘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 분단 이전의 고유한 미풍양속, 생활방식, 사고방식, 행동 양태, 언어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동질화의 과정으로 수렴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사회에 상호 불신을 증폭시켜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를 고갈시키는데 대대적으로 기여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확대된 이러한 남북한 간의 불신은 한국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불신을 타파하고 더 이상의 사회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남남 갈등의 소멸은 곧 새로운 '통합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일소되고,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하고 있어 가장 위험한 안보문제 지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병력과 화력을 휴전선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십 수년 동안 서해 지역에서는 전쟁 같은 교전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됨으로써 평화를 도래시키게 된다. 통일 한국 경제의 내수시장 확대 및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편익이 크게 창출되며, 남남갈등과 같은 국내적 이념 갈등의 감소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익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다. 각종 편익이 창출되는 것과 더불어,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분단 비용, 즉 분단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낭비성 비용이 해소될 수 있다.¹⁸⁾

분단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생존이 힘든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여 민주적인 질서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생존의 항상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기존의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면 한국은 그동안 '갈등과 분쟁지역'이라는 이미

지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물론 국가안보적 이득,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GDP의 2.9%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절감, 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의 상승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갈등과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의 주범이었지만, 통일이 되면 분쟁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창출하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대대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노력



우리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경제 성장과 함께 더욱 공고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때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을 추구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정치적·외교적 구호였을 뿐이다. 우리의 통일 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방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었다. 즉 무조건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일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선(先)평화·후(後)통일’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 인정 및 대화 상대로의 인정 여부에 기초해서 나타났다. 특히 탈냉전의 국제적 조류 속에서 1989년 ‘한민족공동체

〈표 II-3〉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시기별 특징		시기	정부 구분	통일방안
북한체제 부인기	평화통일정책의 부재	1948~1960년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UN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평화통일정책의 준비	1960년대	장면 정부 (제2공화국)	남북자유총선거론 (UN 감시하)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선평화·후통일론 (1964) 실력배양론	
북한체제 인정기	기능주의 평화통일접근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선평화·후통일론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1973.6.23)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병행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
탈냉전적 평화통일방안의 모색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4)	
북한체제 지원기	단계적 평화통일의 발전	2000~2002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2000)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평화통일정책의 발전	2003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평화통일정책의 유지	2008~현재	이명박 정부 (실용정부)	상생공영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출처: 허문영,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방안,” 『대북·통일정책의 국민 합의 형성방안』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6.8.29), pp. 6~7.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정책이 확립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1991년 새로운 남북관계의 미래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본적 통일방안으로 지속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민족공동체 건설로 이해하고, 통일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하고, 통일의 주체로서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를 포괄하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연합은 완전한 통일의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한의 민족적 특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국가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통일헌법에 의해 단일국가를 성취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전복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민주'의 원칙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합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나야 한다는 기초 하에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구상한 것이 아니라, 초당적 협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여러 고민과 방안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여러 정부가 각각의 통일정책을 펼쳤으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와 원칙은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다. 결국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북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부인과 인정을 거쳐, 지원을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북

〈표 II-4〉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구성과 내용

통일 구상	과제	주요 내용
평화공동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nd Bargain’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실행 남북한 군비통제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실질적 과제 추진
경제공동체	교류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경제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남북간 경제통합 촉진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지원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민족공동체	평화통일을 위한 분야별 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반 분야의 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완성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

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북한체제가 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통일 주도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북한체제의 변화 미흡 등 때문에 남북관계의 궁극적 발전에 큰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2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전제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남북한 경제격차 축소, 민족동질성 회복 및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14일과 25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2008년까지 동결·불능화 작업을 진행해 온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표 II-5〉 UN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비교

구분	결의 1718호	결의 1874호
날짜	2006년 10월 14일	2009년 6월 12일
배경	2006년 7월 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발사와 5월 24일 2차 핵실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금지 ○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 중단, 미사일 발사 유예공약 복귀요구 ○ UN 회원국을 상대로 북한에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제공, 판매, 전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발사금지 ○ 유엔 결의, 1718호의 즉각 준수 ○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 대외수출 금지 ○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수출금지

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온 북핵 폐기 과정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핵 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과 이에 대한 준수·이행을 규정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규정한 ‘UN 안보리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스스로가 한 약속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었다.

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1) 제국적 평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제국에 의한 평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평화,’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통한 평화’이다.¹⁹⁾ 첫째는 ‘제국에 의한 평화’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한 지역에 제국적 질서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에 의한 평화’는 제국에 의한 전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은 『로마제국의 흥망사』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A.D 180년까지 207년 간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불렀다. 고대 로마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한, 당, 명, 청 등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모두 제압한 뒤에 중화체제, 이른바 ‘중국에 의한 평화(Pax Sinica)’를 이루었다. 이때 중국은 정치·경제·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단순한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문화’로 간주했다. 이러한 중화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명이고, 또 하나는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는 대영제국이 기존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1860년에 점령하고 일본을 1864년에 제압한 뒤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30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영국은 중국과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거느리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아시아질서를 유지했다. 조공책봉체제에서 중국의 패권 하에 있었던 조공국 상호 간에 분쟁이 허용되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최대 세력권



않았던 것처럼 영국 패권하의 중국과 일본도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 영국의 대러시아 전선에 동참해야 했다. 이러한 틀이 유지되는 한, 영국은 중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으로 조선·대만·류큐 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영국이 설정한 선을 넘고, 대러시아 전선을 훼손시킬 때 영국은 제재를 가한다. 이 방법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적 방법에서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응징까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²⁰⁾

‘일본에 의한 평화(Pax Japonica)’는 20세기 초 러일전쟁부터 20세기 중엽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이 성취하려고 했던 동아시아질서를 일컫는다. 일본은 이를 ‘아시아맹주론·아시아먼로주의·대아시아주의·오족협화론·황색인종연합론·동아신질서·대동아공영권’이라고 표현했다. 중국공산당의 창설자였던 리다자오(李大鈞)는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는 중국 병탄주의를 숨긴 말이고, 약소민족 병탄을 위한 제국주의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이고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1940년 8월 1일 공표된 일본의 ‘기본국책요강’은 ‘동아신질서’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황국을 핵심으로 해서 일본·만주·중국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의 신질서’로 정의했다. 중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체제와 같이 일본의 천황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 세계질서인 ‘동아신질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외교·군사·경제적인 특징을 갖는다. 우선 지역적으로 동경 90도에서 동경 180도까지를 포함하는 ‘대동아공영권’에는 조선, 만주국, 중국은 물론 프랑스령, 영국령, 미국령, 네덜란드령의 모든 나라들이 포함되고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타이도 포함된다. 정치·외교적으로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민족적 통치지는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지만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서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민당 정권은 지방정권으로 전락했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공동시장을 설립하였고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전문적 기관을 설치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는 식민지의 여러 지역과 본토의 경제적 통합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몽상의 제국’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현실화되는 것과 동시에 붕괴되고 말았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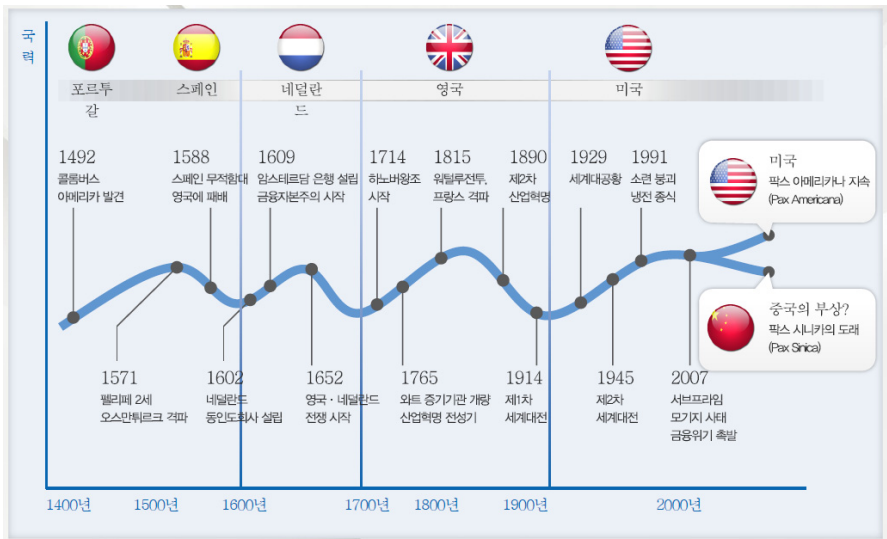
‘미국에 의한 평화’는 1990년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으로 등장한 뒤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는 1997년에 출판된 『거대한 체스판』에서 “최근 미국의 세계 일등적 지위는 그 출현 속도와 지리적 범위, 그리고 행사 방식의 측면 등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한 것이다. 지난 1백 년 동안 미국은 … 전대미문의 세계 강국으로 변화하였다”²³⁾고 적었다. 그리고 중화체제와 비슷하게 “과거의 제국은 속방과 조공국, 보호국과 식민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서열 구조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서열구조 외부의 세계는 대체로 야만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용어는 물론 시대착오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미국의 궤도 안에 든 국가를 묘사하는데 전혀 부적합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²⁴⁾는 것이다.

브레진스키의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 9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우리는 지구 상 어디에서나 민주주의, 발전,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5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가 독립선언서에서 비롯된 미국의 핵심 가치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천명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최고의 희망은 전 세계에 자유를 팽창시키는 것”이고,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은 건국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긴급한 요구이고 우리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의 적은 ‘폭정’, ‘불량국가’, ‘악의 축’ 등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부시는 “전 세계적 폭정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문화에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으나, 동

아시아에서는 냉전 이후 ‘미국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1980년대 이후 30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덩샤오핑(鄧小平)에서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진핑(習近平)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권력교체를 해왔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중국은 2010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역내 군사강국으로 변화되었으며, 활발하게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수천 년 전에 중화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를 창안해낸 원조답게 20세기 초에 형성된 중화민족론을 내세워 “현재 중국 경내의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며 그들의 역사는 중국사이다”²⁵⁾라는 역사 수정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²⁶⁾라는 중화민족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중화민족, 중화사상,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의 동아시아는 ‘미국에 의한 평화’와 ‘중국에 의한 평화’ 사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세계패권국가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국을 이룬 경향이 있는 동시에 모두 피해의식이 있고, 그 피해의식 속에서도 가해자였던 과거의 제국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있다. 따라서 제국의 상대화야말로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²⁷⁾

(2)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적 평화

‘제국적 평화’는 한 국가가 지역공간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데, 이것에는 거대한 전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다닌다. 반면 ‘국제적 평화’는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합의된 평화이다. 이는 개별국가가 지닌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들 간의 약속을 통해 평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샬러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2000년간 중화체제라는 계층적, 제국적 질서 속에서 대등한 국가 간의 국제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국제’라는 개념에 걸맞는 ‘동양평화론’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안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은 1909년 여순(旅順) 감옥에서 행해진 일본인 검찰관의 심문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동양평화는 각국이 자주독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양의 한 나라라도 자주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양평화라고 말할 수 없고,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자주독립이 동양평화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서술한 『동양평화론』에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같은 황색인종인 동아시아 3국이 대등·평등한 관계로 제휴하여 서구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매우 독특한 점은 당시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이었던 여순을 평화지대화 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즉 여순이 러시아·일

본·중국 등의 분쟁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순을 영세중립지대로 삼아 대립의 위험을 제거할 것, 아시아 각국이 여순에 대표를 파견해 항상 평화위원회를 마련할 것, 평화위원회는 각국 군대를 공동 관리하고 분쟁방지과 지역의 안전보장에 노력할 것, 각국이 자금을 제공해서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지역개발이나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자금을 제공할 것, 로마교황청도 평화위원회에 대표를 보내고 서구 제국의 관여 없이 국제적인 승인과 영향력을 얻을 것 등을 주장했다.²⁹⁾

국제라는 개념이 현실적 힘으로 등장한 것은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윌슨대통령은 〈평화원칙 14개조〉에 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세계질서, 즉 국제적 평화의 질서를 제시했다.

힘의 공동체의 상징인 국제연맹이 몇 개의 군사동맹이 경합하는 적대적인 균형을 대신할 것이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제국주의적 지배는 종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타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자원의 독점적 지배를 추구하는 팽창은 평화적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자의 기회균등에게 길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군비제한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벌이는 육·해군의 경쟁적 군비 확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³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코리아는 ‘3.1 독립선언’에서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같고 닳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중국은 5.4 운동으로 화답했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리다자오(李大釗)는 일본제국에 의한 평화, 즉 ‘대아시아주의’ 대신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신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신아시아주의는 민족해방

안중근 의사 사진, 손도장이 찍힌 유묵



을 기초로 해서 근본 개조를 행하는 주장이다.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아시아의 대연합을 실현하고, 유럽·아메리카의 대연합과 정립해서 세계연방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류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³¹⁾고 주장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창으로 제2차 세계대전 뒤인 1945년 10월 24일에 공식출범한 UN도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한다. UN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주요기구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전문기구, 그리고 개발계획, 환경계획, 난민고등판무관, 인권고등판무관,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 등의 보조기구가 있다. UN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즉,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뉜다.

(3) 지역공동체를 통한 평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파탄난 뒤 공산세계와 자유세계로 동아시아가 분단되고 미·소의 냉전 속에서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열전이 계속되었을 때, 평화구상으로 지역공동체를 주장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1990년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개시했을 때, 또 유럽이 1993년 〈마스트리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고,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발효했을 때 동아시아에서도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학자의 구상에서 현실의 정책으로 본격 논의된 것은 21세기에 들면서부터이다. 여기에는 ASEAN의 활성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6자회담의 개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권을 가진 개인이 공동체(국가)를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시 그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17세기 이래 유럽의 국민국가 형성이 그러한 과정이었고, 18세기 미합중국의 탄생도 이러한 맥락이며, 오늘날 EU의 전개도 이 흐름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 협력체를 넘어 안보협력체, 정치협력체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핵심가치와 이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핵심주체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정치공동체에는 공동의 인권옹호와 공동의 민주주의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국제공동체 공통의 재산이다.³²⁾ 따라서 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북한, 중국처럼 인권 및 민주주의 체기

동북아 긴장고조 개념도



를 체제붕괴 시도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협소한 개념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더 높고 넓은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협의의 인권인 ‘정치적 자유권’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人權)이자 인간의 의무(人義)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는 광의의 인권, 즉 인간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민주주의의 개념을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의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600년 전 세종이 하늘 백성(天民)을 핵심가치로 ‘조선 문명’을 창조했고, 60년 전 김구선생이 『나의 소원』에서³³⁾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최고의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것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의 민주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의 민주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곧 “한 국가는 완전히 민주화된 국제사회에서만 민주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민주적인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민주적일 것을 상정한다. 한 과정의 완성은 다른 과정의 미완성에 의해 방해받는다”³⁴⁾는 것이다. 부연하면, 민주주의의 세계화, 곧 민주 국가의 전 세계적인 증가와 각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 심화는 세계의 민주화, 곧 국가, 민족, 초국적 기구 및 단체들 간의 민주적 통치를 증진시키고 또한 요구한다. 역으로 세계의 민주화는 민주국가들의 증가와 각 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를 촉진시킨다.³⁵⁾

다음으로 시장경제문제이다. 공동체형성과 관련해서 시장경제란 사회적 정의와 지역적 공평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가 그러했듯 민주적 공동체주의의 발전도 압축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자유(시장체제)를 먼저 획득하고 그 후에 생긴 시장 실패와 격차 확대 등의 자유주의 폐해 해결을 위해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시장체제로 서서히 관심을 옮겨가는 유럽식의 완만한 경로를 따를 것이 아니다.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자유획득과정을 건너뛰고 시장경제체제로 바로 편입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별도의 경유과정 없이 곧 바로 민주시장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³⁶⁾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제3세계의 경제적 빈곤과 민주적 민족자결을 개선·강화”³⁷⁾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는 동아시아 각국이 모두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설정되고 제도가 디자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누가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또 누가 이러한 가치를 필사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가는 코리아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다. 이 중에서 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제국을 경험했고, 아직도 제국적 질서가 온존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제국적 의식도 잔존해 있다. 결국 아직도 이들 네 나라는 동아시아의 질서, 나아가 세계질서를 제국인 자국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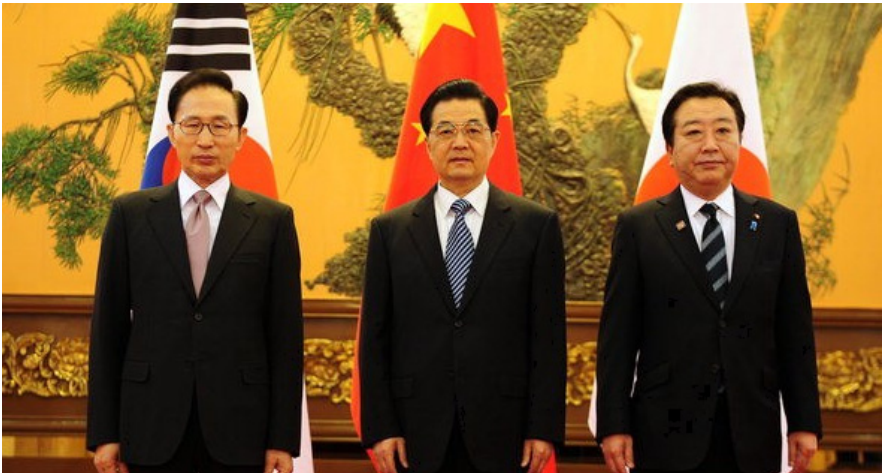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공동체를 선도하는 핵심주체는 코리아일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는 제국의 역사, 그리고 분열과 전쟁의 역사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당했고, 이로 인해 오늘도 슬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코리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가교일 뿐 아니라,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그리고 서양세력과 동양세력의 접점에 위치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코리아는 동북아의 문명적·문화적 특성을 모두 담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뿐만 아니라 중국문명을 내재화했고,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문화도 흡수했다. 그리고 러시아문명과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미국의 서구 문명과 자유주의도 모두 체득했다. 코리아가 동북아의 문화와 세력 모두를 포괄하고 이들을 보편적으로 묶어낼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한국에는 민주화 혁명을 실현시킨 국민적 에너지가 있기에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에너지의 중심³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보다도 더 많은 시민적 자유를 누리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강력히 융합시키고 있으며 생기 넘치는 대중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코리아는 민주적 규범에 충실한 세계주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의 거점이 될 수 있고, UN 관련 각종 조직을 유치할³⁹⁾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지리적·문화적·정치적 특성을 가진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⁴⁰⁾ 안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이 서로 접근하여 통일 되고 혁신된 남북한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러한 남북한은 동아시아 공동의 집의 축심이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⁴¹⁾이다.

마지막으로 코리안 중에서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즉 재외한인동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지금 중국에 230만여, 미국에 210만여, 일본에 100만여, 구소련권에 50만여 명이 살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은 이 지역의 집합적 요소가 되었다. 즉,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이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코리안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인간적 평화적 협력을 위해 일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집단”⁴²⁾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선 코리안계 네트워크가 남북통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있는 한민족은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이를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로’라는 주장이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 (2012.5.14)



제기되었다.⁴³⁾

결국 726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를 묶는 끈의 역할을 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New Korea, United Korea를 통해 8,000만 코리안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응결핵이 되고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장과 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성립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⁴⁴⁾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구 선생은 코리안이 남·북, 좌·우, 친일·반일, 친미·친소로 나뉘어 유혈적인 충돌을 벌이고 있을 때인 1947년,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이를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자. 무력에 의한 정복과 경제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문화로 인류전체가 잘 살도록 하자. 이 일이 우리 민족의 천직이며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⁴⁵⁾고 선언했다. 결국 우리 민족에게 동북아와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 1) 이 글의 1절과 2절은 기본적으로 다음 책에 근거하고 있다.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05).
- 2) 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제37집 (한국철학회, 1992), p. 32.
- 3) 야미노 요사히코, 『일본이란 무엇인가』 (파주: 창작과비평사, 2000), p. 43.
- 4)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당 조정이 설정한 각 국가별 국제적 위상의 순위는 ‘토번·돌궐·신라·해, 거란·발해, 남조·일본, 호밀, 식약, 리빈’의 순이었다.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pp. 93~96.
- 5) 井口和起, “大日本帝國の形成,” 『日清・日露戦争』 (東京: 吉川弘文館, 1994), p. 2.
- 6) 坂井秀夫, 『近代イギリス政治外交史』 (東京: 創文社, 1974), p. 229.
- 7) 藤村道生, 『日清戦争 前後のアジア政策』 (東京: 岩波書店, 1995), pp. 150~151.
- 8)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 326~327; 김한규, 『한중외교사』 (서울: 아르케, 1999), p. 868.
- 9) 미국독립선언서,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1776-2.htm>).
- 10) ゴードン. M. バーガ, 佐藤誠三郎 編, “アジア新秩序の夢,” 『近代日本の對外態度』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4), p. 187.
- 11) U.S. Congress, House and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Korean Ai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 12) *Ibid.*
- 1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1950 (비밀해제문서).
- 14) 미하일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시사영어사, 1988), pp. 15~17.
- 15) Ezra F. Vogel, *The Four Little Drag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 109.
- 16)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참조.
- 17) 즈비그뉴 브래진스키,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참조. (원본: Zbigniew Brzezinski, *The Great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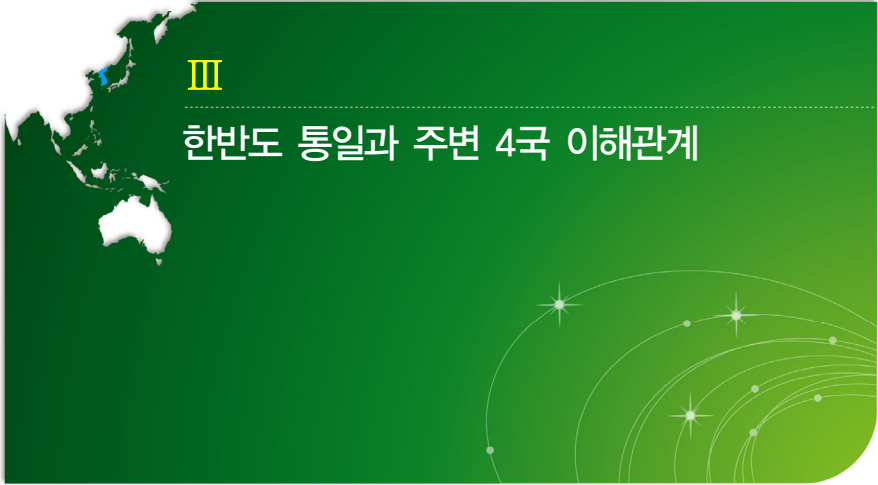
- 18)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의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이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이승현·김갑식,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p. 22~29.
- 19) 이 개념은 김명섭의 ‘국제적 보편,’ ‘국제적 보편,’ ‘초국적 보편’을 원용한 것이다.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pp. 16~17.
- 20) 전해중,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pp. 30~32.
- 21) 中村尙美, 『明治國家の形成とアジア』 (東京: 龍溪書舎, 1991), p. 286.
- 22) 로-ジャー, 징그만, 佐藤成三郎 編, 『日本とウイルソンの世界秩序』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3), p. 93.
- 23) 즈비그뉴 브래진스키,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pp. 19~27.
- 24) 위의 책, pp. 19~27.
- 25) 유용태,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논리와 그 연원: 소통을 위한 성찰,”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위원회 심포지엄자료집, 2007), p. 83.
- 26) 위의 글, p. 83.
- 27) 위의 글, pp. 86~90.
- 28)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p. 17.
- 29) 인종근, “동양평화론,” 『21세기와 동양평화론』 (서울: 국가보훈처, 1996), p. 55; 김정현, “평화를 위한 노력과 국제연대,” 『동아시아의 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p. 187~189.
- 30) 로-ジャー, 징그만, 『日本とウイルソンの世界秩序』, p. 93.
- 31) 中村尙美, 『明治國家の形成とアジア』, p. 286.
- 32)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서울: 제이앤씨, 2011), pp. 28~29, 271. 김대중 대통령은 핵심 국정철학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 33) 김구, 『나의 소원(외)』 (서울: 범우사, 2009) 참조.
- 34) Bobbio Norberto, *Democracy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Polity Press, 1995); 강정인,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위원회심포지엄 자료집, 2007), p. 39.
- 35) Daniele Archibugi and David Held, *Cosmopolitan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5), p. 14; 강정인,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p. 40.

- 36) 최태욱, “보편주의 구상으로서의 동북아시아와 지역협력 방안,”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p. 195.
- 37) 위의 글.
- 38)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p. 108.
- 39) 우정은, 『코리아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파주: 창작과비평사, 2003).
- 40) 위의 책.
- 41)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pp. 29~39. 와다는 “동아시아 공동의 집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심은 틀림없이 통일되고 새롭게 개혁된 남북한”이라고 강조한다.
- 42) 위의 책, pp. 29~39.
- 43) 강상중과 와다 하루키의 주장.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pp. 29, 41, 141~143.
- 44) 위의 책, p. 108.
- 45)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우리 민족 모두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동북아시아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은 지역은 없고 동북아시아만큼 공통요소가 적은 동시에 이질적이며 대립적인 지역은 없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지역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이 있지만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공동의 집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동질적인 지역이 하나로 뭉친다고 해도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지역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로 뭉치면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이 과거의 한을 풀고 사회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결속은 전 세계가 평화롭게 협력해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공동의 집이 탄생한다면 전 인류적 공동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위의 책, p. 105.

Ⅲ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이해관계





1. 미국의 인식과 이해관계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목표

미국은 유일초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사활적 이익인 미국 본토가 공격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관리와 비확산 레짐 유지를 세계전략으로 설정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적극적 관여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에서는 한·미 동맹 유지와 북핵의 단기 비확산, 중장기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전략(A Grand Strategy for America)』을 출간한 로버트 아트(Robert J. Art)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s)을 6가지로 규정한 후,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매우 중요한 이익(highly important interests), 중요

한 이익(important interests)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대전략으로 8가지를 제시했다.¹⁾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III-1>와 같다.

아트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미국 본토 방위’를 규정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역제가 어려운 ‘광신적 지도자’에 의한 ‘화생방공격 시나리오’와 역제가 불가능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재래식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테러공격’으로 특징화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도전하는 요인으로,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의제라 할 수 있다. 테러리즘(terrorism)과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는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의제로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집단과의 연결

<표 III-1> 미국의 핵심이익과 대전략 유형

이익	구분	미국의 이익 내용	미국의 대전략 유형
사활적 이익	①	국토방위 (미국의 본토공격 예방)	① 패권주의(dominion)
매우 중요한 이익	②	유라시아강대국과 평화구축 (강도높은 안보경쟁 예방)	② 세계적 집단안보 (global collection security)
	③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	③ 지역적 집단안보 (regional collection security)
중요한 이익	④	국제경제 개방 (개방된 국제경제질서 보존)	④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⑤	민주주의수호, 해외인권존중, (대량학살과 살육 예방)	⑤ 고립주의(isolationism)
	⑥	지구환경보존 (온난화와 급격한 변화 예방)	⑥ 봉쇄(containment)
			⑦ 국외균형(offshore balancing)
			⑧ 선택적 개입 (selective engagement)

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 어느 정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셉 나이(Joseph S. Nye Jr.)도 미국의 국가이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지역패권국가의 출현 저지,’ ‘유라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 ‘중동지역의 평화와 지역 내 영향력 확보,’ ‘미국 중심의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파’ 등을 제시했다.²⁾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는 기존의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이익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지역패권국가의 출현 저지,’ ‘유라시아에서 강대국들 간의 안정,’ ‘중동지역의 평화와 지역 내 영향력 확보,’ ‘미국 중심의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파’ 등이 있다.³⁾ 이러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동아시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중국 부상에 대한 안정적 관리,’ ‘한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대만·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1986년에 제정된 ‘국방부 재조직법,’ 일명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Defense Reorganization Act)’에 따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담긴 이 전략서는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 국무부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의 집필기준이 된다.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국제질서를 형성한다”⁴⁾는 목표에 따라 2010년 5월 미 국가안보의 현황과 지향점을 담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에너지·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현안은 국제기구 및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추구해야 할 항구적 이익을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테러나 자연재해 등 내부로부터의 각종 위협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한편, 알카에다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타파, 핵무기를 포함한 WMD 확산방지, 사이버공간의 안보증진을 추구한다. ‘번영’은 경제와 관련하여, 개방된 국제경제체제 속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성장하는 미국의 경제를 통해 번영과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증대, 과학기술과 혁신의 강조,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삼았다. ‘가치’와 관련하여, 미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 이를 위해 미국부터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모범을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글로벌 위협 대응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 안보,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강력한 동맹, 효율적인 국제제도, 아시아, 중국, 러시아, G20(Group of 20), 브라질 등 ‘21세기 새로운 영향력 중심지와 협력 강조,’ 기후변화 등 ‘핵심 글로벌 도전문제에서의 협력’ 등을 내세웠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홀로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대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2002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보고서에 나타난 가장 분명한 차이는 힘의 사용(use of force)과 관련한 입장이다. 2010년 보고서는 ‘힘의 사용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전쟁보다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한 힘의 사용이 필요할 때 보다 폭 넓은 국제적 지지를 추구해

〈표 III-2〉 북한미사일 개발경과

'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 획득(추정)
'76.~'81.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84.4.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86.5.	SCUD-C 시험발사
'88.	SCUD-B/C 작전 배치
'90.5.	노동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91.6.	SCUD-C 미사일 발사
'93.5.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94.1.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98.	노동미사일 작전 배치
'98.8.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측: 위성발사 주장)
'06.7.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및 노동미사일·SCUD 미사일 발사
'07.	무수단미사일(IRBM) 작전배치
'09.4.	장거리 로켓(개량형 대포동 2호) 발사(북한측: 위성발사 주장)
'09.7.	노동미사일·SCUD 미사일 발사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국방부, 2010).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맹국 혹은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전 정부에 비해 국가안보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여, 경제·교육·에너지·과학기술·이민 등의 문제를 포괄적 안보의 문제로 규정했다.⁵⁾ 미국은 세계전략을 하드파워 중심에서 스마트파워, 전쟁위주에서 안정화 및 재건 위주로 방향전환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초한 아시아 전략에 대하여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아시아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 다가올 글로벌 도전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양자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자들을 이용하여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증대해야 하며, 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PP 등을 활용한 지역다자체도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클린턴(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 역시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세기가 될 것이다(The 21st Century will be American’s Pacific Century)”라고 언급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보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로 해상수송로의 안전보장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과 핵확산시도, 균형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⁷⁾ 조셉 나이 또한 “국제문제의 중심으로 아시아의 복귀는 21세기 권력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⁸⁾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유럽(대서양)중심에서 (동)아시아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들리(Stephen J. Hadley)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아시아를 생각하면 중국부터 떠올린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이 중요하지만 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접근법의 출발점이 되서는 안된다. 우리의 첫걸음은 전통적인 우방 및 동맹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이 인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국가

를 추구하는 한 중국을 지원해야 하며, 중국이 국제체제와 이를 지탱하는 원칙·관행에 대해 협조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⁹⁾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한 유럽중심의 사고보다는 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세계 총생산의 1/4을 차지하며, 세계 외환보유고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냉전시기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념적 대결구도의 관점에서 공산권 팽창을 봉쇄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와 공산권 팽창에 대한 ‘봉쇄’가 핵심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북핵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위협으로 과거의 위협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WMD, 미사일프로그램의 제거 및 확산방지가 미국의 정책에 추가된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안정 유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이는 평양정권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이 북핵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및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의 궁극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2월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긴급한 도전”¹¹⁾이라고 언급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활용할 것”¹²⁾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그녀는 북한에게 남한에 대한 어떠한 도발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상’을 제안하고 핵안보를 확보하여 테러리스트들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핵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¹³⁾ 오바마 정부는 핵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외교적 협력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 안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핵의 수평적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두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은 비확산보다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테스크포스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통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혹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북 고립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정치적 통제 유지능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정책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평적 확산 방지, 둘째, 수직적 확산 방지, 셋째, 비핵화, 넷째, 북한의 급변사태 계획, 다섯째, 개입 확대,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상황 개선 등을 권고했다.¹⁴⁾

통일된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한결같다. 미국은 핵이 없고, 민주적이며 자유시장경제인 한반도를 원한다. 안정된 한반도란 전 지역에 걸쳐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정치 제도가 작동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테러리즘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2009년 6월 ‘한미공동비전선언’에서 천명되고 있다.

…… 우리의 동맹관계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이르도록 하면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

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아·태 지역에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기구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사회와 개방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양국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아·태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¹⁵⁾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한·일 양국 정상들은 한·일 동맹은 단지 양국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위한 안보의 요체임을 선언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큰 지역안보구도 변화와 조정차원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미국 민간정치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국익위원회(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는 2000년 6월 「미국 국가이익(America's National Interest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을 네 가지 - 사활적(vital), 핵심적(extremely important), 중요한(important), 부차적(less important) - 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사활적 이익으로는 첫째, 미국 본토 혹은 해외 주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및 생화학 무기의 위협에 대한 예방·억제·감소, 둘째, 미국 동맹국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그들이

미국과 함께 미국의 번영을 위한 국제질서를 창출하는데 협력하도록 담보, 셋째, 미국 국경 인근에 주요한 적대국이나 '실패한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 넷째, 주요한 세계체제(무역, 금융시장, 자원공급처 그리고 환경 등)의 생명력과 안정성을 보장, 다섯째, 전략적 적대관계에 놓일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부합하도록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 주도의 통일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⁶⁾

북한의 비정상적 체제 소멸과 한국 주도의 통일은 북한 자체의 핵무기 등 WMD 위협 뿐 아니라 '시리아 - 파키스탄 - 이란 - 북한'을 연결하는 WMD 확산커넥션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 안보에 긴요한 동맹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지역의 양대 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미·일 간 전략네트워크의 강화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통일한국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급격한 세력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불안정 변수인 북한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전략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인 비확산 및 반테러 노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게 있어 통일한국은 총병력 40~50만의 정예군으로 무장한 동맹국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한·미 동맹의 경험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군은 상호 운용성 및 작전 효율성 면에서도 미국의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 및 역내 질서유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북한 군사위협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한반

도 방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은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또 하나의 경제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자체의 경제력만으로도 세계경제 내에서 그 위치가 상당하며,¹⁷⁾ 통일한국은 이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한국투자 비중은 2% 대에 머물러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일한국의 출현으로 미국의 한국투자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미국의 자유무역을 위한 수송로로서의 역할도 제공할 수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환동해권(한국-러시아-일본) 및 환서해권(한국-중국-일본) 벨트를 형성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수송 연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한-미 전시작전권 협의 주요일지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예외적인 경제 성장으로부터 분명하게 이득을 얻어 왔으며, 세계화시대에서 점차적으로 동아시아와 통합되어 가고 있다. 5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7,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교역을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가 미국에 투자한 총량과 동일한 2,0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무역총규모의 1/3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속

〈표 III-3〉 한·미·중·일·러의 주요지표

지표	단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면적 (2010)	km	108	99,720	3	9,826,675	4	9,596,961	62	377,915	1	17,098,242
인구 (2011)	천명	25	48,391	3	313,085	1	1,347,565	10	126,497	9	142,835
노동시간 (2010)	시간	1	2,193	12	1,778	-	-	14	1,733	3	1,976
외국인 직접투자 (2010)	백만 달러	34	127,046	1	3,451,405	9	578,818	20	214,880	-	-
해외 직접투자 (2010)	백만 달러	18	19,229	1	328,905	5	68,000	7	56,263	8	51,696
1인당 연구개발 (2009)	달러	21	644.7	9	1,306.8	42	63.6	8	1,316.1	-	-
국방비 (2010)	백만 달러	12	27.6	1	698	2	119	6	54.5	5	58.7
군병력 (2011)	천명	6	653	2	1,448	1	2,285	22	239	4	1,200
1인당GDP (2010)	십억 달러	12	1,466.1	7	46,860	95	7,544	25	33,885	-	16,200
조강생산 (2009)	백만 MT	6	49	5	58	1	568	2	88	4	60
철강소비 (2009)	백만 MT	5	45.4	2	57.4	1	542.4	4	53.2	7	24.7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1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제무역연구원, 2011), pp. 15~78, 데이터 편집.

된 성장과 발전에 수백만의 미국 일자리가 걸려 있다. 그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 내로의 자원과 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에 필수적인 시장경제의 촉진과 공해상의 통신망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은 한국이 통일된 이후에도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관심사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열린사회와 민주적 과정과 제도의 증진을 통한 지역정치 발전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관심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은 두 가지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민주주의와 개방성은 미국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적 영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안정된 사회와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unication: USITC)는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한국·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지난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한 후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가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인 900억 달러는 향후 5년 이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경제패권 확대를 우려하여 조속히 한·중 FTA를 체결하고자 2012년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는 통일한국이 친중국적 성향으로 바뀔 것이란 일부학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ASEAN 지역포럼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프로세스와 같은 다자적 대화채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각각 지역안보와 경제공동체에 대해 역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APEC

포럼을 통해 진전된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방향으로 다국적 무역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다.

다. 미국의 사회·문화적 이익

미국의 국가이익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가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치들은 우리 국가안보의 최고자산이다”¹⁸⁾고 언급하고 있다.

즉, 법치, 시장경제, 인간기본권 등에 기초한 합헌적 민주주의가 해외에서 심화·제도화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가치 및 이념을 공유하는 한국주도의 통일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추구해온 가치가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 및 세계에 합헌적 민주주의의 확산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한반도의

(표 III-4) 한·일·중 3국 관련 주요 통계 (2011년 추정치)

- G D P: 14조 77억불 (전 세계 GDP 1/5)
- 외환보유액: 14조 7833억불 (전 세계 외환보유액 1/2)
- 교역량: 4조 7323억불 (전 세계 교역량 17.5%)
- 인 구: 15억 2505만명 (전 세계 인구 22%)
- 3국 경제규모(약 12조불)는 NAFTA(약 17조불), EU(약 16조불)에 이어 세계 3번째 (World Bank 2010년 확정치 기준)

통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1,000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굶주림과 독재에 신음하는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평화 및 국제평화를 이룩하는 첩경으로 인류애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6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WAC)에서 미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책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은 안보동맹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¹⁹⁾고 강조하였다.

한·미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반대중의

〈표 III-5〉 연도별 참전병력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1964년	140	140	0	0	0	-
1965년	20,541	15,973	261	21	4,286	-
1966년	45,605	40,534	722	54	4,295	-
1967년	48,839	41,877	735	83	6,144	-
1968년	49,869	42,745	785	93	6,215	31
1969년	49,755	42,772	767	85	6,096	35
1970년	48,512	41,503	772	107	6,096	34
1971년	45,663	42,354	622	98	2,558	31
1972년	37,438	36,871	411	95	28	33

출처: 국방부 <www.mnd.go.kr>.

68.3%가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91.1%는 ‘미래에도 양국 간 동맹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75.3%의 응답자가 답한 바 있다. 반면, ‘통일한국에 어느 국가가 가장 위협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중국(일본 21.2%, 미국 11.8%, 러시아 3.4%)이라고 답했다.²⁰⁾

한·미 가치동맹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해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은 UN군이란 이름하에 참전한 바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4년부터 1972년에 걸쳐 자유월남을 위해 32만 명을 베트남 전쟁에 파견하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5,099명의 사망자와 1만 1,232명의 부상자, 15만 9,132명의 고엽제 피해자를 낳았다.

한·미 양국의 가치공유는 빈번한 인적교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한국인의 미국방문객 수는 110만 7,518명이고, 미국인의 방한객 수는 65만 2,889명이다.²¹⁾ 이는 한·미 FTA 체결로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가 발표한 2011학년도 등록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미국대학에 등록한 한국유학생은 7만 3,351명으로 전년보다 2% 늘어났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²²⁾ 지난 1년 동안 미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규모는 약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한인 유학생들의 지출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UN이다. 한국은 1992년 UN에 가입한 이래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UN 사무총장은 한국출신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 반기문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 2011년 UN 정규예산 분담금 5,3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미

국(22%), 일본(12.5%), 독일(8%), 영국(5.5%), 프랑스(6.1%), 중국(3.2%) 등에 이어 11위(2.2%)를 기록하고 있다.²³⁾

또한 PKO 예산 분담금 순위도 10위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UN 재정의 상당분을 책임지고 있다. 6.25 전쟁 때 UN과 21개 회원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UN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부대 250명을

〈표 III-6〉 한국-UN 주요관계 연표

1948. 12.	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결의 채택
1950. 6.	안보리, 북한의 남침공격 즉각 중지 및 철군요구 결의 채택
1988. 2.	KAL기 폭파 사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1991. 9.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94. 3.	안보리, 핵확산금지조약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성명
1995. 11.	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2년 임기)
1996. 4.	안보리, 북한군 비무장지대 침입 규탄 성명
1996. 9.	안보리,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규탄 의장 성명
2000. 7.	김학수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취임(2007년 6월 임기 만료)
2001. 9.	제56차 총회 의장 수임(임기 1년)
2003. 1.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취임(2006년 5월 임기 만료)
2006. 10.	안보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구성 결의(1718호) 채택
2007. 1.	반기문 외교부장관, 제8대 유엔사무총장 취임
2009. 5.	안보리,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구성 결의(1874호) 채택
2010. 7.	안보리, 천안함 사건 의장 성명
2011. 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선

한국의 PKO 파병지역



파견했다. 이후 1994년 서부 사하라에 의료지원단(20~40명)을 파견해 2006년까지 UN 요원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의료활동을 펼쳤고,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00명 규모의 공병대대를 앙골라에 파병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아프간에 해군과 공군 수송지원단(상륙함 1171명, C-130 수송기 2대 76명)을, 2002년 2월 의료부대인 동의부대(60~100명), 2003년 2월 공병부대인 다산부대(150명)를 각각 파견해 2007년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2004년 7월에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부대(300명)를 파병, 2008년 12월까지 4년 3개월 간 평화 재건 임무를 수행해 동맹국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⁴⁾ 2012년 7월에는 남수단에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을 위해 300명 규모의 PKO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만 해역에 해군전투함을 파견하여 전 세계 300척 이상의 선박들이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중국의 인식과 이해관계



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

중국은 1950년대 중반, 마오쩌둥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대국 건설을 달성한다는 국가목표를 제시한 이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장쩌민의 ‘유소작위,’ 후진타오의 ‘화평발전’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지난시기 구사해 왔고, 최근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한 안정유지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11년 9월 『평화발전백서』를 통해 주권·국가안보·영토보전·국가통일·국가정치제도 및 사회안정·경제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기본적 보장 등을 6대 핵심이익으로 발표하였다.²⁵⁾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동북아 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국가이익의 핵심내용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를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의 확보이다. 이러한 핵심내용은 현재도 변함이 없고,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전략 목표도 큰 변화는 없다. 중국은 경제력 성장과 더불어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배양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통일과 나아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지역적 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동시에 연성권력에 속하는 문화역량을 비롯하여 국가 이미지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국력의 증대를 통해 중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997년 당대회(15대)에서 처음으로 주변관계를 중시하였고, 2002년 당대회(16대)에서 장쩌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 공산당의 사명임을 밝히고, 종합전략 차원에서 주변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대전략의 중점은 중국의 ‘굴기’과정에서 어떠한 지역전략을 펼칠 것인가이다. 이

전략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의 주변지역을 하나의 총체로 본다. 둘째, 중국의 주변을 중국의 발전·굴기의 대 배경으로 인식한다. 셋째, 이

〈표 III-7〉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009년 기준)

국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 국방비 (%)	병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8,820	245	2.8	650	505
미국	138,000	6,903	5.0	1,459	2,270
일본	53,000	456	0.9	229	359
중국	48,600	780	1.6	2,285	58
러시아	13,700	411	3.0	1,027	293
대만	3,490	97	2.8	290	425
영국	26,700	608	2.3	175	998
프랑스	28,600	672	1.3	353	1,049
독일	36,500	469	1.3	251	570
이스라엘	1,980	129	6.5	177	1,791
이집트	1,570	46	2.9	469	59
사우디아라비아	4,100	412	10.0	234	1,436
호주	11,190	276	2.5	55	1,298
터키	7,310	135	1.9	511	179
말레이시아	2,220	44	2.0	109	173
태국	2,590	51	2.0	306	78
싱가포르	1,700	82	4.8	73	1,767
캐나다	14,700	202	1.4	65	603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0.2) 등 관련자료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이집트,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기준

지역의 협력·연합·단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²⁶⁾ 그에 따라 중국은 2003년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우호를 의미하는 ‘무린(睦隣),’ ‘안린(安隣),’ ‘푸린(富隣)’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조화세계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행보는 경제능력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1978년 이후, 30년 만에 중국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GDP 규모가 1978년 세계

〈표 III-8〉 중국 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론	신흥강대국론
국제적 지위인식	(전통) 강대국	발전도상국	신흥강국
미국과 관계	경쟁	협력	건제적 관여(혜징)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전통 강국	지역 강국	세계적 강국
일본과 관계	적대적	협력, 견제 및 대립	포용 대상
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현상유지 원칙, 변화 가능성도 내포
대 한국 정책정향	비우호적	외교적 견인의 대상	기회주의적: 적극 포용 혹은 배제
북한에 대한 인식	전통우방, 전략적 자산	문제아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의 이중성 인식
대북 정책수단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설득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
급변사태 대응	군사적 개입	신중함 속 한·일과 양자적 해결 모색	다자주의 선호, 기회주의적
대표 개념	순망치한(唇亡齒寒, 완충지대), 돌돌뱀인(咄咄逼人)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대유작위(大有作爲)

출처: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Spring 2010의 Table 1을 기초로 추가적 내용 포함.

10위에서 2010년에는 미국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처럼 주변지역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능력을 투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화평굴기’의 전략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위협론’을 형성하였다.

탈냉전기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화평굴기’, ‘도광양회’, ‘유소작위’로 압축·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개념이다. 즉 세 가지 전략은 중국의 힘과 능력의 크기,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외 정세의 시기별 특징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져온 것이다.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강조하면서 힘에 기초하여 일방주의를 추구해 왔던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해 왔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이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범을 주장함으로써 미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²⁷⁾

중국은 적어도 2020년까지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표 III-9〉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

	국가발전전략	대외관계전략	중점
마오쩌둥	자력갱생 (모택동사상)	양대진영론, 3세계론	계급투쟁 중시
덩샤오핑	개혁·개방, 평화와 발전, (덩샤오핑이론)	도광양회	경제발전중시
장쩌민	3개 대표론	유소작위, 책임대국론	공산당 체질 개선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관	화평굴기, 조화세계	국내안정과 지속적 발전 중화민족주의 강조

출처: 허문영·미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96.

힘과 영향력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목표와 더불어 몇 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역내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고착화를 저지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기초로 개방형 지역주의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4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다자안보협력이라 할 수 있는 ASEAN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여한 이후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창설을 주도하고, 이어서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안보 위협을, 안보딜레마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9월 6일 발표한 『평화발전백서』를 통해 6대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제시했다. 핵심이익은 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절대 타협하



지 않고 물리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를 뜻한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마지노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여러 정책과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네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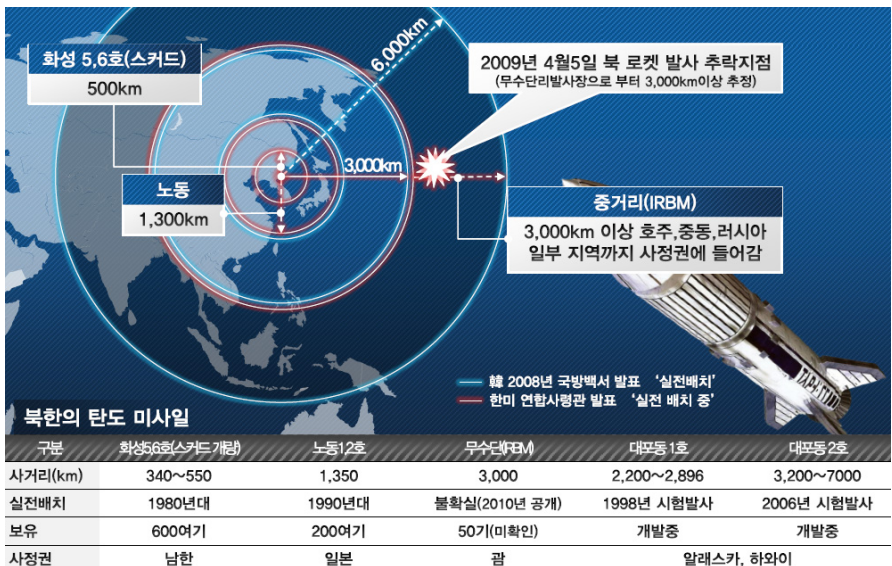
첫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을 그 핵심으로 한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최우선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붕괴방지가 안정에 유리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붕괴 시 난민들의 대량유입으로 정치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 및 그로 인해 중국에 미칠 파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원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 개혁을 모방하여 어느 정도의 개방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사이에 김정일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도록 한 것과 경제 협력과 원조를 제공한 것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북한 전체를 관리하고, 한반도 문제를 전체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는 가능하며 핵은 북한이 안보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미·중·러가 동시에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핵 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중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한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있어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보다 먼저 북한 체제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나친 대북 압박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나 식량을 중단하라는 것은 많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으로 이어져 중국과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진행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반대하고 UN 안보리를 통해 북핵 실험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하나 실제 북한 제재에 대해 유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중국이 엄중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UN의 제재에 동참했던 것은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전략적 입지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북한과 경제적 친밀도가 높은 남한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정책을 취하고자 시도 중이다. 이것은 정치·경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화 등 넓은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수는 미국이다. 2011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내용 또한 그 핵심이 미·중의 공동이익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때문에 중국의 대미관계 기본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있고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활적인 이익이 걸린 미국과의 관계 안정보다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구축 없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중국은 핵 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그 어떠한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것도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도 반대하고 있다.

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중국이 북한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원하는 이유는 북한의 붕괴가 초래할 체제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원조 파트너로서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예상치 못한 체제붕괴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대북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정치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관계 역시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중이 대립할 때, 통일한국은 굳이 그 어느 쪽도 지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혹,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휴전선 이남에 한정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안정을 찾아갈수록 한국 내에서 미군 감축 혹은 철수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립국임을 굳이 선언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부터는 자연스럽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책도 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고, 여전히 미국만을 지지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중국 국민에게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아주 다양하다. 첫째, 지역 충돌에 연루될 우려가 없으므로 중국이 진정으로 ‘화평굴기’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회피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정치·경제의 잠재력은 증가하겠지만 주변 국가의 힘의 배분 상 강대국 효과는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중국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주한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할 이유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안전에 유리한 것이다.²⁹⁾

중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공포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장벽이 없어질 경우 미군이 직접 중국 동북지방에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은 완전한 개혁개방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은 곧 이른 시일 안에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북의 태도는 통일 전까지 중국에 전략적 자산보다는 골칫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³⁰⁾ 그런 점에서 북을 미·중 대립의 완충지대로 남겨둔다는 전략도 현대전에서는 별

〈표 III-10〉 한·중·일의 10대 수출대상국 (2010)

(단위: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3	총 누계
대중국 (건수)	4,525 (4,685)	7,100 (4,594)	4,864 (3,278)	2,676 (2,113)	4,415 (2,286)	4,874 (2,179)	1,481 (424)	51,705 (45,007)
대한국 (건수)	40 (334)	385 (364)	336 (389)	161 (538)	414 (616)	651 (403)	96 (147)	3,833 (7,679)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주) 1. 대중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부터 2012년 1~3월

2. 대한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부터 2012년 1~3월

3. 한국의 대중투자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건수가 포함된 수치임.

로 의미가 없다. 또한, 미국의 육군이 중국 영토에 발을 디더놓을 리도 만무하다.

역사적 선례를 통해서 볼 때,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이었다. 한반도가 분열되고 불안정하면 중국의 안전은 위협을 받았으며 심지어 전쟁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한반도가 분열되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어 지지와 도움을 받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도 유리하다. 남북한의 막대한 군비가 경제재건에 투입될 것이고, 군사적 대결구도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구상이 실현되려면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정치·경제적 안정이 한층 더 유리한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중 경협관련 2011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총 2,206억 달러(수출 1,342억 달러, 수입 8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서 무려 34.6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한·미 간 무역규모인 1,009억 달러와 한·EU 간 무역규모 1,031억 달러를 합친 2,040억 달러보다 166억 달러 많은 규모다.³¹⁾ 그만큼 경제 분야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에게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최

대 수입대상국이다. 이렇듯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동의 이익이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 한국의 평화통일 이념은 일정 정도 중국의 화평발전 요구에 부합된다.

특히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FTA도 연내에 협상을 개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경제통합 논의가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한·중 FTA는 그동안 한국의 대미편향 외교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일을 주축으로 한 해양세력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TPP 등 지역 통합의

〈표 III-11〉 한·중·일 투자금액 및 건수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1	중국	116,838	25.1	미국	283,184	18.0	중국	149,086	19.4
2	미국	49,816	10.7	홍콩	218,205	13.8	미국	118,199	15.4
3	일본	28,176	6.0	일본	120,262	7.6	한국	62,054	8.1
4	홍콩	25,294	5.4	한국	68,811	4.4	대만	52,207	6.8
5	싱가포르	15,244	3.3	독일	68,069	4.3	홍콩	42,145	5.5
6	대만	14,830	3.2	네덜란드	49,711	3.2	태국	34,092	4.4
7	인도	11,435	2.5	인도	40,879	2.6	싱가포르	25,146	3.3
8	독일	10,702	2.3	영국	38,776	2.5	독일	20,245	2.6
9	베트남	9,652	2.1	싱가포르	32,333	2.1	말레이시아	17,571	2.3
10	인도네시아	8,897	1.9	이탈리아	31,136	2.0	네덜란드	16,285	2.1
10대국 합계		290,884	62.4	합계	951,366	60.3	계	537,031	70.0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1 세계속의 대한민국』 (국제무역연구원, 2011), p. 133.

주도권에 대한 견제심리, 중화경제권의 외연확대, 전략지역에 대한 진출 교두보 마련, 역내 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 등 다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 FTA를 비롯한 한·중 경제 협력은 상호 의존관계를 증대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교·안보분야의 긴장요인을 완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표 III-12〉 한·중·일 교역액 및 투자누계

	한국		일본		중국		출처
3국간 교역액	對일본		對중국		對한국 *순위는 홍콩 제외시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진흥원 중국해관총서
	수입	683억불(2위)	1,834억불(1위)		1,672억불(2위)		
	수출	397억불(3위)	1,615억불(1위)		829억불(3위)		
	교역	1,080억불(2위)	3,449억불(1위)		2,456억불(3위)		
	적자	286억불(2위)	219억불(5위)		798억불(2위)		
	對중국		對한국		對일본 *순위는 홍콩 제외시		
	수입	864억불(1위)	397억불(6위)		1,946억불(1위)		
	수출	1,342억불(1위)	659억불(3위)		1,483억불(2위)		
	교역	2,206억불(1위)	1,055억불(3위)		3,429억불(2위)		
	흑자	478억불(1위)	262억불(3위)		[적자] 463억불(4위)		
3국간 투자액	對日 투자	2.6억불	對韓 투자	22.8억불	對韓 투자	6.5억불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원
	對中 투자	48.7억불	對中 투자	72.5억불 *10년	對日 투자	3.1억불 *10년	
3국간 투자누계	對日 투자	42.2억불 (‘68~‘11)	對韓 투자	282.6억불 (‘62~‘11)	對韓 투자	37.4억불 (‘62~‘11)	
	對中 투자	502.3억불 (‘68~‘11)	對中 투자	693.4억불 (‘83~‘10)	對日 투자	2.03억불 (‘83~‘10)	

출처: 『한·중·일 협력개황』 (외교통상부, 2012.5).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중국 동북부 안전의 전략적 완충지대이며, 한반도 형세의 긴장은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수 있어, 중국의 현대화 건설의 진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이 없으면 중국의 현대화도 최종적으로 실현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11년 1월 17일 방미 시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통일이 현상유지보다 한반도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실현을 위한 남북 양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것이 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유리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³²⁾ 중국의 대외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전략사도가 전환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다. 중국의 사회·문화적 이익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일 뿐 아니라, 역사·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지역이다. 중국의 근본적 국가이익은 ‘평화(平和)’와 ‘발전(發展)’으로 요약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국가안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고 주권과 영토의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22,000km의 육지경계선과 구소련 해체 이후 무려 15개 국가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한반도와는 1,4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다.

중국 주권이 미치는 960만km²에 달하는 중국영토 외에도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맺고 있으며, 일본과는 다오위다오(釣魚島)에서도 갈등관계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와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구가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중국은 기나긴 역사적 교류관계를 형성해 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갈등을 해소할 사회·문화적 기제가 많은 편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주요 영토분쟁 지역



출처: 『연합뉴스』, 2012년 7월 11일.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시키려면 한국과 역사·문화적 연대를 우선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는 통일한국의 경험을 대만통일 과정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1949년 대륙제패 당시까지의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공산당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 있다. 1945년 이후 국공내전 시기, 동북3성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측으로 참전한 조선인 수는 약 6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홍군 대장정’에 참가하여 중국 최초의 포병부대인 팔로군 포병단 단장을 맡은 이는 한국인 ‘무정’이었다.

중국 동북3성에는 약 2백만에 달하는 조선족들이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자치주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근면한 삶과 높은 교육열에 기반하여 다른 소수민족보다 중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 기준 ‘한국계 중국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39만 6,000명과 귀화자 등을 포함해 50만 명의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대부분의 수입을 중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의 20% 이상이 한국에 들어

전 세계 문화권 구분도



와 있는 셈이다.³³⁾ 조선족 중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는 2만 6,650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이 50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이 중국 동북3성 등에 사는 조선족 사회 속으로 스며들 경우,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이 생성될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성립되면, 중국은 북한 난민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 재건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의 인적교류는 1992년 수교 당시 10만 명을 갓 넘었던 양국 간 방문자가 2011년에 이르러 6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교류 규모도 교육, 관광, 금융, 투자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1992년 수교 당시,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37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현재,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4만 4,746명으로 늘어났고, 한국 내 전체 유학생의 2/3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8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한국에서 석사학위 취득자가 1,600명, 박사학위 취득 또는 과정을 마친 학생수가 1,259명이었다.³⁴⁾

중국 국가 교육부에 정식 등록된 한국어(조선어)학부는 70여 개에 달하나, 기타 사립대를 포함하면 약 200여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는 영어, 일본어학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워 중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한·중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만약 통일한국이 성립될 경우 그 규모는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것은 한류다.³⁵⁾ 1997년에 중국 CCTV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시작으로 2002년에 〈가을동화〉, 2005년에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HOT’ 등의 대중가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 김하인의 감성소설, 귀여니의 인터넷소설, 한국의 온라인게임 등이 중

〈표 III-13〉 한·중·일 인적교류 현황

	한국		일본		중국		출처
관광	수입	122억불	317억불('10)		216억불('10)		한국문화관광원 한국관광공사 UNWTO JNTO 중국국가여유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지출	150억불	243억불('10)		246억불('10)		
	입국	976만명	622만명		2,711만명		
	관광 경쟁력	32위	22위		39위		WEF
상호 방문객	韓·日		中·日		韓·中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중국국가여유국
	訪韓 일본인	329만명	訪中 일본인	373만명 ('10)	訪韓 중국인	222만명	
	訪日 한국인	166만명	訪日 중국인	96만명	訪中 한국인	419만명	
	합계	495만명	합계	469만명	합계	641만명	
3국간 유학생 (10.4.1)	중국 유학생	57,783명	한국 유학생	27,965명	한국 유학생	64,232명	교육과학기술부
	일본 유학생	3,876명	중국 유학생	('09) 79,082명	일본 유학생	('09) 15,409명	
한국 결연도시 (2010)	-		자매도시	90도시	자매도시	178도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우호도시	74도시	우호도시	270도시	
주간 항공편수	韓·日		中·日		韓·日		국토해양부 국제항공팀
	534편 상회(40개 노선) *김포-하네다 서틀편수 84회 포함		-		837편 상회 (52개 노선)		

출처: 외교통상부, 『한·일·중 협력 개황』 (2012. 5).

〈표 III-14〉 한류의 부침 및 진화과정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
시기별 특징	생성기 (1997~2000년 초)	확산 및 정체기 (2000년대 중후반)	신한류기 (2000년대 후반 이후)
주요지역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 중앙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본, 동남아, 중국, 유럽, 미국, 중남미
대표 콘텐츠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음악 H.O.T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아이돌 그룹의 K-Pop

출처: 진행남,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와 한국의 문화교류 전략,” (국제정치학회 주최 세계화시대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해외문화교류 특별 학술회의, 2011.11.25), p. 212.

국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류,’ ‘합한족(哈韓族),’ ‘한미(韓迷)’ 등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와 같이 한류가 중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섬세한 감수성과 가족애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에 기반하여, 소프트파워

〈표 III-15〉 국력의 세 가지 형태

분류	행위	주요 수단	정책
군사력	강제, 억지력, 보호	위협, 군사력 행사	강압적 외교, 전쟁, 동맹
경제력	유인, 강제	보상, 제재	원조, 매수, 제재
소프트 파워	매력, 아젠다 설정	가치, 문화, 정책, 제도	일반외교, 쌍무적 다변적 외교활동

출처: 유호근, “스포츠 교류와 국가이미지,” (국제정치학회 주최 세계화시대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해외문화교류 특별 학술회의, 2011.11.25), p. 97.

(문화, 외교)를 보유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 강대국을 넘어 세계 강대국으로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한·중 간에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연계성이 많다.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상에서 가장 협조적인 국가는 문화적 친밀도 면에서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 외,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IT를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긴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상호불신이 해소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지금의 한·중 관계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한·중 양국은 FTA 협상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시작했다.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한·중 FTA의 체결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의 인식과 이해관계



가.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

일본은 ‘미국의 방위 우선 아래에서 경제발전에 전념한다’는 ‘요시다독트린’ 구도 하에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³⁶⁾ 동아시아에서는 2008년 5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중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규정하고,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한국을 안보협력의 파트너로 명문화하

〈표 III-16〉 마일의 공통전략 목표

세계적 차원의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인류보편적 가치 추진 ○ 국제평화협력 활동 및 미·일 파트너십 강화 ○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 추진 ○ 테러의 방지 및 근절 ○ 에너지자원의 안정성 유지
지역적 차원의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및 러·일 관계의 정상화 ○ 대만해협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해결 ○ 핵, 탄도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 북한과 여러 문제들에 관한 평화적 해결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출처: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p. 209.

면서 외교·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부터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시하고, 2009년 민주당 정권 등장 이후부터 영토·영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 메이지유신 이후 자체의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으나, 패전함으로써 전승국들의 요구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헌법 제9조 제1항에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명기하고, 제2항에서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불보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불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전략은 미국의 해양전략의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받아 왔다.³⁷⁾

때로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가지길 원하는 일본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미국에 의지한 일본

의 주요 국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국제평화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태도를 취한다. 둘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표 III-17〉 미·일 전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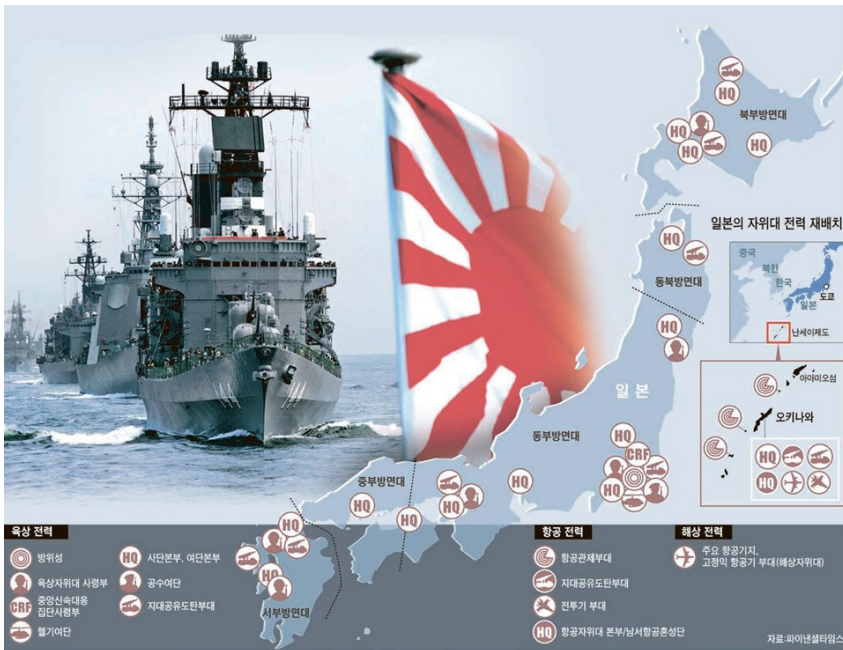
대화채널	참석자		목적	근거 등
	미국	일본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SC) 2+2회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외무대신 방위청장관	미일 정부 간의 이해 촉진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안보의 기반이 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미일 안보조약 제4조 등을 근거로 1960년 1월 19일 미 국무장관과 일총리대신 간의 왕래 서신에 입각하여 설치
미일안전보장고위사무래벨협의 (Security Subcommittee: SSC)	참가자는 정해져 있지 않음	참가자는 정해져 있지 않음	미일 양국 간 관심 있는 안전보장 상의 제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	안보조약 제4조 등
방위협력소위원회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SDC)	국무차관보 국방차관보 주일미대사관 주일미군통합참모본부 태평양미군 대표	외무성북미국장 방위청방위국장 및 운영국장 통막의 대표	긴급 시 자위대와 미군 간의 정합성 있는 공동대처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 등, 미일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협의	1976년 7월 8일 제 16회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하부기구로서 설치. 이후 1996년 미일 차관급 협의 시 개편됨
미일 합동위원회	주일미군 참모장 주일대사관 공사 및 참사관 등	외무성 북미국장 방위시설청장관 등	지위협정 실시에 관해서 협의	지위협정 제25조

출처: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p. 208.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FTA를 추진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인권이라는 가치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넷째, 학술·문화·교육을 기본으로 국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전략, 즉, 동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므로 중국의 전략과 충돌을 빚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1997년에 결성된 ‘ASEAN+3’와 ‘ASEAN+1’의 체제가 병행되면서 지역정책의 주도권에 대한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³⁸⁾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주요 대치선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으며,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보조축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³⁹⁾ 일본의 방위대강 역시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전력



출처: 『뉴데일리』, 2011년 8월 27일.

일본의 방위대강은 1976년에 처음으로 책정되어 1995년과 2004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04년의 방위대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WMD나 탄도미사일의 확산, 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과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가 이뤄지면서 2010년 방위대강이 재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한국과 호주와의 협력을 우선하고, ASEAN과 같은 지역기구와의 협력이 차선이며,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마지막 순위로 설정하여,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한마디로, 국가방위정

〈표 III-18〉 ‘방위대강 2010’의 안보목표와 전략

일본의 안보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본에 대한 위협방지 및 억지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의 안정화/국제안보환경의 개선 ③ 세계의 평화/안정 및 인간안보에 기여
일본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통합 협력체제 구축 •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활동을 통한 자위대 운용능력 확대 • 동적 방위력의 정비(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동맹국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동맹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의 전략목표, 역할/임무/능력 등에 대한 전략대화(정책조정) - 정보, 주변사태 협력을 포함 운영협력 추진 - 탄도미사일 방어, 장비/기술 등 분야 협력실시 - 확장역지의 신뢰성 제고 및 정보보전을 위한 협의추진 - 주일미군 재편지원
국제사회에서의 다층적인 안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호주와의 양자/다자간 협력강화 - 중국/러시아와 안보대화 및 교류 증진(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 ARF, 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 협력관계 구축 •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테러 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ODA의 전략적 활용 - EU, NATO와의 협력강화(국제안보 문제 공동 대처) - 국제공공재 유지강화, WMD 확산방지

〈표 III-19〉 일본 민주당의 주요 외교 공약

<p>외교노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생 가능한 '우애외교', 유엔 결의중시
<p>대미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하지만 대등한 동맹관계 •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 제기 • 주일미군 재편과기지 이전 방식 수정
<p>아시아 외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 한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p>북한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보유 절대 인정하지 않음 •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화 시도 병행

책의 우선순위를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북한을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중대한 불안정요인'으로 규정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군사력의 근대화를 통하여, 특히 해군력의 증강을 통하여 인근 해상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군사와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투명성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2011~2015년 동안 약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상자위대를 축소하고 해상·항공자위대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할 것을 명시했다. 일본의 신방위대강은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방위전략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나, 막강한 규모의 자위대를 갖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가 2012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

(7,110억 달러), 중국(1,430억 달러), 러시아(719억 달러), 영국(627억 달러), 프랑스(625억 달러)에 이어 59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본해군은 아시아에서 미군을 제외하고 두 번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⁴⁰⁾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세 가지 기본체제를 공유함으로써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체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1세기 한·일 양국은 첨단 산업기술과 자유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상의 이익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그만큼 용이하지는 않다.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언제든 가시화될 반일감정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미·중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일본의 국가 내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들은 매우 수동적이며,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가져오는 전략적 결과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과정이 일본의 국가전략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의 국가전략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모습보다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은 통일한국이 최소한 일본에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국가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0〉 북·일 수교교섭 일지



• 1990년 9월	일본 자민·사회당 방북단, 북한 노동당과 3당 공동선언 조인
• 1991년 1월	1차 국교정상화 교섭
• 1992년 11월	8차 국교정상화 교섭, 일본의 '이은혜 문제' 조사요구에 북측 반발로 협상 중단
• 2000년 10월	11차 국교정상화 교섭, 성과도출 실패로 회담 중단
• 2002년 4월 29일	적십자회담 재개, 북한 거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추진 합의
• 2002년 8월 18일	적십자회담,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합의 및 일본인 실종자 6명 안부 확인
•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김정일 위원장 정상회담(평양)
• 2002년 10월 24일	일본, 납치생존자 5명 영주귀국 결정
• 2002년 10월 29일	수교협상 2년 만에 재개(쿠알라룸푸르)
• 2004년 5월	북·일 2차 정상회담(평양)
• 2004년 11월	북한, 방북 중이던 일본 대표단에 메구미 유골 전달
• 2004년 12월 9일	일본 니가가 경찰, 메구미 유골 DNA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발표
• 2004년 12월 16일	북한, 허위 주장이라며 유골반환 요구
• 2005년 9월 11일	고이즈미 총리 자민당 총선에서 압승
• 2005년 11월	북·일 수교회담 재개(베이징)
• 2005년 12월 24일~25일	북·일 정부 간 협의서 납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국교정상화 등 3개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 2006년 2월 4일	북·일 수교회담(베이징)

나. 일본의 정치·경제적 이익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심리적 거리로 볼 때, 가깝고도 먼 나라에 해당한다. 임진왜란과 한일병합이 양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도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 간에는 잠재된 갈등이 존재한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 왔다. 이 밖에도 위안부 문제와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한국주도의 통일한국을 지지할 것이다. 일본의 안보 전략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주한미군이 일정기간 주둔하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지역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나친 군비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일본이 경제발전예 집중할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미군이 완전히 물러난다면 일본은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낄 것이고 보통국가의 필요성을 한층 더 자각하게 될 것이나, 당분간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G2(Group of 2)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강 이남지역에 최소한의 주한 미군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일본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국교정상화를 단행하며 약 10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100억 달러는 북한 국가재정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나, 일본에게는 국방예산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적은 비용으로 안보불안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음을 경계할

〈표 III-21〉 한국의 마일 10대 수출입품목 (2010)

(단위: 백만 달러)

	미국		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무선통신기기 9,149	반도체제조용장비 3,618	석유제품 3,603	철강관 5,621
2	자동차 6,741	반도체 3,286	반도체 3,335	반도체 4,456
3	자동차 부품 4,120	항공기 및 부품 3,267	철강관 2,003	플라스틱제품 4,251
4	반도체 3,639	식물성물질 2,111	무선통신기기 1,408	반도체제조용장비 3,075
5	석유제품 3,449	곡식류 1,395	플라스틱제품 895	기타화학공업제품 2,024
6	컴퓨터 1,364	합금철선 및 고철 1,20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3	유리제품 1,942
7	섬유 및 화학기계 1,310	계측제어분석기 1,109	금은 및 백금 774	평판디스플레이제조 용장비 1,930
8	고무제품 1,299	원동기 및 펌프 1,025	합성수지 625	합금철선 및 고철 1,785
9	철강관 및 철강선 1,213	정밀화학원료 913	정밀화학원료 594	광학기기 1,718
10	항공기 및 부품 1,063	전자응용기기 768	컴퓨터 585	원동기 및 펌프 1,655
총계	49,816	40,403	28,176	64,296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사고는 기우에 불과하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가이며, 현재 남북 간의 과열된 군비경쟁도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군사적으로 대치된 국가로 변모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의 남북한 병력을 근거로, 통일한국이 180만 병력의 상비군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과 명분도 없을뿐더러 주변 강대국들이 이를 인정할리도 없을 것이다.

한편, 과거 일제 36년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일부 일본 국민들도 있다.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과거의 가해자가 거꾸로 언젠가는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과거사에 기반한 '통일한국 위협론'은 일부 일본 우익들의 지나친 억지논리이다. 오히려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할 때, 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가 완충지대로 남게 되어 중국을 경계하는 일본으로서는 유리한 안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북한지역 재건사업에 일본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표 III-22〉 한·일 투자금액 및 건수

(단위: 백만 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3	총 누계
대일본 (건수)	287(390)	804(461)	638(376)	416(347)	345(371)	258(263)	297(87)	4,520 (4,028)
대한국 (건수)	2,111(584)	990(470)	1,423(460)	1,934(370)	2,083(422)	2,284(499)	919(142)	29,182 (11,857)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주) 1. 대일본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 이후부터 2012년 1~3월
- 2. 대한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 이후부터 2012년 1~3월
- 3. 한국의 대일투자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건수가 포함된 수치임.

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도 타격을 받게 되며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이익 역시 유럽과 중국, 러시아에게 양보하게 될 것이다. 한·일 FTA도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듯, 통일한국은 확장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 역시 ‘현재 일본 기업가들이 보는 한국·일본의 비즈니스는 통합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과 일본을 합쳐 2억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돼 동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다. 일본의 사회·문화적 이익

오늘날 안보개념은 과거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 및 국익의 수호에 안주하던 전통적 국가안보개념에서 발전하여,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인간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총체적 안위를 지키려는 포괄안보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일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반테러,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포괄안보시대의 등장은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인터넷 등 통신매체와 기술력의 향상, 민족·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의 심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일 간에는 비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입헌제와 입헌군주제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

교와 불교문화, 그리고 거주 양식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양국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대는 과거 역사적 반목을 상쇄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로 과거 조선통신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조선통신사의 통신이란 말은 ‘신의를 교환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통신사 사절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는 해로로, 에도까지는 육로로 이동하였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각번의 향응을 받으면서 6개월에서 1년여에 걸쳐 일본열도를 여행하였다. 그 규모는 1회당 300~500인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규모 문화사절단의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시켰다. 조선통신사는 한·일 간 사회·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경제 교류와 달리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정치적 이슈와 거리를 두기 때문에 국가 간 우호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가 2003년 〈겨울연가〉를 필두로 일본에 상륙하여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도 한·일 양국의 신뢰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한류는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였는데, NHK는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35억 엔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동북아시아 3국은 오랜 역사·문화적 교류에도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와 과거사 문제로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과거에 얽매인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 촉매제가 바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될 것이고, 이에 기반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은 1999년 ‘ASEAN+3’를 계기로 최초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08년부터는 3국 간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3국간 4차례 별도 정상회의와 11차례의 ‘ASEAN+3’ 계기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중·일 교역액은 1999년 약 1,300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약 6,900억 달

〈표 III-23〉 한국의 미·중·일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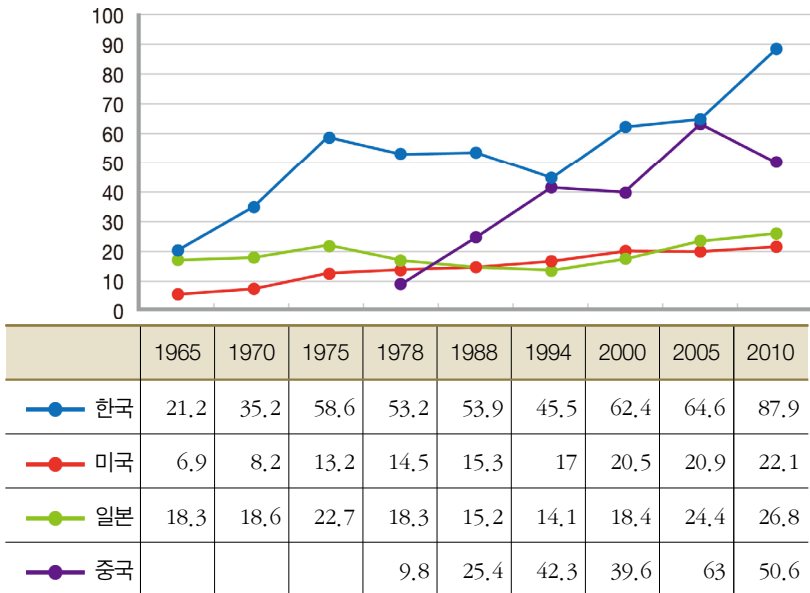
연도	국가	수출			수입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일본
1970		395 (47.3)	-	234 (28.0)	585 (29.5)	-	809 (40.8)
1975		1,536 (30.2)	-	1,293 (25.4)	1,881 (36.9)	-	2,434 (33.5)
1980		4,607 (26.3)	-	3,039 (17.4)	4,890 (21.9)	-	5,858 (26.3)
1985		10,754 (35.5)	-	4,543 (15.0)	6,489 (20.8)	-	7,560 (24.3)
1990		19,360 (29.8)	-	12,638 (19.4)	16,942 (24.3)	2,268 (3.2)	18,574 (26.6)
1995		24,131 (19.3)	9,144 (7.3)	17,049 (13.6)	30,404 (22.5)	7,401 (5.5)	32,606 (24.1)
2000		37,611 (21.8)	18,455 (10.7)	20,466 (11.9)	31,828 (19.8)	12,799 (8.0)	29,242 (18.2)
2005		41,343 (14.5)	61,915 (21.8)	24,027 (8.4)	30,586 (11.7)	38,648 (14.8)	48,403 (18.5)
2010		49,816 (10.7)	116,838 (25.1)	28,176 (6.0)	40,403 (9.5)	71,574 (16.8)	64,296 (15.1)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1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제무역연구원, 2011), pp. 87~100, 자료 재가공.

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3국은 한·중·일 FTA 협상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존중하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협력체제가 이룩되어야 동아시아 경제통합, 나아가 세계평화 및 안정에도 달할 수 있다.

전쟁으로 얼룩진 근대사를 극복하고, 인류 전체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술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하고, 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배함으로써 한국인의 주권과 인권을 유린한 역사가 있고, 남북 분단에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의 성립은 식민지배 이전의 역사를 회복하는 당연한 역사의 순리이며, 여기에 일본이

〈표 III-24〉 한·미·일·중 무역의존도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적극 동참하게 될 경우 분단의 원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도 사라지게 되니, 미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유익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한·일 문제만큼 복잡한 사연이 있고, 그 해법의 단초는 통일한국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의 입장 및 과거사 참회의 모습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만약 한·일 간의 사회·문화적 신뢰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면, 일본이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탈아주의(脫亞主義)’로부터 ‘입아주의(立亞主義)’로 회귀하여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장한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중·일이 협력할 경우, 지금까지 서구 중심이었던 세계경제 기반은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것이고, 동아시아가 협력관계로 진입하게 된다면,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닌 미국경제의 부활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러시아의 인식과 이해관계



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목표

초강대국 소련의 전통을 계승한 러시아는 2012년 5월 제3기 푸틴(Vladimir Putin)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걸고 냉전당시의 G2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지 하에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종식시키고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세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협력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 일본 3국을 모두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평화

와 안정, 그리고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면서 시베리아 및 연해주 개발과 러·북·한 가스관 사업 등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기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푸틴의 등장과 함께 ‘강한 러시아의 구현’으로 귀결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은 예상했던 대로 3선에 성공하여, 6년간 러시아를 이끌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며 2기 집권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2000년에 채택된 「국가안보개념」 대신 2008년 6월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전략을 지시함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 2020」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⁴¹⁾ 러시아의 국가전략은 ‘러시아의 부활’을 전제로, 경쟁상대인 ‘미국’을 대상으로 전략적·공격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⁴²⁾ 또한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적시하고, 그 일환을 WMD의 비확산, UN헌장을 무시한 군사력 사용의 방지, 에너지자원에 대한 통제를 천명하고 있다. 제2기 푸틴체제도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방측의 대러 봉쇄에 대응하고, 포괄적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지속

〈표 III-25〉 주변국 군사력 현황

구분 (명)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육군	553,044	360,000	1,600,000	140,251
해군	329,390	142,000	255,000	42,431
공군	334,342	160,000	330,000	43,652
기타	해병대 198,513 해안경비대 43,598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50,000	제2포병 100,000	통막 2,202
계	1,458,887	1,027,000	2,285,000	228,536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0.2) 등 관련자료 종합
자료: 국방부 〈www.mnd.go.kr〉.

적인 경제발전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외교(Atlantic diplomacy)'로 대표되는 대서방 관계에 핵심적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 이는 나폴레옹(Napoléon)의 러시아 침공, 제1·2차 세계대전 등 유럽지역의 군사안보적 요인이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요인에 관련이 있다. 유럽지역의 안보질서 재편이 러시아의 핵심적 관심사에 해당한 반면, 동북아에서의 질서변화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 러시아가 중시하는 외교안보상 주요 주제가 서방의 동유럽지역에 대한 NATO 확대에의 대응,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CIS)지역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미국과의 효과적인 군비통제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 중국의 부상, 미·일 동맹의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러시아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협력관계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전방위 외교차원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여, 이 지역에서 주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및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러·중 관계의 확대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력의 확보를 위한 군 현대화 작업에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적 자세변화는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다극구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경우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과는 일맥상통한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2월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의 핵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⁴³⁾

2010년 작성된 「아태 안보협력회의 보고서」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구상이 잘 드러나 있다.⁴⁴⁾ 러시아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통일한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첫째, 통일된 한반도는 대외관계에서 중립 노선을 견지하고, 외국군이 주둔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유럽지역에서 NATO의 확대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로서는 통일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특정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비블록 중립국 노선을 지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표 III-26〉 3대 세습체제 비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단기 : 안정화	
		중기 : 불안정화	
		· 경제난 → 유효성 저하,	
		· 핵무기고수 → 연대성 약화	
		그 결과 정통성 약화 및 통제성 약화	
출생지	평남 대동군(현 평양) 부 김형직 모 강반석	백두산 밀영(북한주장) 부 김일성 모 김정숙	평양 부 김정일 모 고영희
생존기간	1912.4.15~1994.7.8	1942.2.16~2011.12.17	1982.1.8~(북 주장)
최고통치자 오른 시점	1950년 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8년 국방위원장 재추대(헌법 개정)	2010년 9월 대장 칭호 (후계자)
정치사상	주체사상	선군사상	?
통치방식	내각 위주	군 위주	당 위주
좌우명	이민위천(以民爲天)	선군후로(先軍後勞)	?
후계구도	사망 20년 전(1974년) 장남 김정일 후계 지명	사망 1년 전(2010년) 삼남 김정은 후계 공식화	
남북 정상회담	없음	2차례 (2000.6 김대중 대통령 2007.10 노무현 대통령)	

을 맺고 싶어한다. 이는 국경지역에 대한 안보불안의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통일된 한반도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 비핵국가여야 한다. 보고서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통일의 형태도 적시하였다. 그것은 북한의 붕괴가 초래할 내전의 상황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무력적 수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중국이 견제한 상황에서 이는 너무 지나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나.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이익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중과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에 대한 현실적 개입수단이 매우 제약돼 있는 구조적 요건과 관련 있다. 그럼에도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군사강국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국제적 안전보장 과정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체제의 근간을 만든 이들은 소련과 고려인들이었다. 이들은 1945년 8월부터 1949년 1월 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27(8)명이 입국하여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조했다. 각부 장관 자리는 다른 계파에게 양보하는 대신,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 자리는 거의 소련과 고려인들로 채워졌다. 또한, 구소련은 한국전쟁 2년 8개월 동안 12개 비행사단과 2개 고사포사단, 1개 항공기술사

단을 중국 영내에 주둔시키고 전쟁에 참여했다. 참전한 연인원은 7만 2,000명이었으며, 조종사 중 70%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정예병들이었다. 참전기간 동안 전사자는 2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외에 뇌염으로 200~3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며, 통일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다.

과거 북·러 관계는 동맹관계였다. 그러나 구소련이 와해된 1992년 1월 러시아는 <북소동맹 제1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북한에 제기하였고,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함으로써 동 조약의 효력은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했다. 그 후, 북한과 러시아는 1999년

〈표 III-27〉 비군사적 경제원조 (1945~1960)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유형	1945~1953	1954~1956	1957~1960
소련	증여	143.3	250.1	121.5
	차관	53.0	-	198.5
	면제	-	26.5	190.0
중국	증여	-	336.0	-
	차관	120.0	-	157.5
	면제	-	120.0	-
기타 공산국가	증여	-	161.4	126.3
	차관	3.9	-	-
	면제	3.9	-	-
총 계	증여	143.3	747.5	247.8
	차관	176.9	-	356.0
	면제	3.9	146.5	190.0

출처: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1994), p. 368.

3월 17일 군사개입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통일한국이 출현하면, 양자동맹 관계는 필연적으로 전면 재검토되거나 또는 다자동맹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양자동맹 재검토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적대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러시아는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다자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미군의 독일 주둔을

유라시아 횡단 철도



출처: 『조선일보』, 2012년 6월 14일.

용인한바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급격한 세력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미군의 제한적 주둔은 러시아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한국은 북한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비롯, 노후경제시설 재건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이 때 러시아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북한정권 수립 초기인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소련은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기타 공산국가들도 1억 6,100만 달러를 증여하여, 이 기간 동안 총 7억 4,75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는 당시 북한 총예산에서 세입 11억 5,600만 달러의 64.6%에 상당한 금액이며, 기본 건설투자 총액 4억 1,673만 달러의 179.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북한의 산업기반시설인 수풍수력발전소의 복구, 성진제강소와 김책제철소, 남포제련소, 홍남비료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등과 같은 대형 공업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거의 소련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낙후된 극동지방의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는 위기보다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실현으로 인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⁴⁵⁾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통합이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연결하는 문명통합을 의미한다. 이의 실현은 TKR과 TSR을 연결함으로써 가능하다. TKR-TSR 연결문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후 러시아는 북한철도를 네 차례에 걸쳐 정밀실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⁴⁶⁾

북미, EU와 함께 한·중·일 3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에 해당하며,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은 이 물동량의 상당

〈표 III-28〉 원유수입량과 소비국가 (2010)

(단위: 1,000 bpd)

	원유수입량		정제석유수입량	
	국가	수입량	국가	수입량
1위	미국	476.1	네덜란드	17,671.6
2위	중국	239.3	미국	6,446.0
3위	일본	178.7	일본	5,428.5
4위	한국	118.6	프랑스	4,690.7
5위	독일	91.2	한국	2,606.5
6위	이탈리아	79.3	독일	2,417.5
7위	프랑스	59.8	스페인	2,337.2
8위	캐나다	51.8	멕시코	2,255.5
9위	영국	50.4	영국	2,080.0
10위	싱가포르	41.2	벨기에	2,029.5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부분을 철도수송으로 흡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북한이 구소련에 진 채무액을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약 11억 달러의 채무는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북한 내에서 추진할 북·러 공동프로젝트, 이른바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철도연결과 아울러 남북한 통일은 러시아 극동지방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러시아에게는 매력적이다. 극동지역은 지정학적 및 경제적 여건상 사실상 러시아 자력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극동지역의 낙후된 상황의 개선이 지연되어 왔다.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지역의 자본

〈표 III-29〉 러시아 에너지자원 수출액 및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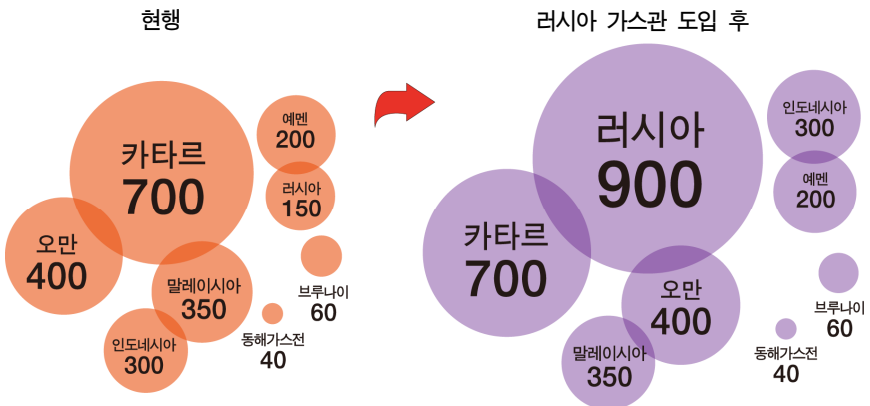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에너지자원 총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2000	252.7	9.7	166.4	6.4	101.2	4.2	528.3	20.3
2003	396.8	9.2	199.8	4.6	140.6	3.3	737.2	17.1
2006	1,022.8	10.3	438.1	4.4	446.7	4.5	1,907.6	19.3
2009	1,005.9	8.2	419.7	3.4	481.4	3.9	1,9071.1	15.5
2010 (1-9)	989.3	9.3	327.5	3.1	511.3	4.8	1,828.2	17.1

출처: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과 기술, 북한지역의 노동력 등의 결합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및 중국 등 국제적인 협력구도도 확대될 수 있다.

〈표 III-30〉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의존도



주: 장기계약 물량 기준(단위: 만톤)
출처: 『경향신문』, 2011년 9월 15일.

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전 등 지하자원의 개발과 한·중·일에 대한 수출도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미 가스전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한·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중·일과 러시아의 협력 하에 시베리아 지역의 지하자원개발과 소비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은 연간 3,3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로 수입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79억 달러(약 20조 원)로서, 전체 에너지 수입의 14%에 해당된다. 현재 액화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1,000m³ 당 약 400달러 수준인데 비해, 만약 유럽의 가격 수준인 200달러 수준에 도입된다면 연간 약 2조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액에

〈표 III-31〉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국가 (2010)

(단위: 백만 cubic feet)

	천연가스생산		천연가스소비	
	국가	생산량	국가	소비량
1위	미국	611.0	미국	683.4
2위	러시아	588.9	러시아	414.1
3위	캐나다	159.8	이란	136.9
4위	이란	138.5	중국	109.0
5위	카타르	116.7	일본	94.5
6위	노르웨이	106.4	캐나다	93.8
7위	중국	96.8	영국	93.8
8위	사우디아라비아	83.9	사우디아라비아	83.9
9위	인도네시아	82.0	독일	81.3
...	알제리아(10위)	80.4	한국(22위)	42.9

출처: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III-32〉 극동러시아 주요무역 거래국 (2012년 1-6월)

(단위: 천 달러, %)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입(비중)
한국	3,641,613.35 (33.2)	923,654.79 (19.1)	4,565,271.14 (28.8)
중국	2,202,761.13 (20.1)	2,191,472.96 (45.3)	4,394,234.08 (27.8)
일본	2,867,259.83 (26.1)	422,159.74 (8.7)	3,289,419.58 (20.8)

출처: 극동러시아 관세청.

대하여 약 11.3%의 비용절감을 의미한다. 북한은 통과세로 연간 약 1억 7,000만 달러의 현금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는 가스 판매 수입으로 매년 20억 달러를 거둬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관계 개선 및 발전은 러시아와 한·중·일 관계의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적, 경제적 개입수단에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러 3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우군임에는 틀림없다. 러시아는 주변 4국 중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지 않는 국가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적대 구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동반자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셋째, 두만강 자유무역지대개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사업 등 대

형 국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한반도의 통일로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통일한국은 이 지역의 현존 세력관계, 특히 러·일 간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⁴⁸⁾

다.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이익

한·러의 역사관계는 주변 국가의 관계보다 비교적 우호적이다. 한·일 간의 뿌리 깊은 적대의식, 중국에 대한 의심 등은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통일한국의 성립은 동북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우산 또는 완충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문제의 배경에는 사회·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회·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러시아에는 130여 개에 달하는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상이한 권리를 가지는 위계질서에 기반한 행정편제에 속해 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총 83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21개 공화국은 민족단위로 편제되어 있으며, 헌법과 법률, 공식어의 사용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극히 부족한 국가이나, 세계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총면적은 1,707만km²에 달하며, 이는 세계 육지 면적의 1/8, 한반도 면적의 약 75배에 해당한다. 한편, 인구밀도는 극히 낮아서 1km²당 인구가 9명이 채 안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5억 명 정도가 러시아의 적정 인구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1억 4,5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매년 30~80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이 될 때 러시아 인구는 현재의 40%

수준인 9,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러시아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베리아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중국화’는 안전보장 측면에서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베리아를 개발하여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법뿐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사업은 한·중·일 3국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 및 인적왕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영향도 현저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럽러시아에 비해 낙후된 문화수준에 머물고 있는 극동지역의 사회·문화 인프라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기술 관련 인적교류와 함께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러시아의 아시아적 위상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세 부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첫째 부류는 150여 년 전에 러시아로 이주해 온 한인의 후예들로 보통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부류는 해방 후 소련 당시부터 왕래하기 시작했던 북한인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1990년 한·러 수교를 계기로 진출한 남한인들이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중국으로부터 획득하였을 때, 이 지역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자 이주한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다. 1869년엔 극동러시아 지역인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거주한 고려인들은 그 지역 전체인구의 20%나 됐다. 1897년 당시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한국말을 하는 인구수는 2만 6,005명(남자: 1만 6,225, 여자: 9,780)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한국인의 러시아지역 이주는 계속 증가해 1914년에 6만 4,309명, 1923년엔 10만 6,817명, 1937년엔 16만 8,259명이었으며, 당시 학교가 무려 380개나 설립됐고, 2개 사범학교, 1개 교육학교, 3개의 병원, 1개 극장, 또 6개의 저널과 7개의 신문이 발간됐다. 1989년 소련연방이 붕괴되기 전까지 약 44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했다. 현재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시베리아로 이주시킨다면 인구부족 현상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러시아는 구소련시절 북한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강행하자, 러시아의 대북 인식은 많이 변모되었다. 1997년 조사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13%), ‘보통이다’(20%)라는 의견보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53%), ‘매우 못하고 있다’(13%)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통일국가가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본주의체제’(47%)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47%)가 다수를 점하였다.⁴⁹⁾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제관계연구소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2030년 전략적 세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심의 통일국가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⁰⁾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할 경우 미래가 없을 것이고,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예상의 근거는 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러시아 전문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고 동북아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게다가 통일 한국은 거대한 시장 출현을 통해 러시아의 대외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에너지·철도·전력 분야 등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이 동북아 지역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만들어 줄 것이다.⁵¹⁾

또한 보고서는 2020년대 후반 통일의 도래가 예상되는 실질적 단계의 경우, 한국이 북한지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북한 임시정부 설립과 아울러 북한군 무장해제 및 경제현대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는 한국에 흡수될 것이며,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구체제 지지자들이 통일한국을 떠나 중국이나 또는 일부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했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7,600만~7,7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통일은 남한지역의 고령화 및 신생아감소 문제를 해소하여, 인구 불균형이 완화될 것을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아울러 2010년 1조 달러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조 7,000억 달러, 2030년 2조 3,000억 달러로 급증해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⁵²⁾ 이는 소련체제 붕괴 직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된 초기의 입장과는 상당부분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1) 로버트 J. 아트, 김동산·이석중 공역, 『미국의 대전략』 (피주: 나남출판, 2005).
- 2) Joseph S. Nye Jr.,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s," *Foreign Affairs*, Vol. 78, No. 4 (1999);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2000).
- 3) Joseph S. Nye Jr., "Redefining National Interests,,";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 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 5) David E. Sanger and Peter Baker, "New U.S. Strategy Focuses on Managing Threats," *The New York Times*, May 27, 2010, <http://www.nytimes.com/2010/05/28/world/28strategy.html?_r=1>.
- 6) 제임스 스타인버그 당시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순방을 준비하던 2010년 10월 13일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James Steinberg and Michael D. Swaine,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S. Policy Toward Asia," (Speech at Carnegie Endowment, Oct. 13, 2010),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
- 7) Merle David Kellerhals Jr., "Clinton Outlines U.S. Policy in East Asia, Pacific," (IIP Digital, November 10, 2011),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article/2011/11/20111110172816elrem0.9942438.html>>.
- 8) Joseph S. Nye, "Obama's Pacific Pivot," (Project Syndicate, December 6, 201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bama-s-pacific-pivot>>.
- 9) "아시아에서 정치적 변화의 바람: 도전과 기회," 『중앙일보』, (CSIS 연례포럼), 2012년 5월 24일.
- 10) Victor Cha,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March 2010). pp. 1~14.
- 11) Hillary Clinton, "We Are Ready to Listen to Asia," (Speech at the Asia Society, February 13, 2009), <<http://asiasociety.org/policy/strategic-challenges>>

/us-asia/hillary-clinton-we-are-ready-listen-asia).

- 12) *Ibid.*
- 13) ‘핵 없는 세계’와 관련된 내용은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흐라드차니 광장에서 연설문 참조,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Remark at Prague, Czech Republic,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Barack-Obama-In-Prague-As-Delivered>.
- 14) Charles L. Pritchard, *et al.*,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 15)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 16)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merica’s National Interests,” (Washington D.C.: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amematinter.pdf>>.
- 17) 골드만삭스의 2007 세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0,294달러로 미국의 91,683달러에 조금 뒤지는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18)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f National Security,” (Remark at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y 21,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On-National-Security-5-21-09>.
- 19) 『서울신문』, 2012년 6월 15일.
- 20)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
- 21) 한국관광공사, 『2010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2011), p. 12.
- 22) 2011년 현재 16명의 북한 국적 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국, 국무부, 국제교육연구소(IIIE) 등에 따르면, 이들 중 13명은 대학의 학부생이고, 나머지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등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유학생은 100명 이상이었다. 특히 2000년과 2004년에는 각각 2백1명, 2백19명으로 2백 명을 넘기기도 했다. 『시사저널』, 1164호 (2012.2.8).
- 23) 나라지표, <www.index.go.kr>.
- 24)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 p. 84.
- 25) 이번 백서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에서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9년 7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언급한 이후 중국의 국내외 문건에서 공식화되어 등장하고 있다.

『解放日報』, 2011년 9월 7일.

- 26) 文政仁, 『中国的国家安全论-与中国知识精英的深层对话』(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12), pp. 107, 135.
- 27) 2010년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UN총회에서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라고 언명하면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2010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로 인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중국 위협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12월 중국 외교의 수장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향후 5년간 중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 “평화적 발전의 길”이란 장문의 글 역시 이러한 시각을 잘 담고 있다. Bingguo Dai, “Stick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China Daily*, December 13, 2010.
- 28) 이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글은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Spring 2010).
- 29) “朝鮮同意最符合中方利益,” 『多维新聞』, 2011년 12월 24일, <<http://opinion.dwnews.com/news/2011-12-24/58439282.html>> (검색일: 2012.5.17).
- 30)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Vol. 4, Issue. 5 (March 4, 2004);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 2009), pp. 5~7.
- 31) 『연합뉴스』, 2012년 8월 19일.
- 32) 『연합뉴스』, 2011년 1월 17일.
- 33) 『조선일보』, 2011년 9월 17일.
- 34) 『동북아신문』, 2011년 7월 30일.
- 35) 한류(韓流)란 용어는 1999년 중국의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경계하는 뜻으로 처음 사용된 조어이다. 오늘날 한류의 의미는 한국의 TV드라마, 음악, 영화, 온라인게임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동아시아를 비롯, 세계 각지에서 유행해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한류가 창출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 36) 손기섭, “일본자민당의 전후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3호, pp. 147~148.
- 37) Herman S. Wolk, “Sixty-Five Years on: Plans and Strategy to Defeat Japan in World War II,” *Air Power History*, Vol. 57, No. 3 (Fall, 2010), pp. 6~13.
- 38)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서울: 이매진, 2004), pp. 212~219.
- 39) 김민웅, 『패권시대의 논리』(서울: 한겨레신문사, 1996), pp. 47~54.

- 40)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http://www.sipri.se>>.
- 41)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of Russian Federation)에서 1년간 준비하여 만들어진 국가전략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전략 과제를 단기(2009~2012), 중기(2009~2015), 장기(2009~2020)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42) 보고서는 크게 ① 일반조항, ② 현 세계와 러시아, ③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우선순위, ④ 국가안보 확보방안, ⑤ 국가안보전략 실현을 위한 조직적, 법적 기반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러시아 국가이익을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발전,’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 ‘주권과 영토의 통일성 및 헌법질서의 유지,’ ‘국제사회의 다극화 질서구축 및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통해 세계강국으로서의 러시아 위상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43)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년 2월 27일.
- 44)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сов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РНК АТССБ),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2010).
- 45) 러시아 정부는 2007년 9월 TKR-TSR 연결사업을 포함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조 루블(약475조 원)을 투입하는 장기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2008~15년간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1단계 사업과 2016~30년간 1만 5,800km의 철도를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신설에는 기존 배령해 노선에 3,500km를 연장하고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102km짜리 세계 최대의 해저터널을 뚫어 열차를 통화시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46) 박종수,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서울: 오름, 2011), p. 297.
- 47)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19일.
- 48) A Zhebin, “Russia and Korean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1995), p. 187.
- 49) 박영호·조한범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50) IMEMO RAN, “Strategic Global Forecast 2030,” (Moscow: IMEMO RAN, 2011).
- 51) 『연합뉴스』, 2011년 11월 18일.
- 52) 『연합뉴스』, 2011년 11월 7일.

IV

재외동포사회와
통일문제



IV

재외동포사회와 통일문제

1. 재외동포사회 이주의 의미



2010년 말 기준 전 세계 175개국에 726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국(270만 명), 미국(217만 명), 일본(90만 명), 독립국가연합(53만 명) 등 주변 4국에 거주한다.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는 15개이다. 이들은 거주국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공동체의식을 구심으로 하는 한인 단체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1860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이주의 배경과 정착지의 특징에 따라 4개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¹⁾ 제1시기는 이주가 시작된 1860년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로, 자연재해로 인한 가난을 피해 중국, 러시아로 시작된 이주가 일제의 식민지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엽에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지역으로 고용이주하기도 하였다.

제2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한인들은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

〈표 IV-1〉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07	2009	2011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아주지역	4,040,376	3,710,553	4,063,220	55.90	9.50
일본	893,740 ①(296,168)	912,655 ②(320,657)	904,806 ④(326,671)	12.45	-0.86
중국	2,762,160	2,336,771 ③(1,923,329)	2,704,994	37.21	15.76
기타	384,476	461,127	453,420	6.24	-1.67
미주지역	2,341,163	2,432,634	2,521,470	34.69	3.52
미국	2,016,911	2,102,283	2,176,998	29.95	3.55
캐나다	216,628	223,322	231,492	3.18	3.66
중남미	107,624	107,029	112,980	1.55	5.56
구주지역	645,252	655,843	656,707	9.03	0.13
독립국가연합	533,976	537,889	535,679	7.37	-0.41
유럽	111,276	117,954	121,028	1.67	2.60
중동지역	9,440	13,999	16,302	0.22	16.45
아프리카지역	8,485	9,577	11,072	0.15	15.61
총계	7,044,716	6,822,606	7,268,771	100	6.54

- ① 1952~2005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② 1952~2008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③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 ④ 1952~2010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개발을 위해 한인들의 집단이주를 실시하였으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징병과 징용을 감행했다.

제3시기는 1945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미군과의 결혼, 유학 등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1962년 한국 정부가 최초로 해외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적인 이주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독일로 광

〈표 IV-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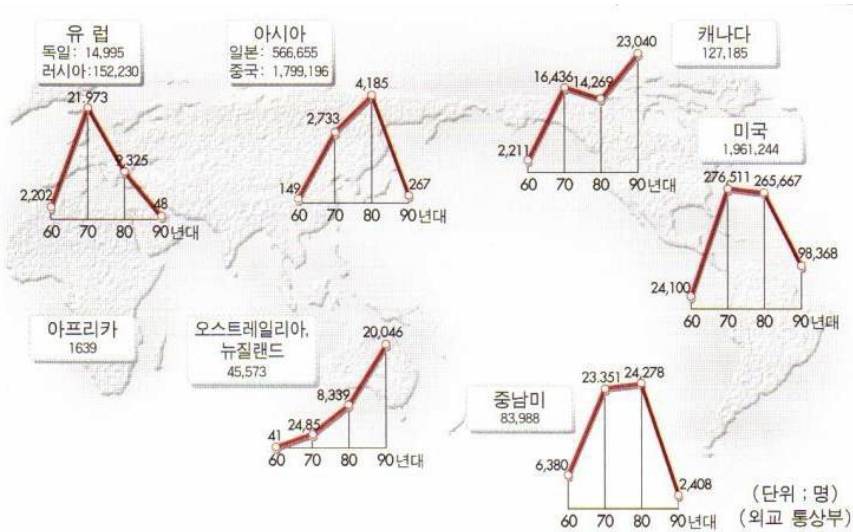
지역별 자격별	재 외 국 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계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아주	1,361,698	520,252	680,133	161,313	2,701,522	4,063,220
일본	578,135	461,627	96,146	20,362	326,671	904,806
중국	369,026	4,161	307,142	57,723	2,335,968	2,704,994
기타	414,537	54,464	276,845	83,228	38,883	453,420
미주	1,290,496	603,402	559,920	127,174	1,230,974	2,521,470
미국	1,082,708	464,154	512,938	105,616	1,094,290	2,176,998
캐나다	128,826	85,951	22,084	20,791	102,666	231,492
중남미	78,962	53,297	24,898	767	34,018	112,980
구주	116,784	23,644	53,920	39,220	539,923	656,707
독립국가 연합	12,137	420	9,303	2,414	523,542	535,679
유럽	104,647	23,224	44,617	36,806	16,381	121,028
중동	16,163	20	15,509	634	139	16,302
아프리카	10,883	1,573	8,072	1,238	189	11,072
총계	2,796,024	1,148,891	1,317,554	329,579	4,472,747	7,268,771

출처: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부와 간호원 등의 인력 송출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등 세계 곳곳으로 한인들이 진출하였다. 이전 시기까지의 이주가 강제이주 혹은 자의반 타의반의 이주였다면, 1970년대부터의 이주는 인구 압력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장려 하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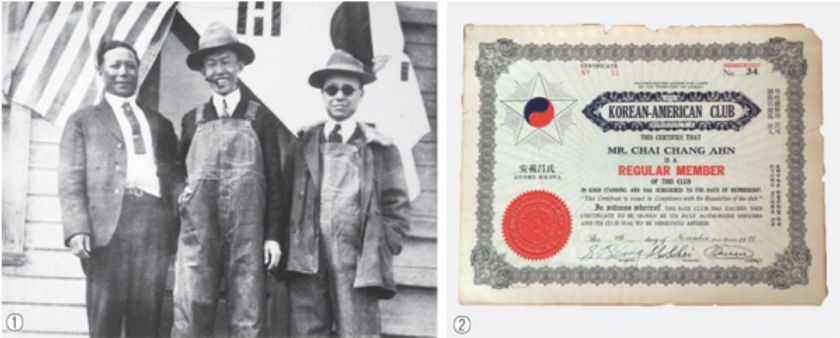
제4시기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특히 사회주의권 동포사회와 남한과의 관계가 새로이 열렸으며, 남한 정부는 이들 새로운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한의 공세적인 재외동포정책에 맞서 남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재외동포정책이 거의 실종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 지역이 확대되었고, 조기 유학, 명퇴 이민, 은퇴 이민 등 새로운 유형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표 IV-3〉 지역별 재외동포분포와 이민증감 추이



출처: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연도별 재외동포 자료 취합.

하와이 독립운동



- ① 1920년 3월 안재창의 콜로라도 덴버 농장 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임동식, 정한경, 이승만(왼쪽부터).
 ② 1928년 안재창의 조미단체(조미구락부) 회원증.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독립자금 모집증서



주: 사탕수수밭에서 번 돈을 상해임시정부로 보낸 증명서

가. 미국²⁾

1902년 12월 22일 『황성신보』에 게재된 이민자 모집광고를 보고 모여든 102명의 한인들이 조선을 출발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한인들의 미국 이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남성들로, 단기간에 돈을 벌어 귀국하려는 임시 체류자들이었다. 한인의 하와이 이주는 1905년 일본의 저지로 중단될 때까지 총 7,226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10년부터 이들의 초청에 의해 한국에서 1천여 명의 신부들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하와이를 벗어나 본토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노동자 이외에도 한일병합 이후 정치적 목적의 이주가 있었으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의 유학생이 이주하였다. 해방 당시 하와이에 6,500명, 미국 본토에 3,000명 가량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해방 후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이민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고 미군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64년까지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이주한 수는 6,000명에 이르며, 2000년까지 10만 명에 달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고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시작한 해외입양은 2002년 15만 명에 이르며 이 중 10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세 번째 부류는 유학생이다. 해방 이후 1965년까지 6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애초에 영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중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유학과정에서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의 저학력층 위주의 미국이민에서 탈피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종의 중산층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주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의사 3,000명, 간호사 2,500명, 약사 800명, 치과의사 100명 가량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해방 이후 국제결혼, 유학생, 의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한 가족의 초청을 받은 것이었다. 1970, 1980년대에 연 3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주하였다. 미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970년 6만 9,150명이던 한인의 수가 2000년 107만 6,872명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으로의 이주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기술직의 중산층 가정이 보다 나은 삶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이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미국이민생활의 고층은 이들 중산층들의 이민을 감소시켰다. 1965년 전문직 이민이 시작되면서 84%에 달했던 화이트칼라의 이주 비율은 1970년 81%, 1975년 65%로 차차 낮아져, 1980년 초에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비율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 1970년대 미국이민법의 개정으로 전문직 직종의 이민이 제한되고, 이들의 가족이 초청에 의해서 이민하는 현상을 반영하였다.

1970년대 급증하기 시작한 미국이민은 1985년과 1987년 사이 연 3만 5,000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13만 6,000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해외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역이민도 199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마다 1,000~2,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미국으로부터의 역이민이 1990년대 들어서 5,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고용시장이 불안해지자 장래가 불안정해진 30, 40대 전문직, 사무직의 해외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들은 해외이민 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영어열풍에 힘입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조기유학이 급증하여 유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유학생만 10만 명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은퇴 후 동남아 등지로 이주하는 은퇴 이민도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재미한인인구는 107만 6,872명으로 실제 한인인구의 절반에 그친다. 이는 한인인구의 반수만이 처음부터 이민을 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비영주목적으로 미국에 갔다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이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연 7,000~8,000명에 머물고 있다. 미국동포들은 대도시에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직업, 종교, 여가 등을 이곳에 의존하는 등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미국 주류사회와 문화와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중국³⁾

중국 거주 조선족은 270만 명으로 이중 97% 정도가 주로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83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조선족은 재외한인 중에서도 민족자치지역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조선족은 연변지역에서 제도적으로도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수 세대에 걸쳐 민족언어와 문화,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중국 지역에 조선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860년대이다. 조선에서 대규모 흉년이 발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간도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1860년대 간도의 조선족 인구가 7만 7,000명에 달하였다. 한인 인구가 급증하자 회령부사가 중국인과 한인 간의 마찰을 우려하여 두만강 대안지역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지라는 의미로 '간도'라고 부르면서 '간도'는 이 지역의 명칭이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비밀협정에서 만주를 남북으로 이등분하여 남만주를 일본의 세력 하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1909년 중국

조선족 이주사



출처: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25일.

과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은 일본에 용정촌 등을 통상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용정에 총영사관을 두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조선과 중국의 국경으로 하고, 한인의 두만강 이북에서의 개간과 국경의 자유왕래를 허용하는데 합의하였다. 이후 만주의 한인은 계속 증가하여 1921년 45만 명을 넘어섰다. 3.1 운동에 힘입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일대에서 대한독립단을 시작으로 항일의병이 조직되고 무장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만주국을 세우고, 이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만주지역 개발을 위해 조선인을 대규모로 이주시켰다. 이에 따라 1930년 60만 명이었던 만주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1945년 무렵 165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한 1910~1940년대는 동북지역을 향한 조선인의 이주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조선인들은 청 → 중화민국 → 만주국 → 해방구 →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지역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복잡한 민족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 일대에 일제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수립한 후 조선인들은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모순된 이념의 틀바구니에서 일본인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10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돌아가고, 1947년 동북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1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광복 이후 4년 동안 중국 내전과정에 많은 조선족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 동북3성에서 참군한 조선족은 6만여 명이 되며, 정규군 이외 공안부대, 기간대 등 지방무장 조직에 참가한 조선족의 수도 10만 명이나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 조선족들은 많은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서 중국 사회주의체제 내에 편입된 것이다.

중공조선족 주요일지



구광만, 조, 중공 심방기대를 대외국공정주대(외과)에서 첫 선견면들이 순출중이다.



1940년대 김림성, 최동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항일투쟁구실을 하였다.



중국 건국 이후인 1950년, 공산당은 영구조선족학생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정에 조선인 주체애호정책을 임용했다.



문화혁명 당시 김림성, 안인철, 조선족 당 기부분도 조러들임(중)기대원을 담아서 촬영했다.



한국에 이주해 조선족들은 서울 구로구 기러병동에 집거촌을 형성했다.

조선족 대이주 100년

1907년
임태미 조선족을 병탄했다. 일제 포조조선사람으로 양를 빼앗긴 공민들이 충북 지역으로 밀려왔다. 이 무렵 동북 지역 조선인은 19만~28만명이었다.

1902년
신미증시 정변에 따른 일제의 수탈을 피해 중국 동북 지역으로 건너온 조선인 본민들이 늘었다. 이 무렵 동북 지역 조선인은 40만 명으로 급증했다.

1911년
태평양행으로 일제의 공중이 더욱 기세해지면서 이주 조선인이 더 늘었다. 동북 지역 조선인 본민은 동북 지역 조선인 항일동맹운동의 배후 구실을 했다.

1914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다. 동북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6만여 명의 조선인이 참전했고, 3만여 명이 전사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2차 국공내전이 만-6만 여명이 북한 인민군에 가입했다. 한국 전쟁 발발 이후, 2만 여명의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했다. 조선족 본민은 17만 명이었던 뒤, 1950년 11만 명이었다.

1949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며 조선족 4천여 명이 민족주의적 개량주의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중국의 경제난이 나빠져 동북 지역의 조선족들이 기근에 시달렸다. 공주림과 패담들이 패해 20만 명의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됐다. 한국, 중국 정부는 남방에 고향을 둔 조선족의 귀향 방문을 허용했다. 한국에 온 조선족들이 서울역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무렵 중국 거주 조선족은 17만 명이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했다. 조선족의 한국 방문이 증가했다. 동북강원도 동시에 베이징, 상하이, 칭타오 등 내륙 연해 도시를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중국 거주 조선족 인구는 192만 명이었고, 50만 명은 한국에 있었다.

2000년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법을 제정하면서(1998년 12월) 조선족의 한국 입국이 본격화됐다.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으로 떠나는 조선족이 증가했다. 현재 중국 조선족은 192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0만 명은 한국에 있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초반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1970 - 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출처: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4일.

조선족은 1950년대의 ‘반우파운동’과 ‘반지역민족주의운동,’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한 박해와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6.25 전쟁에 수만 명이 참가하였고, 문화혁명시기에는 수천 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민족의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으로 중국 땅에서 삶의 터전을 튼튼히 닦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조선족은 민족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조선족은 1952년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1958년에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을 건립하였으며, 조선족이 집결된 농촌에는 조선 민족향(民族鄉)을 세웠다.

조선족은 이주 초기부터 중국 동북지방에 살고 있던 한족이나 만주족과는 거주지역과 생활세계를 달리하면서 자신들만의 농촌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조선족 마을은 주로 일제의 강제집단이주를 통해 이루어졌고, 한 마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한반도의 동향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조선족 공동체의 폐쇄적인 성격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전 시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족들이 동북3성과 연변에 농촌공동체를 형성, 민족적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보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1978년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면서 조선족사회도 중대한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중국 조선족사회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경제생활의 향상이라는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이와 함께 인구, 교육, 언어,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이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쫓아 동북3성 내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중국연해지방으로의 이동,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으로의 인구이동이 두드러졌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에서 9만 명의 조선족 농민이 북경 등 대도시로 진출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방문이 가능해지면서 ‘한국바람’이 조

선족사회를 강타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조선족사회가 공동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출산률 저하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연변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인구 비율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 조선족이 계속해서 민족자치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당시 연변 거주 조선족 인구는 자치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했는데, 2005년에는 이 비율이 33%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촌학교 교육의 피폐화와 조선족학교 학생 감소, 조선어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축소, 자치주의 생존 위기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중한인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재중동포 1세대는 이미 극소수가 되었고, 한반도에서 태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는 중간세대(2~3세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민족주의’ 교육을 받아 중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중동포 젊은이들(4세대 이후)은 스스로 ‘중국인임’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바람’ 또한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한편으로는 인구 유동을 가속화하여 공동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던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1991년 한·중 수교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수교 이후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연해주를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교포사회를 만나게 되었고, 연이은 한국인들의 투자는 교포사회를 변화시켰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조선족사회에 경제·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족은 초기 친척 방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로 산업연수, 노무송출, 결혼 등의 형태로 한국에 이주하고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이주 재중한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위는 타지역 출신 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상상의 모국의식’으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과의 교류 증대는 재중동포들

의 이중정체성, 즉 중국국민인 동시에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뚜렷이 각인시키게 되었다.

조선족공동체의 해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재중동포들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여 지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많은 재중동포인구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의 여러 도시와 농촌지역에 조선족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하며, 동북지역의 조선족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지식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인 도시에서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건설하고, 자체의 시민단체를 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족 언어교육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며 조선족 시민교육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또 조선족사회와 재중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겨레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특히 베이징과 연해(沿海)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산하이관(山海關) 이남의 베이징,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도 새로운 코리안 타운이 들어서고 있다. 이 새로운 코리안 타운은 재중동포와 한국인사회의 통합(혹은 혼합)형태로 나타난다. 칭다오,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를 중심으로 하는 산둥반도만 하더라도 12만 명의 조선족과 함께 6~7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조선족과 한국인이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민족사회’를 이룩해가고 있는 것이다. 재중동포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화의 요구와 한국과의 접촉 증대에 따른 기회와 갈등요소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생존과 발전의 과제에 직면해있다.

다. 일본⁴⁾

1910년 한일병합 전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불과 수백 명의 한인들이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1910년 한일병합과 더불어 몰락한 농민들의 일본사회로의 유입과 더불어 재일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근대화와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들이 도일하였고, 일반 노동자들도 일본으로 구직을 위해 도향하였다. 한인노동자들의 도일은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까지의 기간에 토지조사사업이 전개되어 토지수탈이 추진되면서 급격히 증대하였다. 재일한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본에 이주하여 일본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저변층을 형성하면서 한인사회를 이루어갔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자 수천 명의 한인들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한반도로 귀환하기도 하였다.

1931년 31만 명, 1934년 50만 명, 1938년 80만 명으로 1930년대 들어 재일한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정부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하였고, 1939년 7월에는 노동력 동원계획을 발표하고 조선총독부에 ‘조선노무자 일본 본토 이주에 관한 건’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1939년 7월부터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수많은 한인들이 강제 연행되어 일본에 입국하게 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연행된 한인 노동자의 수는 72만여 명이며, 여기에 군인·군속 36만여 명을 합하면 한인 강제연행자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재일한인들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고, 하층 노동계층에 속하여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945년 종전 시, 재일한인의 수는 대략 200~24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였고, 약 60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한인들은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1945년 10월 300

여 개의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좌우세력을 망리한 한민족단체인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조련’이 좌경 성향을 띠게 되자, 이에 반발한 우파 민족주의 재일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이하 건청)을 결성하였다. ‘조련’과 ‘건청’은 연합군 점령사령부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하면서, 체제이념,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대립의 영향으로 재일한인사회 역시 분열·대립하게 된 것이다.

1946년 10월 3일에는 ‘건청,’ ‘신조선건설동맹’ 등 20여 개 단체가 우익 진영의 결집체로 ‘재일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조직명을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개칭하였다. 해방 직후의 재일한인사회는 일본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재일교포 1세대, 2세대들의 사회주의 지향성은 국적 선택에서

일본군 및 군속관련 주요 재판일지



일본 정부 대응	
일본국적	장애연금 등 지급
한국적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으로 해결 완료 입장 한국정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금 지급
재일한국·조선인	전사자의 유족, 전상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
중국적	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해결 완료 입장
대만국적	전사자의 유족, 전상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
주요재판일지	
1992년 4월	일 최고재판소, 대만 출신자들 일본정부상대 소송 패소 확정판결
1997년 3월	일 최고재판소, 옛 소련 억류 일본군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기각
2001년 4월	일 최고재판소, 재일 한국인 징용자 등의 연금지급 청구소송 최종기각

출처: 『경향신문』, 2006년 7월 19일.

그대로 나타났다. 재일교포 1세대, 2세대들의 본적지를 보면,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8선 이남지역 출신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1950년도 기준 국적선택 상황을 보면, 재일교포의 14%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재일한인들이 혁신계 단체를 지지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민단’은 조직적 열세에 있었지만, 재일한인들의 인권 및 생활권을 위하여 사법육성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외국인 등록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좌익단체로 변모한 ‘조련’이 극좌노선을 추구하다가 1949년 9월 8일 강제해산을 당함에 따라, 좌익계 재일한인들은 활동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은 1951년 1월 9일에 전국적 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하 민전)을 발족하였다.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파가 ‘민전’의 대세를 장악함과 더불어 ‘민전’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의 주도 아래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 사망 이후 냉전적 긴장이 완화되고,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유화·접근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민전’의 지도노선이 일본공산당에서 북한노동당으로 전환되면서, 1955년 5월 25일 ‘민전’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으로 변모하였다. 1955년 북한의 지원 아래 등장한 ‘조총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민단’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교육사업, 금융사업, 재일교포 복송사업 등을 전개하여 재정과 조직 면에서 ‘민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조총련’은 내부권력의 후유증, 재정적 기반의 침하,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조총련계 지식인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조직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민단’이 조총련계 동포의 모국방문사업, 신용조합의 설립, 차별철폐·권익신장운동,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조총련’보다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총련의 약세·쇠퇴 등의 영향 속에서 ‘민단’은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의 생활보수화 성향,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 정치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 붕괴, 재일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조총련’은 물론, ‘민단’까지도 크게 쇠퇴하였다.

재일한인 1세대, 2세대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였고, ‘일본사회에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거의 사망하고, 2세대에 이어 3, 4세대가 재일한인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정주생활에 따른 동화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3, 4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재일한인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 3, 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 등보다는 일상적 이해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즉, 재일한인 3, 4세대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 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영향으로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즉 국적 전환을 한 한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총련계 한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더욱 증가하고, 민단계 한인들과 조총련계 한인들의 화해·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 3, 4세대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민단’과 ‘조총련’ 간의 교류 증대가 한민족문화공동체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한인사회에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도입하여 정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과의 연계 하에 일본 내에서 현대 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단'계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단,' '조총련,' '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한·일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러시아⁵⁾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1863년 조선인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1869년 조선에 발생한 대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재해를 계기로 한인들은 고향을 떠나 만주(滿洲)와 연해주(沿海洲)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한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거주지역도 확대되어, 포셋트 지역의 치진허, 안치허, 시디미, 아디미, 차피고우, 크랍베, 후드바이 등에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다. 1884년 러시아는 조선과 수교조약을 맺어 러시아 거주 한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한인이주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한인이민 억제정책을 바꾸어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의 병합으로 인해 정치적 망명 성격의 이주가 나타났다. 1905년을 기점으로 한인들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거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기 이전의 연해주 이주가 순수 농업이민이었다면, 이후에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정치적 망명객이었고, 일반농민들도

연해주에서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지신허 마을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 초기 이주자 중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각지로 진출하였다. 1906년경 지신허 마을의 총인구는 1,370명에 이르렀고, 1914년에는 일대 지역까지 합하여 2,000명에 달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들의 집거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가들이 집결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신한촌은 1920년 4월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한인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소비에트는 1920년 극동지역에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을 건립하여 일본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인의 도움을 받는다.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하자 소비에트는 한인들과의 토지분배 약속을 파기하고, 한인들을 하바로프스크와 블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들



라고베센스크 구역으로 이주시켰다. 극동 소비에트에서는 한인에게 토지의 임대를 금지하였으며 한인과 러시아인의 혼합 집단농장 콜호스(Kolhoz)를 금지하였다. 1924년 한인사회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기 전까지 18만여 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에 거주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각종 한인학교와 문화시설이 건립되었으며, 한국어판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는 등 한인사회가 번창하였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팽창으로 국경지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소련은 1930년대 초반부터 외부의 적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이주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인들의 항일운동이 일본에게 극동에 개입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소련은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전러 볼셰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937년 극동 지역에서 한인 17만 2,000명이 국경지역을 떠나 내륙으로 강제이주되었다. 강제이주는 9월 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3만 6,422가구 17만 1,781명이 124칸의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는데, 이 중 7만 6,525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9만 5,256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인들은 사막지대, 벌판, 강가, 원주민 마을 등 여러 곳에 나누어져 하차하였다. 일부 한인들은 토굴을 파거나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겨울을 지내야 했다. 한 기록에 의하면 1937년에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한인 7,000명이 사망하였고, 1938년에는 4,800명이 사망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해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고유문화 및 모국어를 상실하였다. 한인들은 가축, 농작물, 주거지 재산손실과 민족적 상실감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일종의

역류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농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유목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와 목화재배에 크게 성공하였다.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성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러시아인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가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고 한국어를 습득하지 않았다. 이는 한인들의 사회적 지위상승

〈표 IV-4〉 고려인 이주역사

• 1863년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 고려인 동포 13가구 최초 기록
• 1867년	185가구 999명
• 1869년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 급증 1만 여명
• 1902년	고려인 동포 이민자수 32,380명
•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의병기지화
• 1908년	의병 건수 1,451건, 참가 인원 6만 9천8백여 명, 연해주 총독의 박해로 의병 활동 만주이동
• 1910년	경술국치 후 고려인 동포 이민 급증
• 1914년	교민 수 6만 3천 명, 블라디보스톡에 신한촌 건설
• 1918년	4월 일본군 연해주 점령
• 1922년	10월 일본군 연해주 철수 친일 거류민단 5천명과 함께 귀국
• 1923년	재소 고려인 동포 공식 10여만 명 거주. 실지 25만 명 거주
• 1932년	연해주 고려인 동포 학교 380개. 잡지 6종, 신문 7종,
• 1937년	9월 21일~11월 15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이주 전 고려인 동포 지식인 2,500명 총살형)
• 1953년	약 16년간 집단 수용소 생활과 같은 생활함. (예: 민족교육 금지, 국가기관 취업과 취학 제한, 사회·정치적 진출도 사실상 봉쇄)
•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이 모든 제한은 비로소 완화되기 시작
•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독립 국가들의 탄생에 따라 새로운 이주와 유랑

의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와 전통문화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스탈린의 소수민족억압정책은 후르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재수정되어, 1956에 고려인의 정치적 권한 정지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강제거주가 해제되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미 새로운 정착지가 된 곳에 머물렀으나,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떠나 극동으로 향하였다.

연해주에는 1956년 이전부터 거주했던 한인들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출신 한인들 중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연해주에서 취직하여 정착한 한인들과 1945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사할린 징용자들이 있었다. 해방 이후 벌목, 광산, 농업 분야에서 일하였던 북한 출신 노동자 중 미귀환자도 있었다. 1991년 소련해체 이전까지 고려인 거주자는 약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하게 된 것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였다. 소련은 10개 공화국이 1991년 각기 주권을 보유한 채 관세 없는 경제동맹과 집단안보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민족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해체 당시 소련에는 45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수는 소련 내 127개 민족 중에서 28번째로 많은 인원이나, 이들은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였다.

소련연방 해체 이후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현지의 회교민족주의 부활에 따른 이민족 차별 경향, 주요 민족의 자민족어 회복에 따른 언어 문제,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러시아인이 차지하던 주요 공직이 현지인에게 넘어갔으며, 한인이 다수인 콜호스에서까지 한인들이 밀려났다. 이에 많은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를 떠나 연해주 등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조상이 거주하던 제2의 고향이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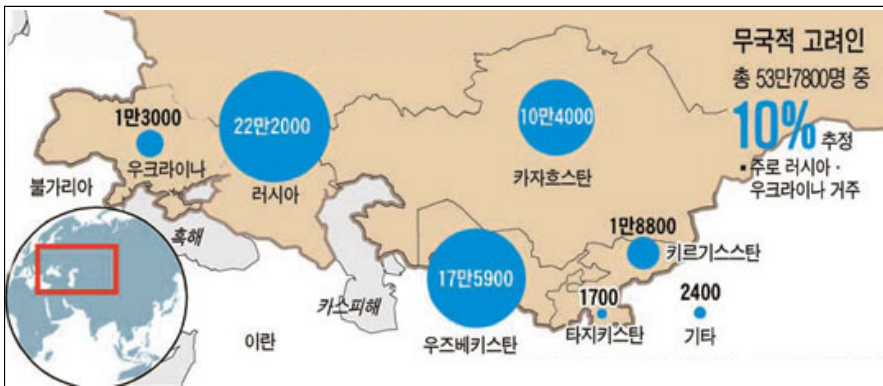
주를 선택하였다. 연해주의 노동인력 부족은 재이주 유입요인이 되었다.

현재 극동지역 전체에 약 10만여 명의 한인이 있으며, 이중 4만~5만 명 정도가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선주자와 소련 해체 후인 1990년대 초반 이후 유입되는 이주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주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큰땅치,’ 사할린에서 온 ‘화태치,’ 북한에서 온 ‘북태치’ 등으로 약 2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 이주한 이주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재이주자들, 남북한에서 진출한 사람들, 중국에서 유입되는 조선족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한인들은 주거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들은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전직과 상관없이 중국 조선족들에게 고용되거나, 건설노동, 농사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6,000여 명의 중국동포는 동북3성에서 유입되어 주로 장사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연해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연해

구소련 지역 분포도

옛 소련 지역 고려인 수 (단위: 명, 총 53만 7800명)



출처: 외교통상부·고려인돕기운동본부·이법관 새누리당 의원

주 지역에는 약 4,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러 수교 이후 한국인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들은 주로 기업인, 상사 직원, 공무원들로서 주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등에 거주하고 있다.

연해주를 제외하고 극동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으로, 각각 2만 명과 3만 6,0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대부분 1942년과 1943년에 강제 징용으로 사람들이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 출신들로 러시아 국적, 북한 국적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2. 한민족공동체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⁶⁾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다. 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남북한의 통일과 전 세계적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한민족공동체 개념

한민족공동체란 지구촌의 한민족이 동포의식을 토대로 결속하고 공동번영

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하나의 응집된 연결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상정한 하나의 가상공동체로서, 현실 속에 실재하고 있는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미래에 추구해가고자 하는 일종의 비전이자 설계도에 해당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탈냉전·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한과 세계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전체가 하나의 문화단위, 경제단위, 생존단위, 발전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한민족의 새로운 생존·발전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론은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한민족공동체론이 우선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으로 연대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이 같은 정서적 연대를 토대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공동 대처하는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결속과 협동을 매개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의식이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믿음과 기대이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연대망이 한민족공동체이며, 이때의 한민족은 우선 각자의 혈연적 연원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사람들로 규정된다.

한민족공동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한국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때의 한민족공동체 개념은 남북통일의 원리이자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재외동포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상징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민족공동체론이 남북통일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전 세계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19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부터이다.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화시대 경제·문화적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둘째, 냉전 붕괴 이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한민족 역시 국내외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내의 한인들이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셋째, 정보 기술 혁명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국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넷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민족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다섯째, 탈국가적 사고의 성장과 단일국가통일론의 퇴조다. 냉전논리와 결합했던 단일국가통일론이 약화되면서 민족문제를 논의하는 폭이 확대되었다.

한민족공동체는 민족이 본래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다는 관점의 연장선 위에서 ‘문화공동체’로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문화공동체로서의 성격은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상실하고 현지사회에 동화된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아직은 미래에 지향해야 할 당위적 목표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교류 증진과 공동이익 도모라는 실질적인 관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재외동포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그를 통해 창출되는 공동의 이익에 의해 공동체성원들의 복지와 결속이 증진·강화될 것으로 상정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협력을 매개·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는 영토국가로서의 통일과 같은 정치적 목표는 갖지 않지만, 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과제를 통해 공동체 성원의 결속된 힘을 활용하여 일정한 정치적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전체 한민족의 상호협조 및 공존공영’이라는 대명제와 관련하여 민족성원의 의사를 규합하고 조정하며 집행하는 기능도 필요하며, 특히 남북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조정·통합하는 일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민족공동체 형성이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열린 한민족공동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기존의 민족개념과 이에 기초한 한민족공동체 논의는 모국과 민족문화와의 유대가 강한 이민 1세 또는 2세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혈통과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시각은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혈통이나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자신

〈표 IV-5〉 GDP Per Capita (PPP, USD)

	Brazil	Russia	India	China	US	Japan	Germany	Korea
2000	7,611	7,240	2,354	3,823	34,003	25,744	25,871	15,074
2005	8,455	10,231	2,977	5,695	38,828	28,648	28,748	18,902
2010	9,905	12,973	3,752	7,857	42,141	29,824	31,663	22,847
2015	11,621	15,709	4,706	10,101	44,997	31,848	34,296	27,111
2020	13,563	18,758	5,858	12,534	47,956	34,926	36,521	31,209
2025	15,894	22,615	7,342	15,326	51,491	38,250	38,051	35,656
2030	18,842	27,424	9,354	18,488	56,216	41,180	39,934	39,977
2035	22,594	32,443	12,069	22,237	61,865	43,133	43,692	43,797
2040	27,090	37,575	15,518	26,893	68,162	45,944	48,262	48,801
2045	32,310	42,873	19,679	32,061	74,835	49,846	52,943	54,524
2050	38,407	48,685	24,619	37,304	82,179	55,082	57,670	61,863

출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2007.

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정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탈민족주의 담론에서는 민족을 역사적 실체를 가진 보편적 범주로 보기보다는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상상의 산물’이자 ‘창조된 문화적 구성물’로 이해한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앤더슨(B. Anderson)에 의하면 18~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나타났던 기술, 언어학,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족적 정체성을 고안하는 데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민족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조상의 역사에 대한 공통된 신화, 언어, 종교, 관습, 음식, 의복, 건축 등과 같은 공유된 문화적 특질, 영토에 기반하고 있는 연대감과 같은 원초적 특질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민족은 종족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운명체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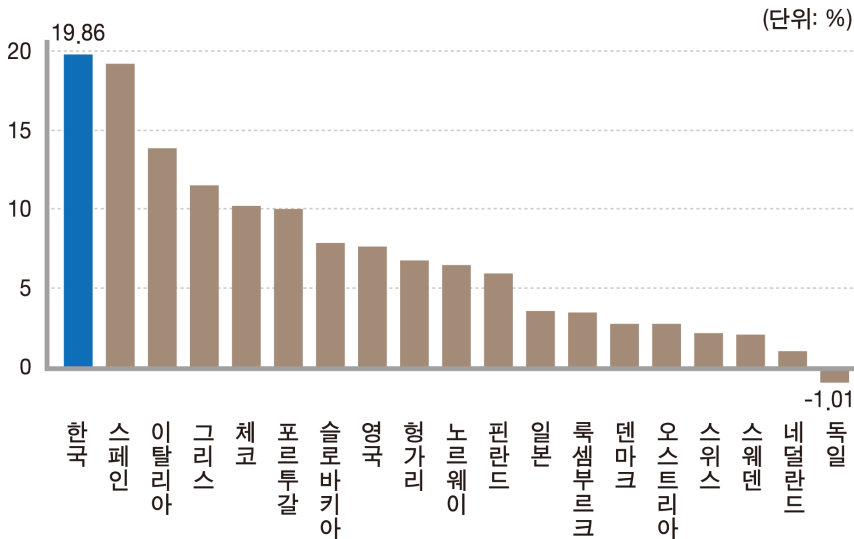
우리의 지배적인 민족주의 의식은 단일민족의 혈통, 동일한 언어와 문화 등 객관적 공통성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민족주의 담론에 의하면 한국인이 고대부터 혈연·지역·언어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다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일민족의식은 식민지 상황에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혈통과 계보를 강조하면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 근대적 구성물이라고 해도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며, 종족적 민족관념을 단순한 허구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의 경우 역사·문화·혈연적 기반들이 근대 이전 시기에 오래 지속되면서 큰 단절 없이 근대로 이어졌고, 전근대 시대에 기원한 문화적·혈연적 유대가 근대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공통의 언어를 기초로 하여 오랜 기간 존속해온 농경문화, 가족중심의 생

활관습, 같은 왕조체제 하에서의 피지배경험 등이 공통의 요소가 되었고, 여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려던 집합적 열망이 더해지면서,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경험이 중첩되어 한국인의 민족공동체의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열린 민족주의’ 또는 ‘성찰적 민족주의’라고 명명되는 대안적 관점에서는 민족주의나 한민족공동체 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져서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되며, 타민족을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혈연적 요소보다 문화적·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며, 이질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민족개념을 강조한다. 폐쇄적 민족주의 및 민족공동체에 대한 대안은 자민족이기주의나 혈연중심주의, 배타성을 지양하면서 우리 사회 안팎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와 공존하는

〈표 IV-6〉 OECD 회원국 외국인수 증가율



출처: OECD, UN

주: 2000~2008년 평균 증가율

것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민족구성이나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이전의 개념을 대체할만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수준에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단 이후 혈연·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이 있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적대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온 남북한의 주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한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문화 집단, 이주자 집단 속에서도 혈연적 동질성이라는 점에서 여타 집단과 구분되는 북한이탈주민과 동포 출신 이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대안적 민족주의나 민족공동체 개념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⁷⁾

나.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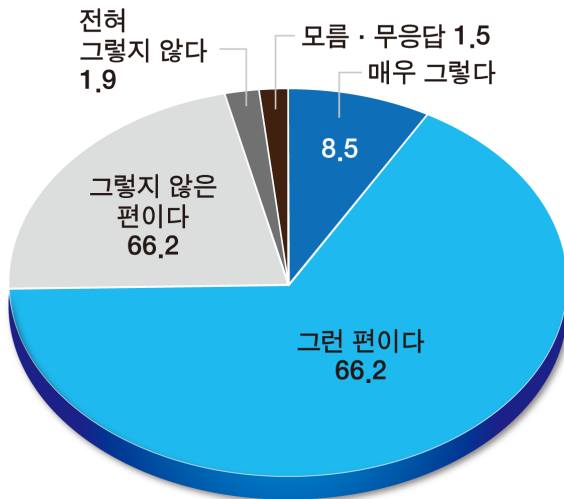
한민족공동체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한민족공동체의 결속도와 활성화 정도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강도와 질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 특성이라는 측면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어느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주관적 민족의식 측면이다. 전자는 종족·혈통이나 문화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되지만, 후자는 개개인들의 소속의식으로 나타난다.

모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살게 된다. 하나는 현지사회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첫 번째 과제는 주류사회에 동화되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사회와 교류하고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주국의 문화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들은 두 번째 과제와도 바로 부딪치게 되는데, 거주국에서 개인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종족집단의 일원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별과 차별의 환경 속에서 개개인들은 반작용적으로 자기의 민족적 소속을 자각하게 되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불완전한 데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러나 고유문화와 정체성 보존이 현지사회에 정착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도가 미약하고 문화의 다원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이민자가 자기민족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유지하기란 어렵다. 따

〈표 IV-7〉 한국은 다문화사회인가

(단위: %)



라서 해외 한인들은 거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초기 이주 후,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재외동포 전반을 두고 볼 때, 스스로를 한민족의 일원이라 생각하는 민족적 소속의식과 한민족에 대한 애착심은 세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약화되어 간다. 둘째, 세대가 내려갈수록 현지사회로의 언어적·문화적 동화가 심화되어 간다. 비록 민족적 동일시와 민족적 애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한민족의 언어·관습 등 고유문화는 세대를 이어갈수록 잊혀지고 있다. 셋째, 언어적·문화적 동화에 그치지 않고 혈연적으로도 혼혈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현지화가 강화되고, 결혼 등에 있어서도 현지인과의 결혼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러시아 한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비교적 약한 편이며, 일본과 중국의 한민족 역시 최근 정체성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중 정체성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남과 북 어느 쪽과 더 동질감을 느끼는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외동포들 중 다수가 남과 북 양쪽에 정체성을 갖고 있다.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로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으나, 냉전 이후 한·중 수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고,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으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남한과의 정체성이 강해졌다. 일본 내 한인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과거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통일을 염두에 둔 한민족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한민족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민족 사회의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강화는 어떠한 방향성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민족공동체는 영토국가가 아닌 민족적 협조체제 형성과 그를 통한 복지증진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적 범위는 전 지구에 미치고 있으며,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경 안에 집거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동질적 정체성을 조성해왔던 기존의 익숙한 내용과 방식으로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민족정체성을 형성해갈 수 없다. 지구촌 범위의 한민족공동체 형성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민족공동체의 민족정체성 형성작업은 지구촌 수준에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문화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가 미래에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전략이자 비전으로서 제기되는 것인 만큼, 그와 관련된 정체성 형성 작업도 당연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는 세계화·지구화·정보화·문명경쟁·민족경쟁의 시대에 한민족이 생존·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제시되는 것인 만큼 민족정체성 형성작업도 이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집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이 과거에 공유했던 동질성을 토대로 공동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의 '우리의식'은 과거의 동질성에

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동운명성과 활력을 창출해가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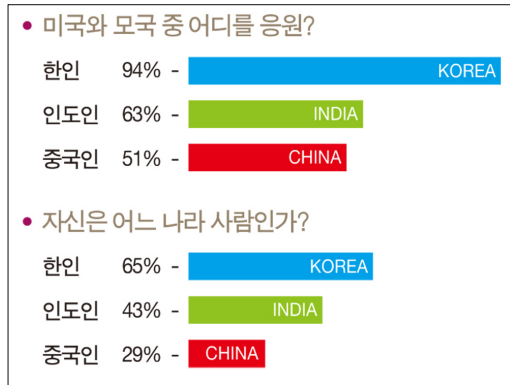
둘째,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주지와 국적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갖

고 있는 다양한 국적을 그대로 두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토대로 초국가적 연대망을 이루려하는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현지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므로, 한민족공동체의 민족정체성 형성작업이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한민족공동체의 민족정체성 내용을 남한이나 북한, 또는 어느 일방의 주민들이 선호하거나 받아들이는 내용으로만 채워서는 안되며, 재외동포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른 민족과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가 속해 있는 한민족에 대한 분명한 소속의식과 자긍심과 동포애를 요청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자세를 갖게 해서는 안된다. 한민족공동체의 성원은 거주국의 국민이며 동시에 지구촌의 시민이어야 한다. 다종교·다문화·다민족·다국적의 상황을 긍정하는 열린 세계관을 토대로 다양성이 공존하며 화합하는 가운데 재민과 민족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세계인이 수용하는 합리적 가치로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은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동의하는

〈표 IV-8〉 재외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⁸⁾



사람과 한민족의 혈연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규정은 혼혈이나 외국인까지도 본인의 참여의사 여하에 따라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민족공동체는 한민족의 혈연을 나누어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민족의식이나 동포애 자체가 아니라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이며, 한민족이라는 혈연적 배경을 시인하는 것이 곧바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민족공동체는 혈연적 동질성과 동포의식을 기반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유대를 공고히 하며, 장차 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3. 재외동포 통일외식



세계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 남북한의 통일은 기폭제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역으로 재외동포사회 역시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은 재외동포사회의 분열로 이어져,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주의권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고,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 동포들은 북한 방문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경선이 허물어진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상호간에 연계망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가. 재외동포사회 통일의식⁹⁾

이 절에서는 먼저 2011년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재외동포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⁰⁾

분단과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영향, 분단의 민족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다음 <표 IV-9>와 같이 응답하였다.

재중한인, 재러한인, 재일한인들은 모두 분단과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재외한인들 중에 가장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일조선인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의 피해의식은 6.25 전쟁만이 아니라 현재의 분단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은 ‘조총련’ 대 ‘총련’이라는 남북관계에 의한 적대성을 가장 많이 자신의 사회 속에서 체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일 관계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는 ‘6.25 전쟁’이라기보다 분단 체제

<표 IV-9> 분단의 피해, 민족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65.7	59.8	87.9
	다소 피해를 입었다	29.6	32.8	10.2
	피해를 입지 않았다	4.7	4.0	0.6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그렇다	82.2	81.0	83.1
	아니다	17.8	18.1	15.0
남과 북의 통일이 우리(해외동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83.5	88.7	78.3
	아니다	16.5	10.7	18.2

〈표 IV-10〉 한반도 통일의 전망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밝다	48.5	59.5	30.6
어둡다	51.5	40.2	61.5

그 자체이며 그런 분단이 현재에서 작동하는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80% 이상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고있으며, 통일이 재외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80% 이상 되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은 위의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치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통일을 가장 어렵게 전망하는 사람은 재일 동포들이었고, 재러동포가 가장 밝게 전망하고 있다. 이는 통일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한 순서와 같이,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클수록 통일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들은 ‘남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과 ‘분단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IV-11〉, 〈표 IV-12〉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IV-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0% 정도의 재외동포들은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표 IV-11〉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서 남북통일의 역할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그렇다	92.5	91.4	88.2

〈표 IV-12〉 통일되지 않은 이유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39.7	45.1	24.5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19.5	6.1	20.7
남한이 미국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기 때문에	27.9	8.3	12.7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8	34.7	25.2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단이 책임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기보다는 남북한 또는 북한 내부에서 찾고 있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의 차이가 나타났다. 재러한인의 경우 남북한의 상호 적대감을 분단 지속 원인으로 보는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재중한인은 39.7%가 남북한의 상호 적대감을 꼽았고, 남한이 미국 편에서 북한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9%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재일한인의 경우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남북한이 상호 적대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외세 열강이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5.2%, 24.5%, 20.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단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외동포들은 다음 〈표 IV-13〉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은 어느 정도 수렴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분단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로 재러동포와 재일동포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꼽았으며, 재중한포는 남북간 민간교류에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꼽았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분단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모든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상호 신뢰성 회복을 1위로

〈표 IV-13〉 분단 극복을 위한 과제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남북간 민간 교류	25.9	6.4	24.5
	경제 협력	21.9	18.1	7.6
	남북정상회담	24.6	12.6	11.8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23.6	45.7	27.1
	남북간 문화교류	4.0	3.1	6.7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호 신뢰성 회복	33.0	36.2	29.9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20.2	17.2	9.2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14.5	9.5	9.6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 정착 노력	6.4	11.0	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25.9	13.8	14.3

뽑았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아직도 적대적 대립과 불신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외동포들의 분단·통일의식은 이와 같은 중장기적 분단 극복의 정책적 비전뿐만 아니라 분단의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건설해야 하는 통일한반도의 미래적 상과 연결되어 있다. 〈표 IV-14〉에서 보듯이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재일동포와 재러동포는 4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재중동포는 21.9%가 주변국과의 협력·공존을 꼽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와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열강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4〉 통일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경제 강국의 건설	41.8	31.9	15.6
정치·군사적 대국의 건설	11.8	8.3	0.3
문화 선진국의 건설	19.9	2.8	16.9
주변국과의 협력·공존	21.9	40.2	41.1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 강화	4.7	7.1	10.8

다음으로 미주지역 거주 재외동포들의 통일의식 실태를 알아보자. 미주지역 거주 재외동포의 통일의식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외동포 통일의식 실태조사로, 2008년 미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한인 3,898명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약 52%로 상당히 높았다. 학력이 높은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통일에 소극적인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학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의 의견 중 소극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의 경우 통일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 50대 이상은 30% 정도로, 고연령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 11월에 344명의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조사표본의 문제와 함께, 이 조사가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된 직후 실시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질문 문항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재외동포의 통일의식 수준은 국내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서울

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였으며, 반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5%였다. 20대의 경우에는 이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였으며, 반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7%였다.

2000년도에 실시된 재외동포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89.2%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6.3%가 ‘남한의 정치·경제·문화 및 국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41.6%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한반도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남한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21.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000년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통일을 위해 미주 한인들은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57.3%로 나타났고, ‘통일을 위해 미주 젊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19.3%),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14.7%), ‘통일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다’(11.9%), ‘통일을 유도하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미 주류사회에 통일 문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10.1%)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발전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38.1%), ‘한인으로서의 긍지가 높아질 것이다’(34.6%), ‘특별한 변화나 영향이 없을 것이다’(12.6%), ‘한인을 대하는 다른 민족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10.3%) 순으로 응답하여, 대부분 통일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견해가 61%에 달해, 많은 재외동포들이 통일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외한인들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

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을 민족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통일의 문제를 남과 북의 문제로만 사유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통일문제에서 주체라는 점을 망각하기 쉽

〈표 IV-15〉 통일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편의 vs 통일비용	편익<비용	44.4	47.8	46.1	55.8	48.0	27.3
	편익=비용	18.9	19.4	19.9	13.5	17.7	19.6
	편익>비용	36.7	32.8	33.9	30.7	19.6	53.1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일정부분 예산적립	61.4	68.7	60.6	63.2	56.4	56.2
	통일세 등 신설	12.8	13.4	9.9	15.8	19.0	11.4
	국민성금	11.5	8.2	10.9	9.4	14.0	16.0
	국제금융기구 등 도움	11.6	8.0	14.4	7.7	8.0	16.3
통일을 위한 중점 과제	자주 국방력 강화	16.6	14.6	12.4	15.7	24.0	22.1
	내부 통일준비 강화	31.0	35.3	28.8	24.7	32.5	31.0
	대북경제지원 확대	4.1	3.9	3.9	2.7	3.0	6.6
	남북교류협력 증대	37.4	37.7	42.2	45.2	26.7	32.8
	통일외교 강화	8.8	7.7	11.0	9.7	12.0	2.5

조사대상: 교육계(교사) 1,645명, 학계(대학생/대학원생) 2,383명, 경제계(경제인) 554명, 시민사회계(일반시민/단체) 997명, 종교계(종교인) 1,148명

출처: 『2012 통일백서』 (통일부, 2012), p. 51.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한민족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일의 중요한 주체로서 보고, 국제적 연대를 창출해갈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비전 또한 이들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연대 및 협력을 창출하는 구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단이 동북아시아에서 국제 열강들이 만들어내는 정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공존만이 아니라,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소통과 협력 구축만이 아니라,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한인들의 통일의식은 그들이 처한 각국의 상황 및 조건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참조.
- 2)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참조.
- 3) 주봉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4호 (한국동북아학회, 2006);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제22권 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참조.
- 4)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서울: 통일부, 1996) 참조.
- 5)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에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통권 제10호 (재외한인학회, 2001) 참조.
- 6)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통권 제13호 (재외한인학회, 2002); 박명규, “다문화주의와 남북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 『국제이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09); 박경환, “디아스포라라는 거울, 민족이라는 담론, 그리고 초국적주의의 부상,” 『문화역사지리』, 제18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서울: 선인, 2012); 강광식, “한민족공동체와 남북통일 문제,” 『재외한인연구』, 통권 13호 (재외한인학회, 2002) 참고.
- 7)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0~2008년 동안 21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해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2000년 1,906만 명에서 2008년 3,014만 명으로 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8년 간 평균 19.9%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10월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 데 74.7%가 동의했다. 다문화사회가 아니라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 8) 미 뉴욕주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민병갑 교수는 지난해 말 '모국과 미국이 운동 경기를 하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을 통해 민족별 응집력을 비교 분석했다. 한인 동포들은 이 질문에 94%가 '모국을 응원하겠다'고 답한 반면, 중국인은 51%, 인도인은 63%가 모국팀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족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동포들의 65%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중국인은 43%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도계는 29%만이 자신을 '인도인'이라고 응답했다. 『재외동포신문』, 2009년 3월 12일.
- 9)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분단 통일외식』; 김재기, “남북통일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05);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참조.
- 10)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중국 연변의 8개 현, 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297명,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326명, 재일조선인 3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V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 역할



V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 역할¹⁾



1. 일반적 역할



재외한인 사회 형성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서 드러나듯이 재외동포들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수난을 남북 주민과 더불어 공유하고 있다. 식민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공유하고 있기에, 비록 거주국의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상당 정도 변용되었지만, 재외동포들은 민족적 정서와 유대가 남다르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방관자로 머무를 수 없다.

가. 남북관계 중재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고, 남한 또는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 남한 또는 북한의 단기적 국가 이익이나 정치적 명분보다는 한민족공동체의 장기적인 번영이라는 중립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양자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관계가 경색되는 경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는 남북한과 각각 형성해온 인적·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남북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통일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재외동포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지의 교포사회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북한 방문이나 북한과의 학술행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방북은 한때 동포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차원의 방북과 북한 방문기 출판 등의 활동은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 비해 재외동포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 사회가 서로에 대한 높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적대감을 해소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재외동포들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북한을 방문한 재미동포의 수가 급증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약 6천 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이산가족이지만, 개인적 목적과 무관하게 종교적, 학술적 활동의 일환으로 방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북한 학자나 정치가 등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남북한, 재외동포 간의 회의를 조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재외동포들은 조국을 떠나 제3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거주국이나 제3국에 초청하여 학술·문화회의, 경제합작 등 기타 여러 형식으로 접촉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남북한 간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막혀있는 경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재중동포 사회는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들과 비교했을 때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 등의 장점으로 한반도와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어 왔다. 재중동포들 역시 남북한에 걸쳐 유지해온 인적 유대로 인해 남북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와 인접한 지리적 입지와 문화적 환경의 면에서 재중동포사회는 다른 어떤 동포사회보다도 남북한의 대화를 촉진하는 가장 유리한 매개지역이라고 하겠다. 또한 재중동포사회의 문화적 복합성에는 한반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결합되어 있고, 문화권이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 모두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립적 위치를 기반으로 남과 북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교류에서 무리없이 중개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민족자치구인 연변과 기타 조선족 집거구는 남북한 및 해외의 한인들이 대화와 교류를 진행하는 중개지역으로, 조선족은 남북대화과 교류의 촉매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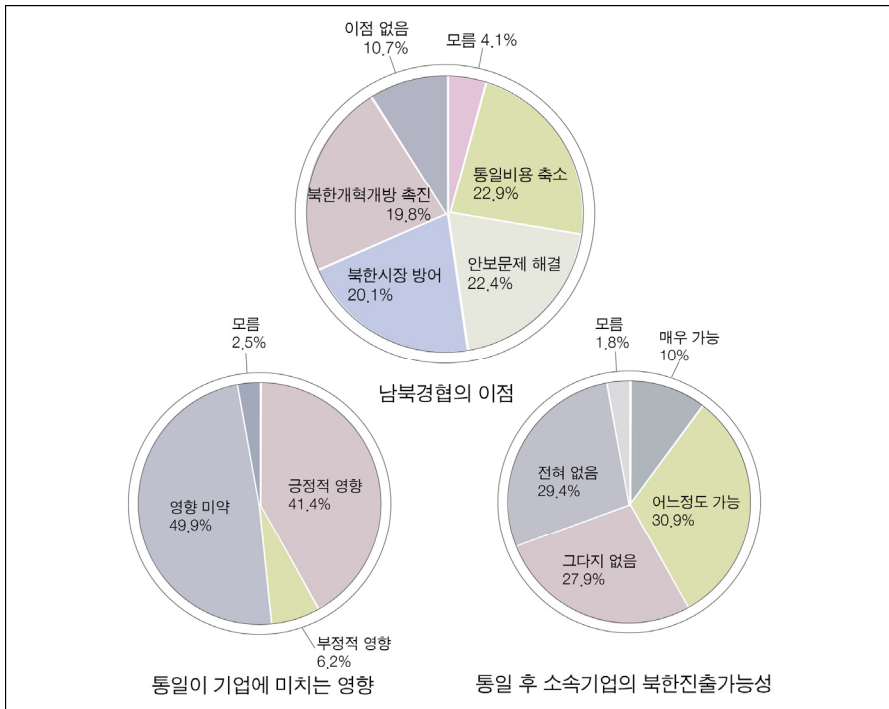
재중동포사회는 한·중 수교 이후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을 동시에 드나들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주선, 대북 식량지원의 대리자, 북한친척 돕기 및 변경무역 등을 통해 교류의 가교역할을 해 왔으며, 한반도 정세와 민족통일에 대한 관심도 커져 통일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한 재중동포사회는 남과 북을 문화적으로 이어주는 문화전환체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매개뿐만 아니라 서로 수용가능한 문화신호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문화전환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전환체계 혹은 문화중개체계의 기능은 상대방의 문화를 피수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신호로 전환하여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문화체계가 서로 대립되어 있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결여되었을 때 문화전환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과 같이 이념과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반세기 이상 분단된 상태에 있었던 문화계통 간의 교류는 상호 이해의 결핍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화적 융합을 이룩하자면 재중동포사회와 같은 문화중개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분단 극복은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통일이 될 수 없으며, 민족 공동의 생활과 정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통일한반도의 모색은 분단 이전의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복고적인 것도, 가치관, 심성, 행동방식 등의 차이를 단일한 틀에 용해시키는 획일주의도 아니라, 오늘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동시에 민족 역량을 새롭게 재구축하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적 기획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자산은 해외지역에서 전혀 다른 이질적 문화나 관습들과 접촉하면서 부딪히는 내면적 갈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융합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역동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직접적인 적대성이

작동하는 분단체제를 벗어나 제3국에 거주하면서 외부자의 입장에서 남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상호 중재할 수 있다. 남북의 적대적 구조를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통일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소통을 매개함은 물론 민족공통성 형성을 위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표 V-1〉 한국경제인 통일의식 조사결과²⁾



출처: 『2012 통일백서』 (통일부, 2012), p. 48.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및 남북한 사회 내에서의 인맥과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와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중동포들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거주하며, 특히 북한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연변, 장백, 단동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북·중 변경무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 북한 식량난 해결에도 개입하고 있다.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는 북·일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규모와 경제력에서 가장 앞선 재미동포들은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한상네트워킹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통해 북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10월 21~25일에 평양에서 세계한상네트워킹의 주요 단체인 '해외한인무역인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WORLD-OKTA)'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평양무역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외한인무역인협회 소속 164명이 평양에서 북한 측 80여 개 기관과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것은 재외동포가 통일과정에서 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 조선족기업가와 재미동포가 합작하여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민단'계 상공인과 '총련'계 상공인이 함께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과 한상기업가들이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중에서도 특히 재중동포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중동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여 장백조선족자치현 외에 50여 개의

‘민족향(民族鄉)’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대부분 북한과 접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을 수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에는 10여 개의 세관(海關)이 설치되어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변경도시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재중동포사회는 이미 넓은 의미에서의 한반도의 교류와 통합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초반에 재중동포들 중 일부는 중국 국경에 인접한 북한지역의 주민들과 보따리장사를 통한 경제교류를 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 집거지역과 북한 변경지역은 대부분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화된 이후 수많은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해가기도 하고, 반대로 재중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여 식량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왕래를 통해 재중동포들은 북한의 정치경제 실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중동포들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경제교류를 촉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연변(延邊), 베이징, 단둥(丹東), 선양(瀋陽) 등지에서 북한과 연계를 맺고 있는 재중동포 가운데는 학술교류·문화교류의 방면에서 남북접촉과 교류의 장을 제공했고, 이산가족 찾기, 한국의 민간단체 지원 식량의 북한 전달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중동포들은 남북한 상사 간의 상담을 주선하고 중개무역을 알선하거나, 남북한과 재중동포의 합작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연변지역은 우리와 오랜 역사적 연고를 지닌 지역인데다, 다수의 재중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해 개발 붐이 일고 있다. 또한 훈춘(渾春) 경제특구를 비롯한 두만강개발이 열기를 띠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지역의 재중동포들은 많은 한국기업들이 연변지역에 진출하여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할 경우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능하다면 동반진출도 하기를 희망

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에 80% 가량을 조선족 기업이 투자했고, 최근 기업을 이룬 경제인들이 신의주 특구와 평양 등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1만 6,000여 개 정도의 조선족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별로 ‘조선족 기업가 협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조선족 기업가들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연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재중동포들과 동반자가 되어,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은 위험부담에 대한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직접경험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과거 대만이 중국의 심천경제특구에 처음 투자할 때 홍콩 등지의 화교나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진출로 큰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연변지역 진출은 나진·선봉지역 진출의 교두보 내지 배후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자원 공급지와 시장으로 개발하여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와 연계된 민족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외동포들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경협 활성화의 장애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상관행인데, 해외동포 기업인들과의 잦은 교류는 북한 경험 실무자들이 시장경제의 상관습을 이해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제도가 정비되는 계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원활한 외국투자 도입을 들 수가 있는데, 중국의 투자 여건의 조성에 해외 화교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일 과정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재외동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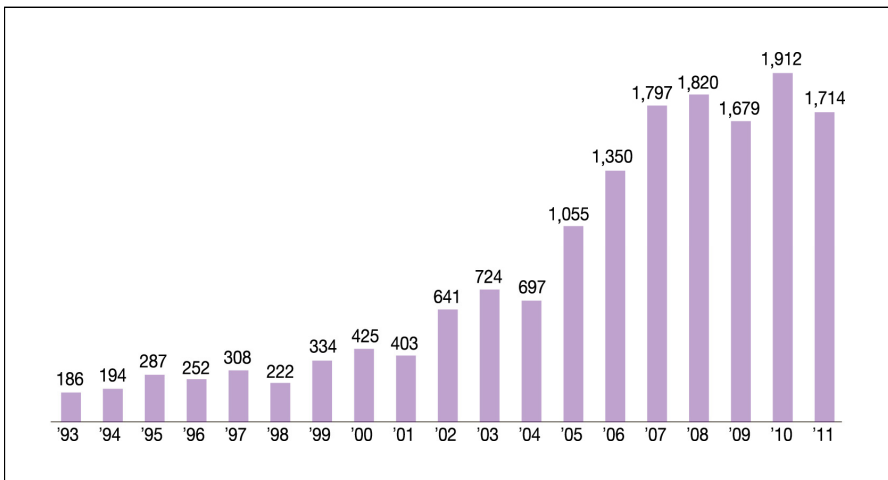
다. 북한 주민 의식변화 촉진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과 인적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의 방북과 인적 접촉은 폐쇄적 사회인 북한 사회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개혁개방을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중 간 무역거래를 비롯하여 각종 상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인적왕래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일시적 월경 및 중국 체류와 같은 비공식적 인적왕래 등은 북한주민들이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하는 중국사회의 발전상을 목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평가하고,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로 국경지역

〈표 V-2〉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통일부 <www.unikorea.go.kr>.

이나 대도시 등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빈번하고, 정보 소통이 원활한 지역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관료, 지식인, 상인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북한사회의 발전 전략으로서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하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교류가 철저하게 통제되는 북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부터의 문화적 전파는 주로 북중접경지역을 통해 드나드는 각종 무역상품과 그에 수반되는 인적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유입은 북중국경에 교량이나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단둥(丹東), 지안(集安), 린장(臨江), 창바이(長白), 충산(琿山), 난평(南平), 썬허(三河), 투먼(圖們), 취안허(圈河), 훈춘(琿春) 등지가 통로이며, 중국 측에서 설치, 운영하는 해관(海關)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무역 또한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신의주, 혜산, 무산, 회령, 남양, 나진 등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은 북한의 모든 지역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남한의 대중문화 상품들은 ‘중국 → 북한의 국경지역 → 도매시장이 있는 각 지방의 중심도시 → 각 지역의 시장’을 거쳐 수요자인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 상품들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은 특정한 문화상품의 소비를 넘어서서 그 문화상품이 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생활양식, 삶의 방식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수용, 이해, 모방, 거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필연적으로 남한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경험은 북한에 체제전환의 대안적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 거주동포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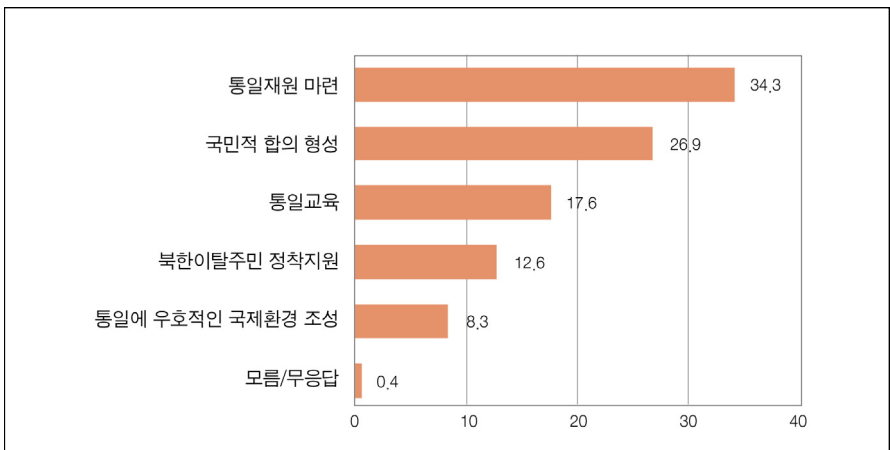
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으로 인해 겪게 될 시행착오와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 국제사회 통일환경 조성과 동북아시아 평화공존 도모

재외동포들은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지구 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의 하나이며,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이것은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단 극복이 남과 북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주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과

〈표 V-3〉 통일준비를 위한 필요조치

(단위: %, N=1,000)



출처: 『2012 통일백서』 (통일부, 2012), p. 67.

미국의 공통과제리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적 충돌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체제를 만들어가는 작업 없이 평화로운 분단극복이 가능하지 않으며, 역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존은 냉전을 재생시키는 남과 북의 적대성을 해체하는 길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재외동포들은 한민족이면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문화적 변용을 만들어냈으며, 이런 점에서 이 두 개의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들은 양자를 매개하면서 분단 극복의 과제를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교류와 생산적인 만남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소모적인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민족 공동의 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세워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재외동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 중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남북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압력과 분위기 조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재외동포들은 몇 세대에 걸쳐 구축해온 거주국 내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거주국 정부 정책 형성에 재외동포들이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거 미주와 유럽 거주 재외동포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듯이, 북한의 개방 및 개혁과 민주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와 같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알리거나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자칫 남북한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사회 내의 지나친 분열이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역할



가. 재미동포의 역할

재미동포는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재외동포의 35% 가량인 250만 명이 미주 지역 동포이며, 그 가운데 실향민이 15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모국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을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사회전반에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평화통일, 민주통일의 원칙을 설명하고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³⁾ 또한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방북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 인도적 사업 추진, 탈북자 보호 등도 재미동포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된다.

한민족공동체의 복원은 단순히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미

래지향적 열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들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복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은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공동체 복원에 있어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 재미동포들은 재미동포들이 주도하고 남북한과 다른 지역 동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함으로써 열린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민족 문화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거나, 세계 음식문화를 주도하는 뉴욕에 재미동포들이 주도하여 남북한의 음식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통일음식점’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또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개발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한과 중국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논의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지역 개발을 생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유대인과 화교들이 각 거주국에서, 자신의 거주국들이 모국인 이스라엘과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재미동포들이 북한지역 개발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와 다른 사회 간의 경제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끄는으로써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포들의 거주 국가를 잇는 ‘세계 한민족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또한 한민족 정치공동체의 형성에도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치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야 하며,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공 외교도 필요하며, 재미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부문의 대미 외교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측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미국 국민 및 정부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재미동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동포들은 국제사회 통일환경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재미동포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려깊은 지원도 필요하다. 재미동포가 미국 주류사회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못하고 변두리 위치에 머문다면 이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우리끼리’ 계토 사회에 머물고 말 것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롤 모델로 제시되는 두 가지 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커뮤니티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계 사회이다. 전자는 1993년 LA 폭동에서 한인사회가 무참하게 쓸어지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이 각성하며 만든 사회로서, 이제 주류사회 진입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후자는 192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아메리칸 유 (American Jew)’라는 자기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미동포가 미국사회에서 통일기반 조성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류사회 진입과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동포사회가 힘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 신장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리정부의 재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노력과정

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재미동포들을 포함한 주변국 동포들이 해당국가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재미동포의 경우, 미국의 법과 제도 아래 있으며, 따라서 미국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재미동포사회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재중동포의 역할

재중동포들은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의 혈연을 통한 유대로 말미암은 자연발생적인 의식이다. 일부 재중동포들은 한국과 북한에 동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과 북한을 모두 고국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체제가 완전히 다른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지만, 재중동포들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들이 떠나오기 직전의 하나된 나라였다는 것은 재중동포들의 통일의식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중동포들은 정치적, 또는 현실적으로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국민이다. 이들은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국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은 본국의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많이 이질화되어 있지만, 한민족으로서 뿌리깊이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식과 전통의 보유는 이들에게는 숙명이다. 이들이 깊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식과 전통의식은 한국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모두가 공유하는 중요한 공감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에 모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한국에는 호감을 느끼며 체제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북한에는 동정을 표시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힘을 합쳐 세계열강에 대적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한의 경제복구를 진심으로 갈망한다. 재중동포의 통일을 바라보는 이러한 심리는 이들이 한국과 또는 북한과 가지고 있는 혈연적 유대,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원초적인 민족적 의식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 요컨대 재중동포들은 한국과 북한 두 나라에 모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두 나라가 한나라가 되고 한국과 북한 모두가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힘을 합쳐 세계열강의 반열에 나서기를 바란다.

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첫째,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재중동포들은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과 북한이 체제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민간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며 학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을 해소해나감에 있어서 매개체 및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동포들은 제3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북한과 모두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예로부터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북한과 정치적, 또는 민간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대도시들에는 신홍한국부자들이 도시의 특정구역에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한 이후 한·중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동포들은 한국과도 자유로운 왕래를 하고 있다. 이는 통일에 있어서의 중국동포들이 중간자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주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아직 폐쇄되어 있는 북한과의 교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통일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유대 또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재중동포들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룸에 있어서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민간, 학계, 정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 영역을 통하여 한국과 북한 모두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우월한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셋째, 재중동포들은 한국과 북한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고 양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때문에 통일에 있어서 중국동포들은 북한과 한국 중간에서 두 나라가 조화를 이루도록하는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과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신을 종식시키는 화해 주선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동포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혈연·지연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다. 재일동포의 역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애국심은 3세대 이후에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민족문화운동을 통하여 부단히 지속되고 있다. 한민족으로서의 강한 민족의식은 일제강점 하의 부당한 이주와 고난, 그리고 해방 후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이라는 특수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그런 만큼, 대다수의 재일동포들은 고국인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재통일되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선진국가로 성장하기를 열망해왔다.

그러나 한편, 통일외식 설문조사에 나타나는 대로, 재일동포들은 재외동포 중에서도 남북분단에 의한 피해의식을 가장 심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

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남북분단과 더불어 재일동포사회가 민단과 조총련 조직으로 분단되어 특히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재일동포 사회는 남북분단의 연장 속에서 민단과 조총련 조직으로 크게 양분되었다. 통일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스스로 통일과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한편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각 남과 북의 입장에 서서 정치적으로 격렬히 적대하여 왔다. 그래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주체 및 방법을 둘러싸고 재일동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자주 나타났다. 정치적인 통일논의가 분열, 즉, 반통일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은 재일동포사회의 통합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일동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 통일에 선행하여 무엇보다도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외국에 정주할 경우, 1세대와 2세대와는 달리 다음 세대의 민족의식은 자연히 희박해지기 쉽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재일동포들이 민족적 자부심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과거에 조총련계 교육을 받은 3세대, 4세대의 젊은이들은 성년기에 교육내용과 현실과의 차이를 실감하고 민족적 자괴심에 빠져 방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재일동포사회가 민족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제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념적 차이에 구애되지 말고 동포 간의 비정치적인 교류를 심화시켜야 한다. 재일동포사회의 분열에는 이념적인 통일논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각각의 통일정책을 경쟁적으로 동포사회의 조직에 요구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켰다. 더구나 한국의 대북정책이 여·야당 간의 정권교체에 의하여 급변하면서 한국의 남남 갈등은 민단계의 동포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라는 전망 속에서 남북한 통일을 생각할 때, 재일동포사회에 정치적 이념과 특정 정책에 근거한 배타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자유, 민주, 인권, 복지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재일동포의 민족적 통합이 선행되고, 이들의 역할에 의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 수반되는 통일과정 속에서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사회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공동 대응, 민족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행사, 체육경기교류, 경제적인 공동사업 등이 민족통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재일동포의 자율적인 민족통합이 진전될 때, 남북한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오히려 남북한 정부의 교류협력이 재일동포의 통합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의 '남북공동성명' 직후, 민단과 조총련은 본부 차원의 협력기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교류행사를 전개하였다. 당시의 통계를 보면,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과거 10년간에 버금가는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 남북한의 정책이 바뀌고 대결국면이 전개되면서 이와 함께 재일동포 양 단체의 교류협력도 단절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본국정부의 통일정책이 재외동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도 시

사한다. 역으로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재일동포 조직 및 네트워크의 자율성 및 가교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리킨다.

재일동포 간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정착되면, 다양한 형태의 중재 역할이 가능하다. 가령 남북한 정부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남북한의 종교인들이 수행해왔던 것처럼, 새롭게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남북한에서 전개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교류를 주도적으로 매개하고, 과거에 민단계 경제인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조총련계 경제인들과 공동으로 북한에 중요한 투자자로 참가하여 북한의 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에 대하여 남북한의 공동대응을 촉진하는 매개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와 연결되어 한민족공동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될 때, 그것은 남북한 통일과정을 추진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일본사회 속의 한민족 통합과 남북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하여 일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다. 이 경우, 한민족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본사회의 다원화와 일본국민과의 공생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이 중시하는 가치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및 영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국가이념으로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 일본은 국가이념상의 근본적인 차이에 더하여, 현안 문제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안보, 인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이러한 불안을 불식하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일본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긍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정책

적 지지 속에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적 통합을 실현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일동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재러동포의 역할

러시아는 동북아 및 한반도에 있어서 경제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푸틴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추진한 APEC 회의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것은 러시아의 극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이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이라는 러시아의 숙원과 관련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러시아는 다른 주변국에 비해 매우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러 삼각경협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북핵 프로그램의 진행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한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TSR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통일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적극적인 통일외교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북핵문제 해법 도출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고 다양한 차원에서 한·러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러 외교협력관계를 확대하고 공공외교 역량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체제의 등장을 한국 통일외교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인들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한반도 인식 및 정책기조에 기반, 다양한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온전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아울러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의 번영과 궁극적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재외동포들 역시 정당한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재외동포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 정책이나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 기반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재러동포들이 통일외교의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재러동포들은 구 소련 시기에서부터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등으로 러시아 사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왔으며, 높은 교육열 등으로 사회 계층적 위상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재러동포들은 러시아 내 민간통일외교의 조력자이자, 공공외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러동포들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재러동포들은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한민족으로서 러시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재러동포사회와 연계의 확대는 한·러 간의 긴밀한 가교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 발전될 수 있다. 특히 극동지역은 재러동포 이주사에 있어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와 아울러, 소련 체제 붕괴 후 상당수의 인구가 다시 밀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극동지역의 재러동포들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숙원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과 관련된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극동러시아는 역사적 차원에서 재러동포의 중심지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극동러시아는 통일한국의 달성 및 이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있어 극동러시아는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중국의 성장과 한·중·일 경제권의 부상에 따라 동 지역의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현안에 해당하며,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발전을 위해 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푸틴의 집권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경우에 따라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 창구가 될 수 있으며, 숙원사업인 시베리아-연해주 개발 사업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 체제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한국이 '에너지의 섬'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북한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 한·러 에너지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화해와 상생공영에 기여함으로써 통일과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러 에너지 협력 사업에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극동지역 재러동포의 노동력 및 네트워크, 유무형의 노하우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량안보 차원의 중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해주 지역은 산지가 적고, 농업이 가능한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동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재러동포들은 이미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농업의 역사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개혁의 경험 및 자본과 기술의 투자,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연해주지역 농업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달성 및 상생공영에 기여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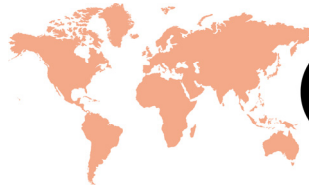
씨 동지역 발전 및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재러동포의 현지 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⁵⁾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난민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연해주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사시 동지역에 유입될 북한 주민에 대한 조치와 아울러 연해주 개발과 관련된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와 동지역에 대한 영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이주민의 과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정부 및 연해주 지방정부의 고민을 덜어 주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재러동포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려인들은 ‘고려인 문화의 날’과 같은 민족적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중국 및 동북아 주요국의 동포 및 남북한 관계자들도 참여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행사는 한민족의 공동성과 통합을 확인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상생공영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재러동포사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북한의 평화 및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러동포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시장화라는 복합적 변동의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민족관계 속에서 새로운 현실적응의 과제에 직면해있다. 재러동포들은 새롭게 변화된 법적,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재러동포들은 새로운 상황적 변화에 대처하여 자립적 기반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국인 한반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재러동포 정책의 모색과 아울러 이들을 통일한국의 달성과정에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재외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모색과 아울러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 이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남북한 양자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또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1)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05);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제22권 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아의 분단-통일의식(서울: 선인, 2012)』; 최진욱,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 (Online Series Co 07-26, 2007.11.26) 참조.
- 2)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 3) 김정일, “한민족 통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2011 통일문제 민주 세미나” 발표문, 2011.10.29).
- 4) 조한범, “푸틴체제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Online Series Co 12-10, 2012.3.8), p. 3.
- 5) 배수한,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방안,” 『동북아연구』, 제9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111.

VI

결론





21세기 국제질서는 근본적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 변화의 핵심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이 점차 쇠퇴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중국이 채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미·일 중심의 해양세력과 중·러의 대륙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각축장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한반도 분할안은 300년 후인 19세기 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보다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당시 분할론은 대부분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장악하고자 한 일본의 의지와 능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였고, 결국 한반도는 일본의 차지가 되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반도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되었으며,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결국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그 이유는 한반도는 대륙세력 또는 해양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이자,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열강들은 자기 자신이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반도를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세력균형 논리에 크게 좌우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한반도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비전과 국가전략에 기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에 일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는 과거와 같은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능동적 사고의 정립이 요구된다. 우리 스스로의 지정학, 나아가 지경학, 지문화학적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해방 당시 국토가 분단될 위기에 처하자 일반국민들은 ‘미국사람 믿지 말고 소련사람에 속지 말라. 일본사람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조언을 후세에 남겼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중국도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이며, 러시아 역시 소련연방 시절을 회상하며, ‘강한 러시아’로 재기를 모색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어떠한 국가목표 아래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21세기 민족생존 및 번영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사고가 없을 경우, 오히려 또 다른 국론분열과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대외전략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내부 문제이나, 분단의 원인에서 보듯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국제문제이므로 이들의 도움과 우호적 여건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국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두고 한반도 주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전 세계적 차원의 패권유지, 대중 봉쇄 정책, 미·일 경제 및 안보협력체제의 유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이익은 세계대국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주변정세의 안정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전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 소수민족의 분리·분열 방지 등이다. 반면 일본은 미·일 동맹에 의지하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정상국가로의 회귀, 동아시아 경제주도권 확보,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등을 주요 국가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의 부활, 시베리아 경제개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견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등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통일의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은 민족적 숙원으로 남은 채 분단은 장기화로 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활기찬 아침의 나라’로 변모하였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대 초 80달러에서 2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한국의 GDP는 무려 두 배나 증가하였고, 마침내 1조 달러 규모의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증가하는 경제력을 보여주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의 많

은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소비와 생산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2010년 APEC 회원국들은 전 세계 GDP의 56%, 교역량의 46%를 차지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미 국무부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세계정치의 핵심동력'으로 규정하였다. 20세기가 대서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결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복합적 국제질서의 출현이다. 네트워크 시대의 핵심은 사람이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화교,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탈리아의 해외교포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재외동포를 보유한 국가로 전 세계 72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그 중 절대 다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의 거주국가와 모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4위 인구인 8,000만 독일보다 큰 나라가 된다. 통일비용만 우려하고 분단을 지속하려 할 때가 아니다. 통일편익도 물론 생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생각할 때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에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미·중·일·러 주변 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 남과 북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그 때가 왔다. 통일연구원은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함을 직시하고,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과 근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담은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많은 재외동포들이 본서를 읽고 조국의 평화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염원한다.



단행본

-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서울: 선인, 2012.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김구. 『나의 소원(외)』. 서울: 범우사, 2009.
- 김민웅. 『패권시대의 논리』.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6.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정현. 『동아시아의 역사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김한규. 『한중외교사』. 서울: 아르케, 1999.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2004.
- 로버트 J. 아트, 김동신·이석중 공역. 『미국의 대전략』. 광주: 나남출판, 2005.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미하일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시사영어사, 1988.
- 박영호·조한범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박중수.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서울: 오름, 2011.
-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05.
-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 아미노 요시히코. 『일본이란 무엇인가』. 광주: 창작과비평사, 2000.
- 안중근, 국가보훈처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서울: 국가보훈처, 1996.
-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서울: 제이앤씨, 2011.
- 우정은. 『코리아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광주: 창작과비평사, 2003.
- 유용태.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서울: 역사교육연구회, 2007.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 이문용. 『세계의 한민족 일본』. 서울: 통일부, 1996.
- 이승현·김갑식.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전해중.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재외동포재단. 『2011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11.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최진욱 외.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7.

한국관광공사. 『2010 한국관광통계』. 서울: 한국관광공사, 2011.

한국무역협회. 『2011 세계속의 대한민국』. 서울: 국제무역연구원, 2011.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1.

Archibugi, Daniele and David Held. *Cosmopolitan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5.

Brzezinski, Zbigniew. *The Great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Noberto, Bobbio. *Democracy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Poly Press, 1995.

U.S. Congress, House and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Korean Ai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Vogel, Ezra F. *The Four Little Drag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ゴ-ドン, M. 바-가, 佐藤誠三郎 編. 『近代日本の對外態度』.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4.

ロ-ジャ-, ジングマン, 佐藤誠三郎 編. 『日本の地方政府』.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3.

中村尚美. 『明治國家の形成とアジア』. 東京: 龍溪書舍, 1991.

藤村道生. 『日清戰爭 前後のアジア政策』. 東京: 岩波書店, 1995.

坂井秀夫. 『近代イギリス政治外交史I』. 東京: 創文社, 1974.

文政仁. 『中国的国家安全论-与中国知识精英的深层对话』.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12.

논문

강광식. “한민족공동체와 남북통일 문제.” 『재외한인연구』. 통권 13호 (재외한인학회), 2002.

- 강정인.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기광서. “구소련 한인의 민족 정체성 상실과 회복: 역사와 현재.” 『재외한인연구』. 통권 제10호 (재외한인학회), 2001.
- 김명섭.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조화방안.”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5.
- 김정일. “한민족 통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 『2011 통일문제 민주 세미나』.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2011.10.29.
- 박경환. “디아스포라라는 거울, 민족이라는 담론, 그리고 초국적주의의 부상.” 『문화 역사 지리』. 제18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 박명규. “다문화주의와 남북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 『국제이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09.
- 배수한. “통일한국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의 지원 및 활용방안.” 『동북아연구』. 제9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손기섭. “일본자민당의 전후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3호.
-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제22권 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 유용태.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논리와 그 연원: 소통을 위한 성찰.”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아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유호근. “스포츠 교류와 국가이미지.” 『세계화시대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해외문화교류』. 국제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2011.11.25.
- 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제37집 (한국철학회), 1992.
- 정영훈.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제와 민족정체성 문제.” 『재외한인연구』. 통권 제13호 (재외한인학회), 2002.
- 주봉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4호 통권 41집 (한국동북아학회), 2006.

- 진행남.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와 한국의 문화교류 전략.” 『세계화시대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해외문화교류』. 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2011.
- 최태욱. “보편주의 구상으로서의 동북아시대와 지역협력 방안.”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대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7.
- 허문영.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방안.” 『대북·통일정책의 국민 합의 형성방안』. 동북아시대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6.8.29.
- Armacost, Michael H. and Kenneth B. Pyle. “Japan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Challenges for U.S. Policy Coordination,” *NBR Analysis*. Vol. 10, No. 1, 1999.
- Cha, Victor.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2010.
- _____. “The End of History: ‘Neojuche Revivalism’ and Korean Unification,” *Orbis*. Vol. 55, No. 2, 2011.
- Ji, You.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No. 4, Issue. 5, 2004.
- Kim, Heu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2010.
-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Part I).” *The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 Lind, Jennifer. “Preparing for North Korean Collapse.” *ISSUE BRIEF*. No. 17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1.
- McDevitt, Michael. “Security Challenge and Options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3, No. 1, 2001.
- Niksch, Larry A. “The Obama Administration’s Korea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No. 2, 2011.
- Nye, Joseph S. Jr. “Redefining National Interests,” *Foreign Affairs*. Vol. 78, No.4, 1999.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 Report*, No. 179, Nov 2, 2009.
- Pritchardetal, Charles L.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Washington D.C.: Councilon Foreign Relations), 2010.
- Przystup, James J. "North Korea: Challenges, Interests, and Policy." *Strategic Forum*, No. 250, 2009.
- Rice, Condolee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2000.
- Snyder, Scott. "Value and Significance of Korean Reunification Within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SERI Quarterly*. Vol. 4, No. 1, 2011.
- Wolk, Herman S. "Sixty-Five Years on: Plans and Strategy to Defeat Japan in World War II." *Air Power History*. Vol. 57, No. 3, 2010.
- Zhebin, A. "Russia and Korean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1995.
- 井口和起. "大日本帝國の形成." 『日清.日露戰爭』. (吉川弘文館), 1994.
- 郭金鹏. "浅析朝核危机中的中国外交政策的转变." 『北京机械工业学院学报』. 第23卷 第2期, 2008.
- 门洪华. "中国东亚战略的展开." 『当代亚太』. 第1期, 2009.
- 谭笑. "地缘政治角度看冷战后中韩关系." 『当代韩国』. 夏季号, 2009.
- 方长平. "东亚一体化与中国的东亚战略." 『现代国际关系』. 第2期, 2011.
- 郑继永. "后朝核时代中国的朝鲜半岛政策选择." 『韩国研究論叢』. 第20辑, 2010.
- 高子川. "中国周边安全环境基本态势解析." 『当代亚太』. 第1期, 2004.
- 孟庆义. "朝鲜半岛统一问题研究的新视角." 『东南大学学报』. 第12卷 第5期, 2010.

기타자료

- 『경향신문』.
 『동북아신문』.
 『매경이코노미』.

『서울신문』.
『시사저널』.
『연합뉴스』.
『재외동포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多维新闻』.
『解放日報』
China Daily.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여성가족부·국가브랜드위원회·동아일보.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10.
조한범. “푸틴체제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Online Series Co 12-10,
2012.3.8.
최진옥.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 Online Series Co 07-26, 2007.11.2.
Clinton, Hillary. “We Are Ready to Listen to Asia.” Speech at the Asia Society, February
13, 2009.
<<http://asiasociety.org/policy/strategic-challenges/us-asia/hillary-clinton-we-are-ready-listen-asia>>.
Glaser, Bonnie, Scott Snyder, and John S. Park. “Chinese Debate on North Korea.”
PacNet Newsletter. Washington D.C.: CSIS. February 8, 2008.
MEMO RAN. “Strategic Global Forecast 2030.” Moscow: MEMO RAN, 2011.
Kellerhals, Merle David Jr. “Clinton Outlines U.S. Policy in East Asia, Pacific.” IIP
Digital. November 10, 2001.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article/2011/11/20111110172816elre-m0.9942438.html>>.

- Newton, Alstair and Young Sun Kwon. "North Korea: Through A Glass Darkly." Nomura Equity Research. Hongkong: Nomura International Plc, 2010. <http://www.nkeconwatch.com/nk-uploads/north_korea_through_a_glass_darkly-1.pdf>.
- Nye, Joseph S. "Obama's Pacific Pivot." Project Syndicate. December 6, 201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bama-s-pacific-pivot>>.
- Obama, Barack. "Remarks by the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Remark at Prague, Czech Republic.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Barack-Obama-In-Prague-As-Delivered>.
- _____. "Remarks by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Remark at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y 21,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On-National-Security-5-21-09>.
- Steinberg, James and Michael D. Swaine.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S. Policy toward Asia." Speech at Carnegie Endowment. October 13, 2010.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
-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merica's National Interests." Washington D.C.: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amernatinter.pdf>>.
- The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비밀해제문서), 1948~1950.
-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сов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РНК АТССБ),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2010).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국방부, <www.mnd.go.kr>.

나라지표, <www.index.go.kr>.

미국독립선언서, <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1776-2.htm>.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일본무역진흥원, <www.jetro.go.jp>.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